

#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KIEP 중장기통상전략연구 07-03

#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 일본 |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

## 서 언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우선협상 대상국이었으나 한·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상실하였습니다. 일본 또한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상대상국이었으나 현재는 미국, EU, 중국 등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취급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은 한·일 FTA 협상이 한창 논의되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시기와 명분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한국의 대일본 중장기 통상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포괄적이고 참신합니다. 일본의 양자간 및 다자간 통상정책에 관한 기존의 연구가 개괄적으로 진행된 반면,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정책의 특징과 변화는 물론 미국, EU 및 중국의 대일본 통상정책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어 조명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 및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연구는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일본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관계설정을 토대로 대일 통상정책의 전략적인 방향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이 다년차 과제로 진행 중인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06년에는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라는 보고서가 출간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국별·지역별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에 대한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을 다루는 총괄보고서와 함께 국별, 지역별로 출간되는 12개의 보고서 가운데 일본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본원에서 정성춘 일본팀장과 이형근·김은지 전문연구원이 작

성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담당한 연구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많은 건설적인 의견을 주신 본원의 김홍중 연구위원 및 남호선 연구원과 산업자원부 정재환 사무관, 인천대 정훈 교수 및 익명의 평가자들에게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 연구보고서는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일본이 갖는 전략적 가치는 기술혁신능력, 환경·에너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파트너라는 세 가지 분야로 집약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안된 여러 가지 정책적 제안이 향후 정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영되고, 또한 정부의 대일본 통상정책을 평가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든 하나의 기준으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7년 12월  
원장 이 경 태

.....

## 국문요약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대일 통상전략의 도출을 핵심적인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우선협상 대상국이었으나 한·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일본 또한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상대상국이었으나 현재는 미국, EU, 중국 등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취급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은 한·일 FTA 협상이 한창 논의되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시기와 명분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일본경제의 현황 및 일본정부의 통상정책의 변천에 대해 고찰하였다. 일본경제는 2002년도 이후 플러스 성장에 진입한 이래, 현재 전후 최장기간의 확대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수출입 규모는 2002년 이후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와의 수출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통상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자간 중시의 통상정책에서 FTA 중심의 양자간 협상을 중시하는 중층적 통상정책으로 변화되었다. 통상정책의 기본방향도 ‘대미관계 중시 노선’에서 ‘동아시아 연대 중시 노선’으로 전환되었다.

제3장에서는 한·일 경제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하였다. 양국의 경제관계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소재·부품, 생산설비 등에 있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일본기업에 있어서 한국은 중요한 시장이면서 투자대상국이다. 최근 일본의 대한투자는 액정,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산업부문에서의 투자가 활발하며, 최근에는 양국간 산업협력의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은 무역적자문제, 투자확대문제, 한·일 FTA 재개와 관련된 문제, 산업기술협력 증진

을 위한 방안 모색 등 다양한 현안 이슈를 안고 있다.

제4장에서는 미국, EU, 중국의 대일통상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들 국가들의 대일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일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과거 미국은 일본과 극심한 통상마찰을 겪었으며, 구체적으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수출자율규제(VER) 등,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시방개방 및 구조개혁 요구 등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WTO의 성립, 중국의 대두 등으로 미·일간 통상마찰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2007년 들어 미국과 일본의 정부계 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에서 양국간 FTA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미국과 비교해 EU의 일본과의 경제관계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EU는 일본과의 통상마찰에 있어서 1950~80년대 차별적인 수입제한조치, 1990년대 ‘미·일 구조협약’ 성과의 유럽 적용, 규제완화 요청 등으로 대응해왔다. 한편 2006년 10월 EU집행위원회는 WTO 중시에서 FTA의 적극 추진이라는 과거 통상전략의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통상전략(*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을 발표한바, 향후 이는 양자간에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일 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 눈부신 확대기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의 긴밀화는 양국간의 민감한 대립부분을 자극하기보다는 협조 가능한 사안에 치중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은 대일수출과 투자확대 일본도에서 기술협력 및 에너지·환경 협력의 증대, 중국기업의 대일 투자환경 정비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기술혁신능력, 환경·에너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파트너라는 세 가지 분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역사적, 경제적 피해의식 등을 버려야 하며 나아가 제3국에서의 한·일 협력, 양국기업의 전략적 제휴 강화, 인적교류 강

화 등이 주요 협력과제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장에서는 산업 및 기술, 교역, 투자, 인적교류, 환경·에너지라는 5대 분야에서의 부문별 통상전략도 제시하였다.

이상의 고찰로부터 우리가 얻은 결론은 명확하다. 즉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대일 통상전략은 최근의 경제환경 변화나 선진국들의 대일 통상전략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일본 중장기 통상전략은 일본의 풍부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일본 협력분야를 설정해야 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특히 향후 기술, 환경·에너지, 경제통합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대일통상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분야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따라서 상호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먼저 우리 기업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기술협력이 매우 필요한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 조성은 양국간의 제도적 조화와 시장통합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술능력 향상이 매우 필요한 분야는 환경·에너지 분야이다. 현재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이 틀림없다.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성장의 제약조건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돌파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가능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결국 우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환경·에너지 제약의 극복에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보유한 제도와 기술을 어떻게 발굴·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일 양국간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며, 나아가 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차 례

서 언 .....	5
국문요약 .....	7
제1장 서 론 .....	17
1. 연구목적 .....	19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	21
제2장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및 통상전략 .....	25
1.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	27
가. 일본경제 현황 및 전망 .....	27
나. 대외경제관계 현황 .....	30
다. FTA 추진 현황 및 특징 .....	42
2. 일본 통상전략의 변화와 특징 .....	46
가. 일본 통상전략의 변화 .....	46
나.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	48
3. 소결 .....	50
제3장 한·일 경제관계 현황과 주요 통상현안 .....	53
1. 한·일 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	55
가. 무역 현황과 특징 .....	55
나. 투자 현황과 특징 .....	58

2. 양국간 통상현안 .....	62
가. 교착상황의 FTA 협상 .....	62
나.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 .....	63
다. 낮은 수준의 투자 .....	65
라. 산업·기술 협력 부문 .....	66
3. 소결 .....	66

**제4장 주요국의 대일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 69

1.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	71
가. 개관 .....	71
나. 최근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현황 .....	72
다. 양자간 통상 현안 .....	79
라. 미·일 FTA 논의 .....	86
마.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	89
2. EU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	91
가. 개관 .....	91
나. 최근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현황 .....	92
다. 양자간 통상 현안 .....	97
라. 양자간 협력체제의 틀 .....	100
마. EU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	102
3.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	103
가. 개관 .....	103
나. 최근 양자간 무역·투자 현황 및 특징 .....	105
다. 중·일 통상 현안 .....	112
라.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	114

4. 소결 .....	116
<b>제5장 우리나라의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 .....</b>	<b>119</b>
1. 기본방향 .....	121
가. 일본의 전략적 가치 .....	121
나. 대일 협력관계의 재구축 .....	124
2. 분야별 통상전략 .....	127
가. 시장 확대 .....	127
나. 투자 확대 .....	129
다. 기업간 전략적 제휴 확대 .....	133
라. 환경·에너지 협력 확대 .....	135
마. 인적교류 확대 .....	139
<b>제6장 요약 및 결론 .....</b>	<b>143</b>
<b>참고문헌 .....</b>	<b>149</b>
<b>Executive Summary .....</b>	<b>152</b>



## 표 차례

표 2-1.	2007년도 일본경제 전망	29
표 2-2.	신경제성장전략의 장기전망(표준 Case)	30
표 2-3.	일본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31
표 2-4.	일본의 품목별 수출 현황	34
표 2-5.	일본의 품목별 수입 현황	35
표 2-6.	일본의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의 추이	37
표 2-7.	일본의 국별·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40
표 2-8.	일본의 EPA 체결 및 추진 현황(2007년 7월 현재)	43
표 3-1.	한국의 10대 대일 수출입 품목	57
표 3-2.	일본의 대한국 업종별 직접투자 추이	59
표 3-3.	한국의 업종별 대일 투자 현황	61
표 4-1.	미국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73
표 4-2.	미국의 대일수출 상위 10대 품목 추이(2002~06년)	74
표 4-3.	미국의 대일수입 상위 10대 품목 추이(2002~06년)	76
표 4-4.	연도별 미·일 간 직접투자 현황	77
표 4-5.	미·일 간 업종별 직접투자 현황(2006년)	78
표 4-6.	미·일 간 통상마찰의 변천	81
표 4-7.	WTO를 통한 미·일 간 분쟁조정 사례	84
표 4-8.	미·일 간 제도적 경제협력 현황	85
표 4-9.	미·일 양국 보고서에서의 미·일 FTA 관련 주요 내용	88
표 4-10.	미국의 대일 통상마찰의 특징	90
표 4-11.	EU 25의 대세계 무역 현황	93

표 4-12. EU 25의 대일본 무역 현황	93
표 4-13. 일본의 대EU25 무역 현황	94
표 4-14. EU의 대내외직접투자 현황	96
표 4-15. 일본·EU 간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96
표 4-16. EU·일본 간 2대 협정	101
표 4-17. EU의 대일 통상마찰 대응	102
표 4-18. 일본의 대중무역 추이	105
표 4-19. 일본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비중 추이	106
표 4-20. 중국기업의 업종별 대일투자	108
표 4-21. 중국기업의 일본기업 M&A 사례	109
표 4-22. 일본기업의 업종별 대중투자	111
표 4-23. 미국·EU·중국의 대일 통상마찰의 특징	117
표 5-1. 한·일 산업별 세계시장점유율 변화	129
표 5-2. 최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신고 기준)	131
표 5-3. 일본의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	136
표 5-4. 중·일간 환경협력의 주요내용(2007년 4월의 양국 공동성명)	137
표 5-5. 중·일간 에너지 협력의 주요내용(2007년 4월의 양국 공동성명)	138

.....

## 그림 차례

그림 2-1. 연도별 실질 GDP 성장률의 추이 .....	27
그림 2-2. 일본의 경기동향지수 추이 .....	28
그림 2-3. 일본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	31
그림 2-4. 일본의 지역별 수출 비중의 추이 .....	32
그림 2-5. 일본의 지역별 수입 비중의 추이 .....	33
그림 2-6.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	36
그림 2-7. 지역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비중 .....	38
그림 2-8.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잔액의 추이 .....	39
그림 2-9. FDI 저해요인의 추이 및 비교 .....	41
그림 3-1. 한·일 양국간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	56
그림 3-2. 한·일 양국간 수출입 비중의 추이 .....	56
그림 3-3. 일본의 대한 투자 금액 및 비중의 추이 .....	58
그림 4-1. 미국의 대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	81
그림 4-2. EU 25의 대일본 품목별 무역 현황(2006년) .....	95
그림 4-3. EU 25의 대일 내외직접투자 현황 .....	95
그림 4-4. EU의 대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	98
그림 4-5. 일본의 대중 품목별 수출입 비중(2006년 기준) .....	107
그림 4-6. 중국기업의 대일투자 추이 .....	108
그림 4-7. 일본기업의 대중투자 추이 .....	110
그림 5-1. 한·일 기업 전략적 제휴 사례 .....	134
그림 5-2. 일본의 인구구성(2006년 10월 현재) .....	140

# 제1장 서론



# 01

## 서론

### 1. 연구목적

6차 협상까지 진행되었던 한·일 FTA 협상이 지난 2004년 말 중단되었다. 협상이 중단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향후 재협상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재협상이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인지, 재협상에서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지 등등, 한·일 양국 간의 FTA 협상은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한·일 FTA 협상의 경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동시에 다루기가 매우 어려운 대외경제문제이다.

일본은 1990년대 말까지 사실상 FTA 협상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 일본이 1998년을 기점으로 FTA 협상을 통한 지역경제통합에 점차 무게를 두는 통상정책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다. WTO 협상이 지지부진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NAFTA나 EU를 중심으로 지역경제통합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는 점이 일본의 통상정책 전환의 주요한 이유이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정부가 최초의 FTA 협상 상대국가로 지목한 것은 바로 우리나라였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래도 일본경제와 가장 비슷한 발전단계에 있는 아시아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 양국이 상대국에게 두는 대외 경제적 가치는 매우 크다. 경제 환경이 변화되면서 상대국의 대외 경제적 가치도 그 내용과 정도에 있어

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한·일 양국이 상대국에게 가지는 가치는 아직도 대단히 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일본이 가지고 있는 대외 경제적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일본이 보유한 경제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일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필자는 먼저 일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및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그리고 일본경제의 구조변화 등으로 인하여 한·일 양국의 경제관계나 우리나라 내부의 경제구조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일본의 경제적 가치를 시장과 자본에 두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일본으로의 수출을 증대시키고 일본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는 것을 대일 경제관계에서 가장 중요시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 상세히 고찰한 바와 같이 시장과 자본이라는 일본의 경제적 가치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이 증가하면서 대일 수출의 비중은 감소되어 왔고, 미국 및 유럽의 대한투자가 증가하면서 일본의 대한투자의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감소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일본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물론 대일 수출증대와 일본기업의 자본유치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대일관계에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힘을 쏟아야 할 전략적 분야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본 보고서의 연구목적은 바로 대일경제관계에서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어떠한 전략을 구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물론 한 국가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답을 구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고는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둔 대일관계를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론적으로나마 그 해답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주요내용

일본의 대내외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로는 日本通商産業省(1986, 1998) 및 경제산업성 산하의 日本通商産業調査會의 보고서가 존재하며, 또한 小宮(1984), 伊藤(1988), 武村(1997), 隅谷(1998) 등은 산업정책과 밀접히 연관된 고도성장기 이후 일본의 통상정책을 개관하고 있다. Iwata(2003)와 Aoki(2002)는 WTO 체제하에서의 일본의 통상정책의 특징을 고찰하고 있다. 또한 WTO가 매년 발간하는 *Trade Policy Review*는 일본정부가 제출하는 통상정책에 관한 연간 보고서(Report by the Government)와 WTO에서 독자적으로 작성하는 연간 보고서(Report by the Secretariat)로 나누어 일본의 통상정책을 체제, 목적, 수단, 부문별로 망라하여 파악하고 있어 일본의 통상정책에 대한 이해에 매우 적절한 연구이다.

한편 일본의 양자간 및 다자간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로서는 이홍배 외(2003), Oyane Satoshi(2002), Nakato Sachio(2003), Ito Motoshige(2003), Tyson(1993) 등이 있으며, 이들 선행연구는 일본의 양자간 통상현안(FTA 및 무역마찰 등) 논의 및 문제점 해소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의 FTA 전략에 관한 연구는 일본 내에서도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浦田 秀次郎 編(2002), 日本經濟研究センター(2002), 宗像直子(2001), 日本經濟團體聯合會(1999)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일본의 시각에서 일본의 FTA 전략을 논한 것으로서, 일본의 FTA 정책에만 국한해 일본 시각을 이해하는 데에는 참고가 된다. 그러나 이 연구들도 일본의 입장에서 각 지역의 FTA 전략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막상 우리가 기대하는 일본의 지역별 FTA 전략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개괄적으로 일본의 지역별 통상정책을 다루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일본의 통상정책의 특징과 변화는 물론 나아가 미국, EU, 중국의 대일본 통상정책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조명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 및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는 점이 특징

이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는 향후 10년 후, 즉 중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있어 일본은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명확한 관계설정을 토대로, 전략적인 대일 통상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전반적인 통상정책의 특징과 함께 주요 지역 · 국가의 대일본 통상정책을 고찰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그 특성상 정성적인 접근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기본적으로 문헌연구 중심의 연구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통상정책의 기초 변화와 전개과정 등에 대해서는 일본 통상정책 수립의 핵심부서인 경제산업성, 외무성, 재무성 등의 전 · 현직 관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일본 상공회의소 등 경제계 주요 인사, 연구자 등과의 인터뷰와 자료 수집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일본경제의 현황 및 일본정부의 통상정책의 변천에 대해 고찰한다. 일본경제는 2002년도 이후 플러스 성장에 진입한 이래, 현재 전후 최장기간의 확대국면을 지속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수출입 규모는 2002년 이후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와의 수출입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본의 통상정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자간 중시의 통상정책에서 FTA 중심의 양자간 협상을 중시하는 중층적 통상정책으로 변화되었다. 통상정책의 기본 방향도 ‘대미관계 중시 노선’에서 ‘동아시아 연대 중시 노선’으로 전환되었다. 이상과 같이 본 장에서는 일본경제 및 통상정책의 변천에 대해 정리한다.

제3장에서는 한 · 일 경제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한다. 한 · 일 경제관계는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은 소재 · 부품, 생산설비 등에 있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일본 기업에 있어서 한국은 중요한 시장이면서 투자대상국이다. 최근 일본의 대한투자는 액정,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주력 산업부문에서의 투자가 활발하며, 최근에는 양국간 산업협력의 움직임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양국간에는 무역적자문제, 투자확대문제, 한 · 일 FTA 재개와 관련된 문제, 산업기술협력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 등 다양한 현안 이슈를 안고 있다. 본 장에서는 한 · 일 경제관

계의 현황을 무역, 투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정리하고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제4장에서는 미국, EU, 중국의 대일통상정책에 대해 고찰한다. 이들 국가들의 대일정책을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일정책에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본 장의 목적이다. 과거 미국은 일본과 극심한 통상마찰을 겪었으며, 구체적으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수출자율규제(VER) 등,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시방개방 및 구조개혁 요구 등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WTO의 성립, 중국의 대두 등으로 미·일간 통상마찰은 현저히 줄어들었다. 2007년 들어 미국과 일본의 정부계 기관에서 발간된 보고서에서 양국간 FTA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되고 있는바, 향후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미국과 비교해 EU의 일본과의 경제관계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지만, EU는 일본과의 통상마찰에 있어서 1950~80년대 차별적인 수입제한조치, 1990년대 ‘미·일 구조협약’ 성과의 유럽 적용, 규제완화 요청 등으로 대응해왔다. 한편 2006년 10월 EU 집행위원회는 WTO 중시에서 FTA의 적극 추진이라는 과거 통상전략의 전환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통상전략(*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을 발표한바, 향후 이는 양자간에 기회와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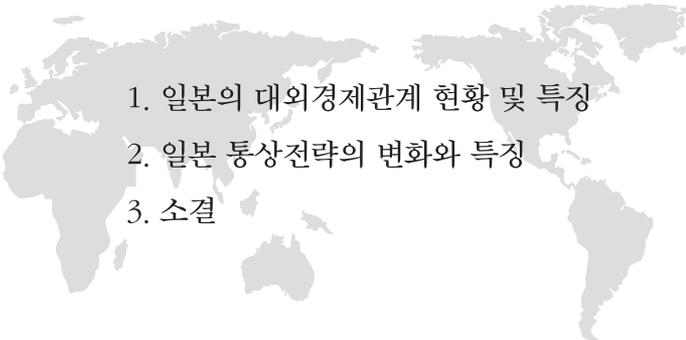
중·일 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 눈부신 확대기조가 견지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협력의 긴밀화는 양국간의 민감한 대립부분을 자극하기보다는 협조 가능한 사안에 치중하도록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은 대일수출과 투자확대 일변도에서 기술협력 및 에너지·환경 협력의 증대, 중국기업의 대일 투자환경 정비 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주요 국가들의 대일 통상정책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시사점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의 경제여건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일본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는 기술혁신능력, 환경·에너지,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파트너라는 세 가지 분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역사적, 경제적 피해의식 등을 버려야 하며 나아가 제3국에서의 한·일 협력, 양국기업의 전략적 제휴 강화, 인적교류 강화 등이 주요 협력과제임을 제시한다. 그리고 본 장에서는 산업 및 기술, 교역, 투자, 인적교류, 환경·에너지라는 5대 분야에서의 부문별 통상전략도 제시한다.

## 제2장

#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및 통상전략



1.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2. 일본 통상전략의 변화와 특징
3. 소결

##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및 통상전략

### 1.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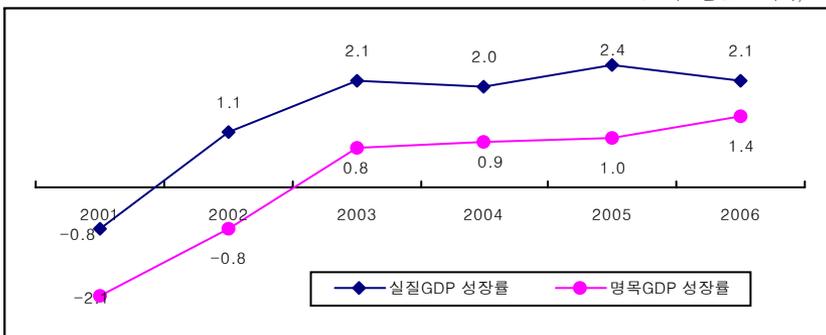
#### 가. 일본경제 현황 및 전망

##### 1) 일본경제 현황

일본경제는 GDP 성장률 실질 기준으로 2002년도에 플러스 성장으로 진입한 이래, 4년 연속 2%대의 성장세를 견지하여 2006년도에 2.1%를 시현하였다. 또한 경기 실감도를 반영하는 명목성장률 기준으로도 2003년도 플러스 성장으로 진입한 이래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며 2006년도에 1.4%를 기록하였다.

■ 그림 2-1. 연도별 실질 GDP 성장률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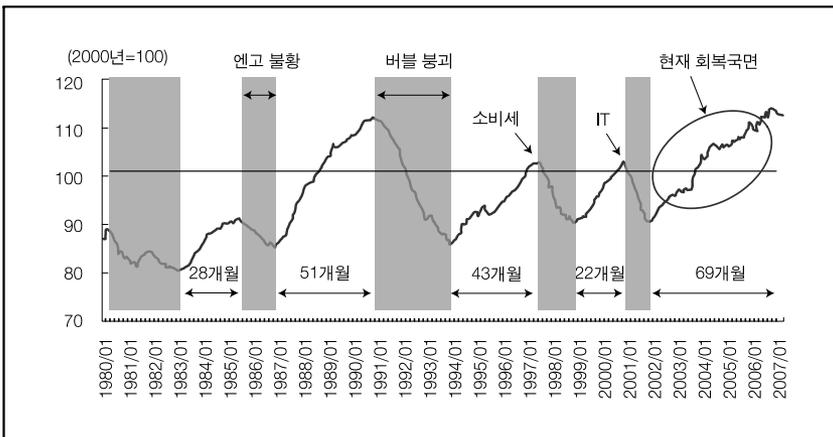
(단위: 전년도 대비, %)



자료: 日本 内閣府(2007. 6. 11).

이렇듯 1990년대 버블 붕괴에 따른 자산가격 하락으로 장기불황에 허덕여 오던 일본경제가 2002년 이후 다시 회복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회복기조는 2002년 1월을 저점으로 2007년 10월 현재까지 69개월 동안 확장국면이 견지되고 있다. 이는 1960년대 후반의 고도성장기(1965년 10월~1970년 7월, 경기확장기간 57개월)를 상회하는 전후 최장의 확장 국면에 해당된다. 1990년대 일본경제는 두 차례의 단기적인 회복 국면을 시현한 바 있다. 첫째는 1995년 후반부터 1997년 초반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는 일본정부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은 일시적인 경기회복이었다. 둘째가 2000년 후반부터 2001년 초반까지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세계적인 IT 붐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미국의 IT 버블 붕괴의 여파로 성장세가 급락하였다. 과거의 경기회복 국면은 2년 내지 3년간의 단기적인 회복국면으로 단발성의 반짝 경기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최근의 경기회복은 1990년대 2차례의 단기적인 경기회복국면과는 질적으로 다른 명확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재정적자를 동반하는 경기부양책에 의한 일시적인 경기회복이 아니라, 수출과 더불어 설비투자 및 소비 등 민간수요가 경제성장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차별

■ 그림 2-2. 일본의 경기동향지수 추이 ■



자료: 日本 内閣府(<http://www.esri.cao.go.jp/stat/di/di.html>).

성을 지니고 있다.

## 2) 향후 경기 전망

2007년도 일본경제는 ‘상반기 하락, 하반기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에 수출과 설비투자의 주도하에 성장세가 확대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이 계속되어 전후 최장의 경기회복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전망은 주로 신흥국·중동지역에서의 수출 호조 지속, IT 부문 이외 분야에서의 낮은 수준의 재고율, 기업부문에서의 자금 여유 등의 요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미국경기의 대폭적인 감속, IT 부문의 급속한 생산조정, 석유가격 상승, 장기금리 상승 등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이들 우려 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2007년도 일본경제의 성장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 표 2-1. 2007년도 일본경제 전망 ▮

기 관	내각부	14개 민간연구소 평균	경제기획협회
전망치	2.0%	2.1%	2.15%
(발표시기)	(2007. 1. 25)	(2007. 8)	(2007. 9. 6)

주: 2007년도는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

자료: 日本 内閣部, 日本 經濟 研究 センター, 經濟 企劃 協會.

일본 내각부 산하의 경제기획협회가 9월 6일 발표한 「ESP(Economy Society Policy) 예측조사」<sup>1)</sup>에 따르면, 2007년도 일본경제는 전체적으로 2.15% 정도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상반기 미국경제의 감속성장세에 따라 수출성장세가 둔화되었지만, 하반기 이후 미국경제가 회복되면서 다시 확대되어 2%대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물가

1) 매월 발표되는 「ESP 예측조사」는 35명의 이코노미스트(연구기관 포함)를 대상으로 주요 경제지표의 예측치를 집계하여 평균한 수치이며, 이번 조사는 8월 27일~9월 3일에 실시된 것이다.

상승률은 2/4분기에 평균 -0.0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어 전 분기에 이어 둔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2007년 4/4분기부터는 플러스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제 일본경제가 디플레이션이라는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6년에 ‘신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단순한 경제전망치가 아닌 정책 목표치를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실질 GDP 성장률이 2004~15년까지 연율 평균기준으로 2.2% 정도 성장하고, 물가상승률에 의해 좌우되는 명목성장률도 동 기준으로 3.6%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전망치는 계획적인 재정건전화, 안정적인 금융정책운영, 안정적인 인플레이션이 유지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주요 경제정책을 착실히 시행했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금융정책, 환율, 원자재 수입가격 등의 불안정한 요인에 의해 좌우되지만, 2010년 무렵에는 연율 기준으로 1.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표 2-2. 신경제성장전략의 장기전망(표준 Case) ▮

	실질 GDP	명목 GDP
2004~15년	2.2% 정도	3.6% 정도

주: 2015년도까지의 평균연율 기준으로 작성.

자료: 日本 經濟産業省(2006), 『新經濟成長戰略』.

## 나. 대외경제관계 현황

### 1) 무역관계

#### 가) 수출입 추이

일본 수출입 추이를 [표 2-3]에서 살펴보면, 1996~2006년 기간 동안 일본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4.7%를 기록한 데 비해, 동 기간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수출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 수출은

2001년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으로 증가세를 시현하였고, 2004년에 처음으로 5천억 달러를 상회한 이후 3년 연속 과거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수입도 수출과 유사한 패턴을 나타내는 가운데, 2003년 이후부터 원유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4년 연속 과거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증가율은 수출입 모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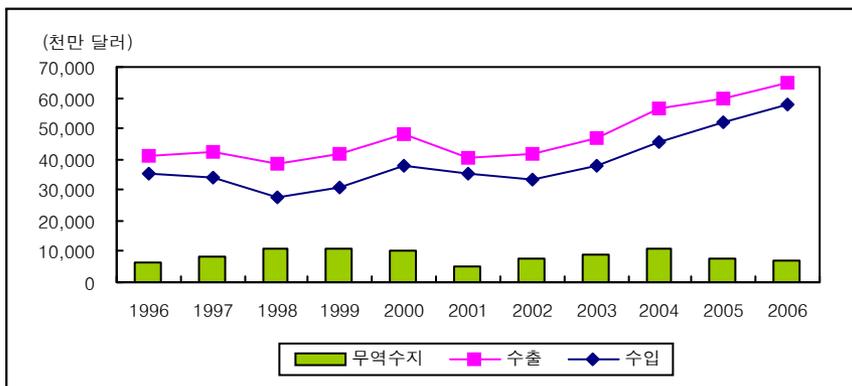
표 2-3. 일본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단위: 천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1996	41,243	-0.2	35,065	4.3	6,178	-44.8
1997	42,288	2.5	34,041	-2.9	8,247	33.5
1998	38,627	-8.7	27,932	-17.9	10,696	29.7
1999	41,744	8.1	30,975	10.9	10,770	0.7
2000	48,070	15.2	38,110	23.0	9,960	-7.5
2001	40,515	-15.7	35,109	-7.9	5,405	-45.7
2002	41,586	2.6	33,683	-4.1	7,903	46.2
2003	46,986	13.0	38,152	13.3	8,833	11.8
2004	56,503	20.3	45,466	19.2	11,036	24.9
2005	59,821	5.9	51,863	14.1	7,957	-27.9
2006	64,729	8.2	57,929	11.7	6,799	-14.6

자료: JETRO.

그림 2-3. 일본의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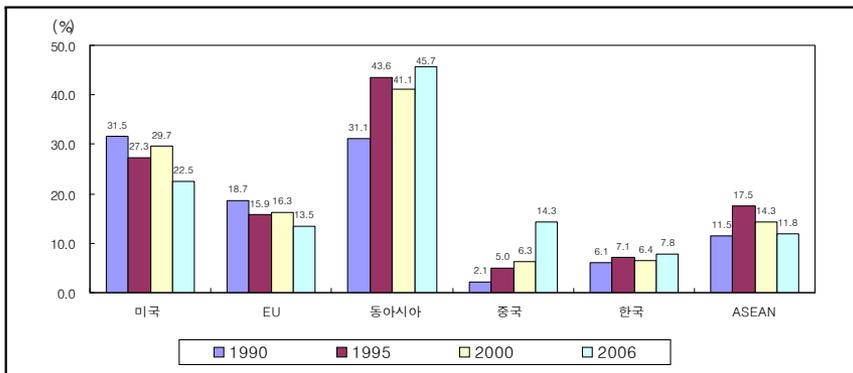
자료: JETRO.

2004년 이후 둔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수출의 경우 세계적으로 IT 제품의 급속한 생산조정, 해외경제 성장률의 둔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수입의 경우 엔화 약세가 가속화되면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또한 무역수지 흑자는 2000~01년 동안 축소 경향을 나타내다가 2002년부터 다시 확대로 전환, 2004년에 사상 최대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하지만 2005년 이후부터 원유수입액이 증가한 결과,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 나) 지역별 수출입

일본의 지역별 수출입 비중의 추이에서 주목되는 점은 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과의 수출입 규모는 점진적으로 감소한 반면, 동아시아 국가와의 수출입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의 제1위 수출입 상대국 자리를 확고히 유지하였던 미국의 경우, 수출입은 각각 1990년 31.5%, 22.3%에서 2006년 22.5%, 11.8%로 하락하였고, EU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하였다. 반면에 동기간 동아시아의 비중은 수출입이 각각 1990년 31.1% 28.8%에서 2006년 45.7%, 41.4%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 그림 2-4. 일본의 지역별 수출 비중의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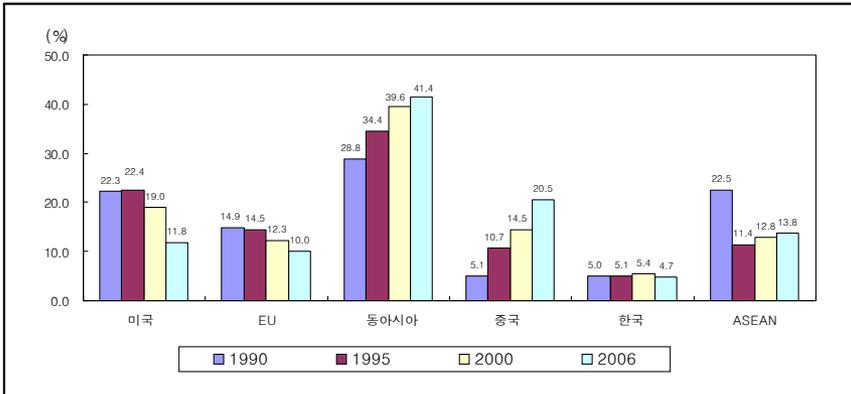


주: 1) ASEAN은 1990년 6개국, 1995년 7개국, 2000년과 2006년은 10개국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2) EU는 2006년 25개국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다.

자료: JETRO.

■ 그림 2-5. 일본의 지역별 수입 비중의 추이 ■



자료: [그림 2-3]과 동일.

이 가운데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수출입 비중 모두 중국이 뚜렷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수출입 비중은 각각 1990년 2.1% 5.1%에서 2006년 14.3%, 20.5%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중국은 일본의 제2위 수출대상국이자 2002년 이후부터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제1위 수입대상국으로 되었다. 일본과 중국의 수출입 총액도 8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결과, 2천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와 같이 일·중간 무역관계가 급증하고 있는 요인은 일본기업의 대중투자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따른 역수입의 증가, 중국의 내수확대로 인한 일본 가전제품의 수요 증가, 중국제품의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소비재의 대중의존도 상승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일본은 BRICs로 일컬어지는 국가 중 브라질, 러시아, 인도와의 수출입 비중은 2006년 2.5% 정도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지역별 수출입을 살펴본 결과, 일본과 동아시아와의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상호의존관계는 일본과 동아시아의 수평적 국제분업의 진전, 특히 기업 내 무역의 증대와 아시아 국가의 공업생산력 향상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본과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와의 FTA 체

결이 추진됨에 따라, 무역 및 투자의 기회가 확대되고 경제연대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 품목별 수출입

일본의 품목별 수출입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주요 품목 모두가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시현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도 자동차 등 수송용기계 (20.0% 증가), 철강 등 원료별 제품(17.3% 증가)이 수출총액을 크게 견인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대중 수출은 수송용기계, 전기기계, 원료별 제품, 화학제품 등 모든 주요 품목이 20%대로 두드러진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대중 수출이 크게 증가한 요인은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생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소재나 핵심부품의 현지 조달이 어려워지자 일본으로부터 조달하는 구조로 정착되고 있으며, 생산설비도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재에는 가전이나 자동차용 철강, 화학제품 등, 핵심부품에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 음향·영상기기의 부품, PC 부품, 액정관련 부품 등이

|| 표 2-4. 일본의 품목별 수출 현황 ||

(단위: 십억 엔, %)

품목	세계		미국		EU 25		중국		NIEs		ASEAN 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액	75,246	14.6	16,933	14.4	10,911	13.1	10,793	22.1	17,469	9.5	8,874	6.4
식료품	358	12.3	59	6.7	13	12.6	49	25.9	172	11.7	37	7.5
원료품	899	21.2	57	59.5	67	27.2	374	25.8	269	9.0	87	15.2
광물성연료	644	36.3	134	82.7	54	20.4	160	18.3	170	40.4	46	6.6
화학제품	6,793	16.2	802	5.6	803	12.2	1,418	23.5	2,657	19.2	789	12.4
원료별제품	8,673	17.3	1,002	16.1	668	14.2	1,749	20.4	2,549	15.3	1,590	10.3
일반기계	14,799	10.8	3,639	9.0	2,701	12.5	2,201	17.1	3,007	8.2	1,816	-0.1
전기기계	16,075	10.5	2,691	4.1	2,418	6.4	2,932	28.2	4,845	5.9	2,526	8.4
수송용기계	18,243	20.0	6,845	25.2	2,756	15.1	624	39.9	801	-10.5	852	-7.9
기타	8,756	12.6	1,699	4.7	1,427	22.0	1,282	11.6	2,994	9.3	1,127	16.5

주: 2006년 기준으로 작성.

자료: 日本 財務省, 「貿易統計」.

해당된다.2)

한편 수입의 경우에는 원유·정유를 포함하는 광물성연료가 28.1%로 급증하면서 수입을 견인하고 있다. 원유·정유 수입은 수량 기준으로 감소하였지만, 석유가격의 상승으로 금액 기준으로 30.7%나 증가하였고,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년도 15.4%에서 17.1%로 상승한 것이 주목된다. 또한 일본기업이 중국으로 생산거점을 활발하게 이전시키면서 일·중간에 새로운 분업구조가 확립되고, 이에 따른 대중 수입품목의 고도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2000년 시점에서는 대중 수입품목 가운데 섬유제품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노동집약적 경공업품의 비중이 높았지만, 2006년에는 기계기기가 섬유제품을 크게 상회하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표 2-5. 일본의 품목별 수입 현황 ▮

(단위: 십억 엔, %)

품목	세계		미국		EU 25		중국		NIEs		ASEAN 4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액	67,344	18.3	7,911	11.8	6,955	7.5	13,784	15.1	6,589	17.6	9,298	16.0
식료품	5,709	2.7	1,498	2.3	617	1.4	934	7.8	271	-8.0	662	0.6
원료품	4,733	35.0	466	19.0	245	9.3	203	9.8	155	42.5	989	4.2
광물성연료	18,656	28.1	111	-16.6	17	13.0	330	-8.5	530	31.9	2,494	4.4
화학제품	4,909	13.6	1,017	15.0	1,662	6.5	622	32.2	595	14.1	475	0.6
원료별제품	6,554	21.0	484	21.2	652	11.9	1,722	19.1	788	8.1	889	2.1
일반기계	6,239	10.2	1,292	14.9	856	7.0	2,327	13.8	860	-1.1	879	0.7
전기기계	8,644	16.8	1,408	21.8	734	17.1	2,678	16.9	2,024	23.7	1,759	1.3
수송용기계	2,259	9.5	676	8.8	950	5.8	226	31.0	108	26.4	113	0.3
기타	9,637	13.9	956	6.8	1,218	5.9	4,737	14.6	1,253	31.8	1,034	1.6

자료: [표 2-4]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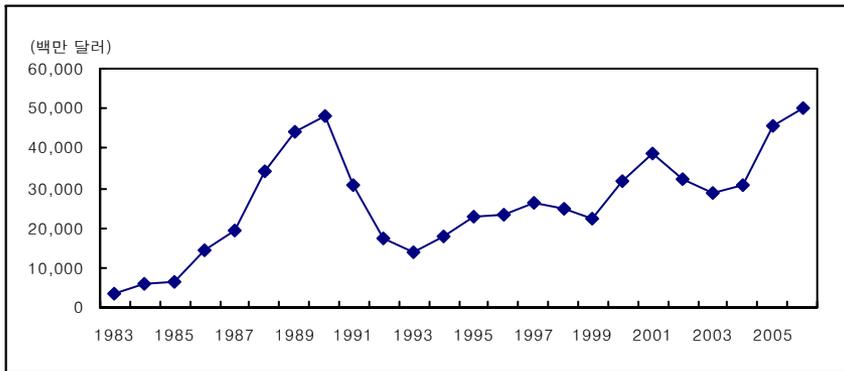
2) JETRO(2006).

## 2) 투자관계

### 가) 해외직접투자

일본기업은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이후부터 엔고 및 미국과의 무역마찰에 대응하면서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아시아지역에서의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전개해 왔다. 1989년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675억 달러(보고·신고 기준)를 정점으로 절정기를 맞이한 후, 1990년대 초반에 감소세로 전환하였다.<sup>3)</sup> 1993년 이후부터 일본기업들은 제조업부문의 생산기지 확보를 위해 대아시아 투자를 증가시켰다. 이에 힘입어 해외직접투자는 확대되기 시작하지만, 1990년대 후반 아시아의 통화위기와 일본 국내 금융불안이 맞물리면서 또다시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버블 붕괴 이후 억제되었던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2005년에야 비로소 버블기 수준까지 회복되었고, 2006년에 전년대비 10.3% 증가한 501억 달러를 기록, 버블 붕괴 이후 16

■ 그림 2-6.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



주: 국제수지, Net Flow 기준으로 작성.

자료: JETRO, 「日本の国・地域別 對外直接投資」.

3) JETRO의 보고·신고 기준 통계는 1965~2004년의 데이터만 있으며, 이후 통계의 연속성이 단절되고 있다.

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이와 같이 최근에 급증한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버블시기(1989~91년)와 비교했을 때, 투기적 목적보다는 기업의 본업무에 바탕을 둔 투자가 활발하다는 데 차이가 있다. 버블시기에는 엔고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강했으며, 이 중에서도 부동산, 서비스업 등의 비제조업부문에 대한 투자가 7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으로 높았다. 당시 비제조업에서의 해외 투자 중 일부는 일본국내의 잉여자금으로써 엔고를 활용하기 위한 투기적 목적으로 운영되었던 측면이 강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반면에 2006년에는 제조업부문의 비중이 6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수송기기와 전기기기의 투자가 각각 17.1%, 1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제조업 기업들이 생산네트워크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해외시장전개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이 반영된 특징으로 해석된다. 또한 비제조업부문에서는 버블시기에 활발했던 부동산, 서비스업의 비중이 미미한 수준으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sup>4)</sup>

표 2-6. 일본의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비중의 추이

(단위: %)

업종	1989	1996	2006
제조업	24.1	42.2	68.8
전기기기	6.6	13.6	14.0
수송기기	3.0	8.1	17.1
비제조업	74.8	55.7	31.2
금융·보험	22.6	16.2	11.1
부동산	21.0	12.9	-
서비스	16.0	8.4	0.4

주: 1) 1989년, 1996년 비중은 재무성, 「업종별대외직접투자실적」 기준으로 작성.

2) 2006년 비중은 JETRO, 「일본의 직접투자」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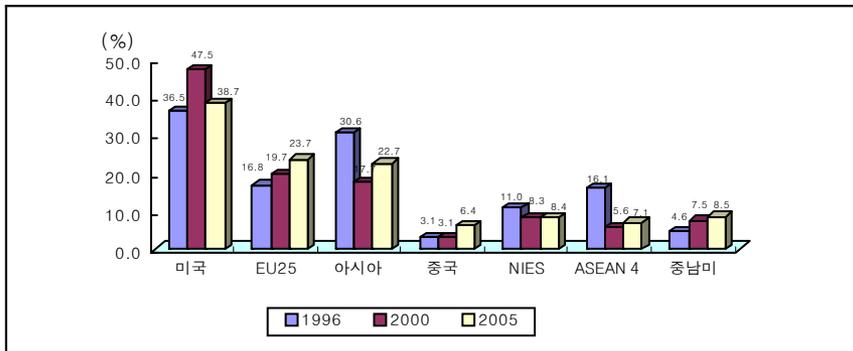
자료: 日本 財務省 · JETRO.

국별·지역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2005년 투자 잔액기준으로 해외직접 투

4) JETRO(2006).

자의 비중은 미국(38.7%), EU(23.7%), 아시아(22.7%), 중남미(8.5%) 순으로 나타나, 미국의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EU와 중국, 중남미에 대한 투자비중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어, 일본의 주요 투자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시아의 경우 투자환경이나 정치적 안정성 등의 면에서 아직도 미국이나 EU가 갖고 있는 매력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지만, 일본기업은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진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동아시아지역을 생산기지로 구축하고자 함에 따라 아시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에 대한 일본기업의 관심이 높고, ASEAN에 대한 투자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림 2-7. 지역별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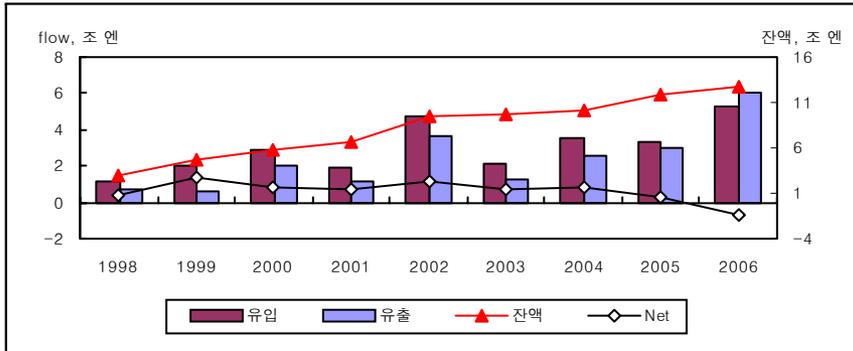
주: 해당년말 투자 잔액 기준으로 작성.

자료: JETRO, 「日本の国・地域別対外直接投資残高」.

## 나) 외국인직접투자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 잔액기준으로 기록적인 12조 엔대를 달성하였다. 동시에 최근의 경기회복세를 배경으로 불황기에 외국자본이 매수하였던 일본기업 및 투자사업의 가치가 상승하자, 이들이 다시 대량으로 매각되면서 2006년 유출액은 유입액을 상회하였다. 그 결과, 순투자(Net) 금액은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또한 2006년 외국인직접투자 잔액규모(12.8조

■ 그림 2-8.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잔액의 추이 ■



주 : FDI Stock 기준으로 작성.

자료 : 日本 財務省, 「對外資産負債殘高」.

엔)는 2001년에 비하여 85.2%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일본 외국인직접투자의 국별·지역별 실적을 살펴보면, 미국과 유럽국가를 포함하는 선진국(OECD 가맹 28개국)으로부터의 투자금액이 전체의 85.4%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대일투자 비중이 가장 높고, 금융·보험업을 중심으로 하는 네덜란드, 프랑스의 대일투자가 뒤를 잇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의 투자가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로부터의 투자는 1996년에 5억 9천만 달러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에 불과하였으나, 2005년에 66억 4천만 달러로 그 비중도 6.6%로 확대되었다. 이 중에서 홍콩과 싱가포르의 대일투자 규모가 상위 10위권, 한국과 중국은 상위 20위 이내에 들어가 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의 비중이 비제조업에 비하여 낮으며,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전자를 포함하는 기계 비중이 높고, 비제조업 중에서는 상사·무역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경제규모에 비추어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극단적으로 낮은 수치에 해당된다. GDP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율은 2004년 기준으로 미국 22%, 영국 40.9%, 독일 25.0%, 프랑스 47.4%에 비하여 일본은 2.4%에 불과하다. 또한

UNCTAD의 *World Investment Report*(2006)에서 산출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성과 및 잠재력 매트릭스 분석 결과에서는,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잠재력지수는 141개국 중 22위로 높은 수준이지만, GDP에서 차지하는 외국인직접투자의 비중은 131위로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여, 일본은 FDI 잠재력은 높으나 성과가 낮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sup>5)</sup>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는 경제규모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실적 비교에서도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어, 일본시장의 폐쇄성을 증명하는 사례로서 자주 언급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와 해외직접투자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경제구

▮ 표 2-7. 일본의 국별·지역별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및 지역	투자금액	비중	순위
합계	100,341	100.0	-
아시아	6,636	6.6	-
홍콩	2,586	2.6	8
싱가포르	2,138	2.1	10
대만	1,378	1.4	12
한국	310	0.3	18
중국	101	0.1	20
북미	47,262	47.1	-
미국	43,459	43.3	1
캐나다	3,803	3.8	6
유럽	37,728	37.6	-
네덜란드	11,540	11.5	2
프랑스	10,672	10.6	3
독일	5,847	5.8	4
영국	3,004	3.0	7
중남미	8,138	8.1	-
케이맨 제도	5,544	5.5	5
기타	567	0.6	-

주: 2005년 말 부채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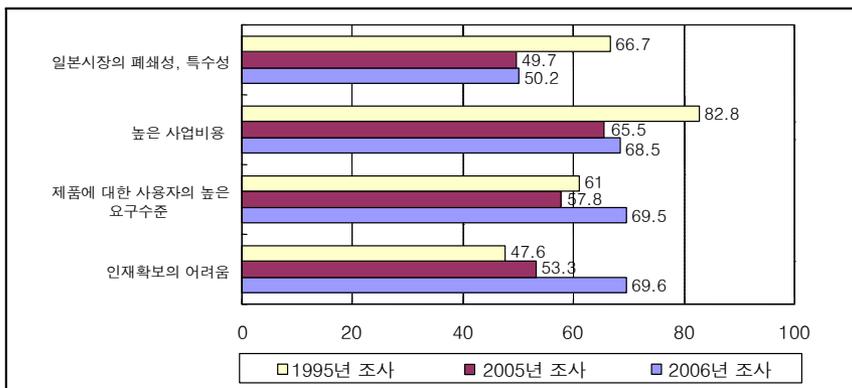
자료: JETRO; 富士通總研(2007).

5) 日本 經濟産業省(2007).

조개혁의 차원에서 외국인직접투자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의 일환으로 일본정부는 2003년 1월에 Invest Japan 계획을 발표하였고, 동 계획을 통하여 ‘2006년 말까지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를 2001년 실적대비 2배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동 계획하에 일본정부는 JETRO, 일본정책투자은행, 관련부처와의 협력하에 지방경제산업국에 외국인직접투자 종합안내창구를 설치하고, 투자자를 대상으로 One-Stop-Service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구조개혁특구를 활용하여 투자유치에 의욕적인 지역에 대한 지원과 외국기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투자유치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규제 완화를 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한편으로 일본이 투자대상으로서 갖고 있는 가치와 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포괄적인 투자환경정비를 추진하였다. 일례로 회사설립에 관한 규제 완화를 통하여 절차의 간소화, 자금조달관련 규제 완화, 기업재편의 유연화, 법인실효세율 인하, 항만·물류 시설의 확충 등과 외국인 직접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어 왔다.

JETRO의 조사에서도 외자계열 기업들의 대일투자환경이 1995년에 비하여 착실히 개선되고 있음이 반영되고 있다. 높은 비즈니스 비용, 일본시장의 폐쇄

■ 그림 2-9. FDI 저해요인의 추이 및 비교 ■



주: 일본주재 외자계열기업(외자출자비율 1/3 이상) 2,929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고, 이 중 회답 기업 수는 895개사이며, 복수회답으로 집계된 결과이다.

자료 : JETRO(2007a).

성·특수성이라는 기존의 대일투자의 저해요인은 10년 전 조사에 비하여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인재확보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어학가능자 부족이라는 점에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으며, 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수준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본경제의 장기불황과 최근의 경기회복 과정 중에서 많은 일본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시행하였고, 선택과 집중, 사업의 통폐합을 적극 시행해 왔다. 이러한 사업재편이 추진되는 가운데 외자에 의한 투자기회가 많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일본경제의 규제완화와 구조변화가 추진되면서 외자의 일본 진출이 활발해졌다. 이러한 배경하에 대일투자규모는 급속히 증대되어 왔다고 요약할 수 있다.

## 다. FTA 추진 현황 및 특징

### 1) 추진 현황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 FTA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이를 발효함으로써 FTA 체결국가 대열에 참가하게 되었다. 2002년 11월에 시작된 멕시코와의 FTA 협상이 농산물과 관련하여 막판까지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2004년 9월에 체결되었다. 이후에 일본은 지역간 FTA 형태로 ASEAN과 협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ASEAN 주요 국가와의 양자간 FTA 협상을 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2004년에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와의 FTA 협상이 개시되었다. ASEAN 국가 중 말레이시아와의 FTA가 2006년 7월에 가장 일찍 발효되었고, 이어서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순으로 FTA가 체결되었다. 또한 2006년 11월에 인도네시아와의 합의가 도출되었다.

일본정부는 중국과 ASEAN 간의 경제관계가 급속히 긴밀해지고 있는 데 위기감을 느끼면서, FTA 체결을 통해 한층 긴밀한 경제관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이는 중국의 대ASEAN 접근을 견제한다는 외교상의 수단으로도 적극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현재 ASEAN 주요국과의 양자간 협상

▮ 표 2-8. 일본의 EPA 체결 및 추진 현황(2007년 7월 현재) ▮

단계	대 상	정부간 협상 추진 현황	대상국 선정 이유 및 주요 쟁점
발효	싱가포르	2001. 1 개시 2002. 1 체결 2002. 11 발효	농산물 민감 품목 미미, ASEAN FTA의 교두보,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멕시코	2002. 11 개시 2004. 9 체결 2005. 4 발효	FTA 다체결국, 미체결의 불이익 회피
	말레이시아	2004. 1 개시 2005. 12 체결 2006. 7 발효	ASEAN 선발 회원국
체결	필리핀	2004. 2 개시 2006. 9. 9 체결	ASEAN 선발 회원국, 자국 간호사 및 간병인의 일본 유입
	태국	2004. 2 개시 2007. 4 체결	ASEAN 선발 회원국
	칠레	2006. 2 개시 2007. 3 체결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 FTA 다체결국
	브루나이	2006. 2 개시 2007. 6 체결	ASEAN 회원국
협상 중	ASEAN	2005. 4 개시 ~ (2007. 6. 8차까지 종료)	밀접한 상호 의존도. 일본의 영향력, 중국 견제(CLM 제외)
	인도네시아	2005. 7 개시 ~ (2006. 11 합의 도출)	자국 간호사·간병인의 일본 유입
	한국(중단)	2003. 10 개시 (2004. 11. 6차로 중단)	인접한 OECD 회원국, 역내통합모델 제시
	GCC	2006. 7 개시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
	인도	2007. 1 개시 (2007. 6. 3차까지 종료)	BRICs와의 FTA, 고관세 국가
	베트남	2007. 1 개시 (2007. 6. 3차까지 종료)	ASEAN 회원국
	호주	2007. 4 개시	아시아·태평양 선진국, 자원부국
	스위스	2007. 5 개시	EFTA 회원국, 선진국

자료: 김양희(2006)를 토대로 추가 작성.

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도달하였고, ASEAN 전체 국가와의 FTA 협상도 제8차까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가 ASEAN에서 양자 협상과 ASEAN 전

체와의 협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이유는 ASEAN의 선발·후발국간 경제격차로 개별 협상이 효과적이거나, 역내 공통 현안에 대해서는 ASEAN 전체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2006년 들어 일본정부는 동아시아 역내국가를 포섭하기 위한 FTA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역외국가와의 FTA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 칠레, GCC 국가와의 협상이 개시되었고, 2007년에는 인도, 호주, 스위스와의 협상도 개시되었다. 이러한 역외국가와의 FTA 추진은 칠레의 동, GCC의 석유, 호주의 석탄, 철광석, 천연가스와 같이 천연자원 확보를 위한 동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높은 경제성장률이 기대되는 BRICs의 한 나라인 거대경제권 인도와의 FTA는 향후 잠재성이 높은 시장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작용하고 있다.<sup>6)</sup>

한편 2006년 4월에 경제산업성은 기존의 ASEAN+3(한중일)에 새로이 인도, 호주, 뉴질랜드 3개국을 추가한 ‘ASEAN+6’를 체결국으로 하는 확대 동아시아 FTA 구상을 발표하였고, 2008년에 교섭을 개시해 2010년에 체결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sup>7)</sup> 일본이 ASEAN+3의 로드맵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러한 제안을 한 이유는 사실상 역내 FTA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함과 동시에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지적된다.

## 2) FTA 전략의 특징

FTA에 대한 일본정부의 기본인식은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자유무역 시스템을 보완함과 동시에 일본 및 협력 상대국의 구조개혁을 촉진하여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의 토대를 만드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일본은 자국의 경제·산업구조와 경쟁력 수준, 지역전략, 대외관계 등을 다면적으로 고려해 그들의 실정에 맞는 매우 현실적인 FTA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6) JETRO(2007b).

7) 日本 經濟産業省(2006).

첫째, 일본은 제조업 분야에서는 적극적인 시장개방을 유도하면서 농업·서비스업 분야에서는 방어적인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산업·기술·투자 등의 분야에서 상대국을 지원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일례로 일본은 ASEAN과의 FTA 체결에서도 농수산물 시장의 중간 수준 개방과 양자간 산업·기술 및 투자 협력 확대를 연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상품교역의 양허 수준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공산품 대부분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 반면에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관세철폐 예외품목으로 지정하는 등 제한적인 개방을 시행해 왔다.

이러한 일본의 전략은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위한 전제조건인 국내 이해조정 메커니즘 확립이 미흡한 상황에서 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농수산물은 공산품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개방하는 정책은 앞으로도 획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일본은 FTA 대상으로 ASEAN을 포함하여 동아시아를 중요시하는 특징이 나타난다.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FTA를 추진하는 이유는 향후 경제발전 가능성과 무역장벽이 동시에 높기 때문이다. 이미 발효된 3개국 중 2개국, 협상 체결 및 협상 중인 7개국 중 5개국 등 7개국이 ASEAN 회원국이다. 한편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기회론보다는 위협론, 낙관론보다는 신중론에 가깝다. 이에 중국의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동아시아 내의 세력판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SEAN을 중심으로 역내 국가와의 FTA 체결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통상전략은 일본기업의 해당 지역에서의 시장진입 여건을 안정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무역 및 투자기회의 확대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함으로써 중국보다 우위의 위치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8)</sup>

셋째, 일본은 FTA보다 「經濟連携協定(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라는 용어를 선호하면서 포괄적인 경제연대협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EPA가 ‘상품무역의 자유화’(협정의 FTA)뿐 아니라 투자와 서비스의 자유

8) 김양희(2006).

화, 다양한 규범의 조화, 상대국의 개발 지원 등 주로 역내국과의 포괄적인 경제연계를 통해 상대국과의 연대 강화와 동시에 역내 경제통합의 기반 형성을 중시한다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본 측은 FTA 협상과정에서 기진출 자국기업의 소재·부품 수입에 대한 관세철폐, 투자, 지식재산권 및 반경쟁적 행위 관련 규범 강화, 제조업 관련 서비스 투자의 규제 완화, 상대국의 비즈니스 환경 정비, 투자보호 규범 등을 통해 자국기업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데 최대의 관심을 두고 있다. 한편 일본정부가 자국 농수산물 시장의 중간 수준 개방이 WTO가 요구하는 GATT 규정과의 정합성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려워 서비스, 투자, 개발지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경제연대의 형태를 강조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 2. 일본 통상전략의 변화와 특징

### 가. 일본 통상전략의 변화

일본의 통상정책은 1990년대 중반까지도 GATT/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해 왔으며, 새로운 FTA의 확대 및 심화 속에서도 양자간 또는 지역간 FTA의 필요성을 자제하며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일본의 통상정책은 다자간 중시의 통상정책에서 FTA를 중심으로 양자간 협상을 중시하는 중층적 통상정책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2002년 1월에 체결된 일·싱가포르 FTA는 중층적 통상정책으로의 변화를 특징짓는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은 대내외적 요인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요인으로 일본은 FTA를 통해 다자간 무역자유화는 물론 상호 자극을 유발하는 파급효과를 기대하였으며, 둘째 요인으로는 만일 일본이 선행적으로

FTA를 통해 고도의 통상규범을 책정한다면, 다자간 협상에서 동일한 규범을 책정할 때 어느 정도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음을 기대한 측면도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일본기업으로서의 해외직접투자를 통한 현지 생산거점화 전략을 전개하고 있어, 해당국가와 FTA를 체결한 제3국 기업과 비교하여 경쟁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을 회피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의 전환이 전개되었다고 판단된다. 넷째로, 일본은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 측면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 즉 FTA 상대국의 자본, 인적자원, 기술 및 노하우를 유입하여 국내기업과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일본경제 활성화와 법·제도의 개혁을 추진한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9)</sup>

이와 같은 대내외적 요인은 일본의 통상정책이 FTA를 중심으로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종합적으로 설명한 것이지만, 이러한 요인은 여타 국가들의 실질적인 FTA 구상에도 사실상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지적했듯이 일본의 정책 전환과 FTA 추진은 상대국으로부터의 제안 등에 의해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일본 스스로가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능동적으로 추진하려는 측면도 강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이러한 통상정책 변화는 WTO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 회피, 국내경제의 구조개혁 촉진 등을 통하여 일본경제의 재활성화를 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된다.<sup>10)</sup>

이처럼 일본이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간 균형을 이루면서 노력하는 이유는 일본의 지역별 경제관계가 폭넓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최대 교역 상대국은 여전히 역외의 미국이며, 미국은 일본과 안보동맹관계에도 놓여 있어 일본에 있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대국이다. 아울러 EU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에는 못 미치지만 정치·경제 측면에서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이나 EU와는 농업 분야의 교섭 문제를 이유로 FTA 추진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WTO를 근간으로 하는 통상전략을 중요시

9) 日本 經濟産業省(2001).

10) 이홍배 외(2003).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으로 FTA를 중심으로 지역연대 및 경제협력관계를 전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도하게 된 배경에는 역시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통화위기가 있다. 아시아 통화위기는 위기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역내 경제통합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일본이 어떠한 형태로든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독자적인 지역협력의 틀을 주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 변화는 다자주의에서 양자간 중심의 FTA 추진으로 전환시켰을 뿐만 아니라, 통상정책의 기본방향을 ‘대미 관계 최우선’ 노선에서 ‘동아시아 연대 중심’ 노선으로 변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일본정부는 동아시아의 성장잠재력과 중국의 부상 등으로 아시아와의 관계 강화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FTA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대아시아 통상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 나.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통상정책은 다자간에서 양자간 FTA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변화를 보여 왔다. 최근에는 한국 및 중국 등이 FTA 추진을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일본 내에 확대되면서, 새로운 통상전략으로의 전환이 촉구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따라서 일본 통상정책의 특징을 간략하나마 최근에 발표된 일본정부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하고자 한다.

일본정부가 2006년 4월에 발표한 ‘글로벌 경제전략’은 일본경제의 성장세를 확보하기 위한 통상전략을 어떻게 설정해 나갈 것인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6월에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양대 축으로 하는 ‘신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전략들은 일본이 인구감소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산업공동화, 금융위기, 디플레이션의 진행 등과 관련된 제반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향후의 산업정책, 경제정책, 통상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는 일본이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이 원활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일본이 어떻게 강력한 주도권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글로벌 경제전략’에서는 2008년도부터 동아시아 FTA 협상에 착수하여, 2010년 동아시아 FTA 협상타결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여기서는 동아시아에서도 경제통합의 추진체계 정비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점을 지적하며, ‘동아시아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설립 구상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일본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고자 하는 의도의 일환일 뿐이라고 폄하되어 주변국으로부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동아시아 OECD 구상 제안이 미래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제도적 틀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지역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문 제제기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도 있으나, 중국과 FTA 체결 경쟁에 몰두하고 있는 양상에서 중국 견제용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와 같이 최근에 일본은 역내 경제대국으로서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일본의 의도대로 효과적인 지역통합이 실현될지의 여부는 불투명하다.<sup>11)</sup>

또한 일본정부가 통상정책의 전환을 모색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에는 일본 경제의 구조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은 FTA를 통해 무역 및 직접투자 유입을 확대하여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 추진 중인 각종 규제완화 및 구조개혁을 가속화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신경제성장전략’은 ‘국제경쟁력 강화 전략’과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의 연계 방안을 중점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높은 성장률의 아시아의 발전을 기본 축으로 하여 일본경제의 성장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선순환 메커니즘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향후에도 일본정부는 FTA라는 외압을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규

11) 김양희(2006).

제개혁, 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개혁 등의 국내제도개혁을 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하여 경기회복이 더딘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한편 일본은 1955년 GATT 가입 이후 GATT/WTO를 통해 무역자유화와 무차별원칙·다자간 무역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더욱이 1999년 시애틀 각료회의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WTO 회원국들과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새로운 라운드의 조기 실시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FTA를 중심으로 지역연대 및 경제협력관계를 전개하면서도, WTO 체제의 다자간 협상의 중요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즉 일본은 무차별원칙·다자간 협상을 기본으로 하는 WTO 체제와 동 원칙의 예외로 규정된 FTA 간의 긴장관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WTO가 FTA를 통한 무역창출효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FTA가 무역왜곡효과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데 대해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본은 FTA를 중심으로 양자간 협상을 전개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자간 협상 기관인 WTO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나간다는 중층적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WTO 체제의 최대 수혜국이라고 불릴 만큼 큰 이익을 누려왔으며, 미국과 EU 등과의 협상력 강화를 통한 국제적 위상 확립의 차원에서도 WTO의 존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바, 일본은 향후에도 WTO 내에서의 자국의 역할 정립과 활동 폭을 적극 넓혀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 3. 소결

본 장에서는 일본경제의 현황, 일본의 대외경제관계 현황 등 실물경제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고찰하였다. 또한 이러한 실물경제의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의 통상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일본경제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지속적인 회복세를 보여 왔다. 이러한 회복세는 정부의 경기대책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그 특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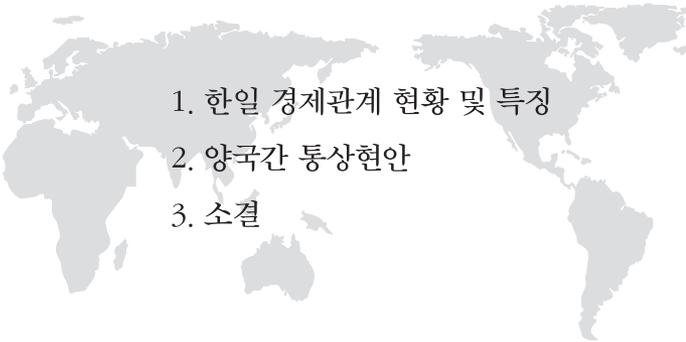
있음은 지적인 바와 같다. 특히 중국을 위시한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증대와 설비투자확대가 경기회복의 핵심적 요인이었다. 이러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일본의 통상정책도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을 중시하면서도 양자간 FTA 협상에도 많은 정책적 노력을 쏟아 붓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과 자원 및 시장대국들을 중심으로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는 어떠한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의 대일관계는 그리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한·일 FTA 협상이 중도에 중단되었고, 양국은 모두 상대국과의 협상재개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일 FTA보다 중국과의 FTA를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고, 일본의 입장에서도 한국과의 FTA에 협상력을 집중할 여력이 많이 소진되어 있다. 현재 역외의 자원부국들과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이다. 무역 및 투자에서도 상대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저하하고 있다. 그만큼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활발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 장에서의 고찰을 통해 한·일 경제관계가 과거와는 사뭇 다른 조건에 처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와 같이 일본이 가지는 자본과 기술 및 시장에서의 중요성은 점차 저하돼 왔다. 실물경제적 조건의 변화와 동시에 정책적 환경도 많이 변화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지역통합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를 주도하기 위한 국가·지역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우리는 일본에 대해 어떠한 경제관계를 설정하고 일본이 보유한 가치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의 과제를 안고 있다.

# 제3장

## 한일 경제관계 현황과 주요 통상현안



1. 한일 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2. 양국간 통상현안
3. 소결

## 한·일 경제관계 현황과 주요 통상현안

### 1. 한·일 경제관계 현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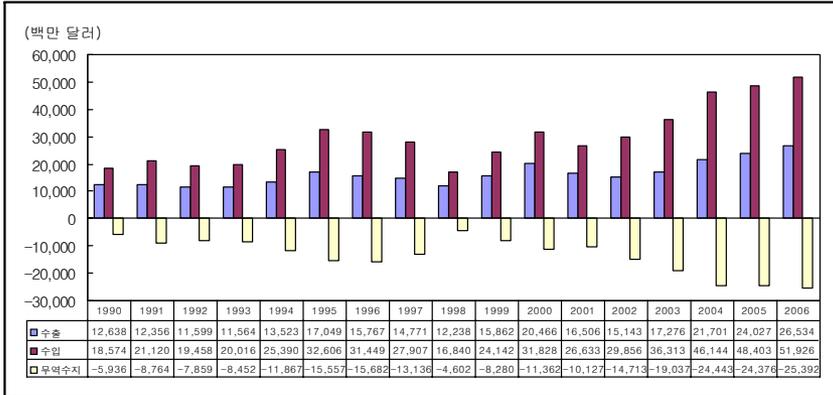
#### 가. 무역 현황과 특징

한·일간 경제관계는 1960년대 이후부터 보완적 관계를 형성하는 한편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0년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는 [그림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일본의 장기불황과 한국의 외환위기 등의 영향으로 인해 1995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면서 1998년에는 큰 폭의 감소세(전년대비 31.8%)를 나타냈다. 이후 1999년에 교역규모가 증가세(37.6%)로 전환되었고, 2000년에는 500억 달러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이후 2001년에는 일본의 경기회복 지연과 미국경제의 감속 등이 맞물리면서 양국간 교역규모가 일시적으로 감소세(전년대비 17.5%)로 전환되기도 하였다. 2002년 이후 일본의 경기회복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일 양국간 교역규모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05년에 700억 달러를 달성하였고, 2006년에는 800억 달러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양국간 교역규모의 확대는 한국의 대일무역적자 확대라는 형태로 직접 연결되는 것이 현실이다. 2002년 이후 양국간 교역규모가 증가세로 돌아서자, 대일무역적자는 2002년 147억 달러에서 꾸준히 증가하

여 2006년 254억 달러 수준에 달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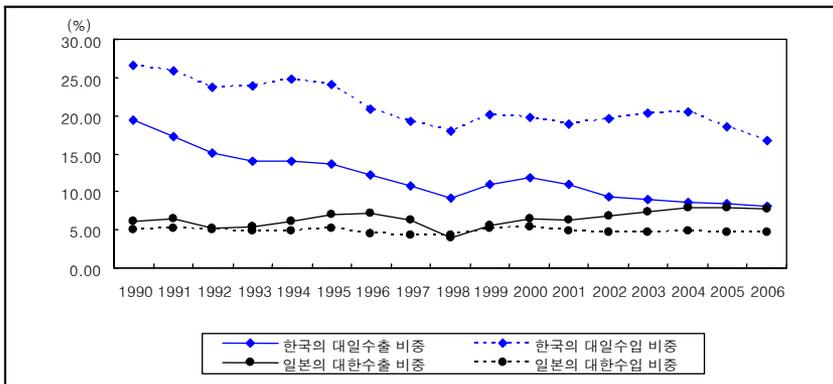
■ 그림 3-1. 한·일 양국간 수출입 및 무역수지 추이 ■



자료: KOTIS.

일본은 한국에 있어 중요한 수출입시장의 하나로 평가되어 왔지만, 최근에 수출입시장이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 중국, 아세안, 중남미로 확대됨에 따라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1990~2006년간 양국의 수출

■ 그림 3-2. 한·일 양국간 수출입 비중의 추이 ■



자료: KOTIS; JETRO.

입비중을 살펴보면, 일본 수입시장에서의 아시아 비중은 29%에서 43%로 증가하였지만, 한국 비중은 5%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수출시장에서도 같은 기간 중 아시아 비중은 31%에서 47%로 늘었으나, 한국 비중은 7%대를 추이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상황은 더욱 명확하다. 같은 기간에 한국의 수입시장 중 아시아의 비중은 41%에서 47%로 증가하였으나 일본의 비중은 27%에서 16%로 감소했다. 또한 한국의 수출시장에서의 아시아 비중은 37%에서 51%로 증가하였으나, 일본 비중은 19%에서 8%로 크게 줄어들었다. 한·일 양국간에는 경제협력 강화의 필요성이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강조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그다지 확대되지 못하고 있다.<sup>12)</sup>

한국의 대일 수출품목은 전자부품, 광물성연료, 철강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등이며, 대일 수입품목은 철강제품,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이 각각 중심을 이루

표 3-1. 한국의 10대 대일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순위	수출			수입		
	품목명	금액	구성비	품목명	금액	구성비
1	전자부품	7,041	26.5	철강제품	7,871	15.2
2	광물성연료	4,145	15.6	전자부품	7,733	14.9
3	철강제품	2,685	10.1	석유화학제품	3,858	7.4
4	산업용전자제품	2,027	7.6	정밀화학제품	3,209	6.2
5	석유화학제품	1,236	4.7	산업용전자제품	3,202	6.2
6	기계요소공구, 금형	794	3.0	산업기계	3,043	5.9
7	비철금속제품	767	2.9	정밀기계	2,497	4.8
8	수산물	659	2.5	기초산업기계	2,492	4.8
9	수송기계	648	2.4	수송기계	2,397	4.6
10	정밀화학제품	608	2.3	플라스틱제품	1,978	3.8
	소계	20,610	77.7	소계	38,280	73.7
	대일본 총수출	26,534	100.0	대일본 총수출	51,926	100.0

주: 10대 수출입 품목은 2006년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KOT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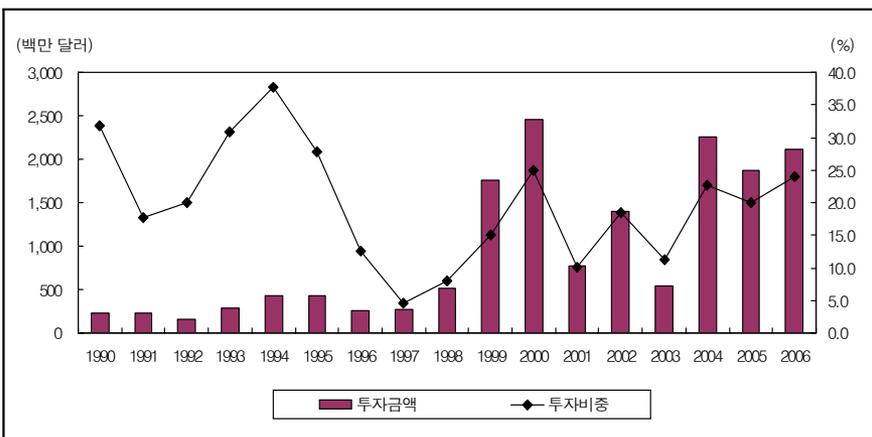
12) 김종걸(2005).

고 있다. 양국간 수출입 품목이 전자, 철강, 석유화학 등 자본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상호 의존 및 보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철강, 화학제품 등의 중간재 수입과 기계관련 부품·소재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대일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 나. 투자 현황과 특징

한·일 양국간 투자관계는 무역관계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통상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기별로 일본의 대한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1962~81년 55%, 1982~90년 47%, 1991~99년 20.5%, 2000~06년 18.7%로 그 비중이 현저히 축소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공업화의 초기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일본의 역할은 크게 작아지고 있으며, 반면에 미국, EU로부터의 대한투자는 증가하여 그 규모가 유럽, 미국, 일본의 순으로 변화되었다.

▮ 그림 3-3. 일본의 대한 투자 금액 및 비중의 추이 ▮



자료: JETRO 홈페이지.

외환위기 전후 대한투자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이 한 자릿수로 격감하기도 했으나, 1999년 이후 일본의 투자규모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0년에는 24억 달러로 늘어났다. 2001년에는 무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기회복 지연으로 대한투자규모가 일시적으로 7억 달러까지 급감하기도 하였지만, 2002년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2004년과 2006년에는 20억 달러를 상회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총 외국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도 2000년 25.0%로 상승한 이후 2001년 10.1%까지 감소하였다가 2004년 이후부터 20%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가 낮았던 이유로는 생산비용 면에서의 낮은 비교우위, 사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반목으로 인한 불안정한 노사관계, 제도의 불투명성과 자의적 운용, 그리고 세제, 수출입규제, 통관규제 등과 관련된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에 기인하고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대해 한국은 제도 및 투자환경 면에서 투자절차의 간소화 및 투명성 제고,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일본기업의 대한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노력해 왔다. 이러한 예로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고도기술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의 활용, Japan Desk 등을 통한 투자가 발굴 강

표 3-2. 일본의 대한국 업종별 직접투자 추이

(단위: 건, 백만 달러)

업종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누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농축수산물업	3	8	4	2	-	-	1	2	2	0.1	116	43
제조업	194	570	195	339	231	1,991	241	643	235	1,798	5,619	10,799
서비스업	269	824	292	201	320	270	359	1,231	335	307	3,819	8,699
전기가스 수도건설	8	2	6	0.4	4	2	10	2	12	4	176	279
전 체	474	1,404	497	542	555	2,262	611	1,879	584	2,108	9,730	19,821

주: 누계 실적은 1962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의 총합계 금액으로 작성.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투자통계」.

화 등을 들 수 있다.<sup>13)</sup> 특히 한국 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 정리해고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파견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과거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과감한 조치를 전개해 왔다.<sup>14)</sup>

하지만 최근 일본의 대한 투자증가는 투자환경의 개선노력이 일부만 반영되기도 하였지만, 일본기업의 대아시아 무역 · 직접투자의 전략 방향에 따라 변화된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일본의 직접투자가 중국과 ASEAN을 중심으로 신규 투자를 확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가운데, 한국에 대해서는 액정,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주력 산업 부문에서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산업 부문에 특화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투자환경이 개선된다면, 일본기업이 투자대상으로서 한국을 재인식하는 데 연계되어 대일투자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기업의 업종별 대한투자 추이(누계 기준)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5,619건 108억 달러로 전체에서 5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이 3,819건 87억 달러로 43%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의 투자 특징으로는 M&A형 투자 형태보다는 제조업 부문에서의 공장 설립형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삼성과 소니 양 사는 2006년 7월에 액정패널 합병회사인 S-LCD에 대하여 최첨단 시설의 제2공장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고, 2007년 가을 공장가동을 목표로 총 19억 달러의 투자규모를 양자가 50%씩 분담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한국진출을 모색하고 있던 일본의 미쓰비시레이온과 폴리머 사업전개를 계획하고 있던 호남석유화학이 2006년에 합병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철강업계의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한 · 일 기업간 철강부문에서도 산업협력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포스코와 신닛테쓰는 아시아 시장의 기반강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를 위해 연구개발 등의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대일 투자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주요 투자 안건으로는 골프장 매수가 집중된 이외에도 콘텐츠 관련 투자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골프 붐이 확산되면서

13) 산업연구원(2005).

14) 정훈(2002).

표 3-3. 한국의 업종별 대일 투자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업종	신고 기준			투자 기준		
	건수	금액	비중	건수	금액	비중
농림어업	3	181	0.0	3	172	0.0
광업	1	497	0.0	1	497	0.0
제조업	308	353,352	17.2	289	320,403	19.1
건설업	8	8,522	0.4	7	5,783	0.3
도소매업	419	684,603	33.3	389	528,862	31.6
운수창고업	58	25,941	1.3	54	20,481	1.2
통신업	24	90,365	4.4	23	71,415	4.3
숙박음식업	48	33,448	1.6	45	23,849	1.4
서비스업	396	717,632	34.9	380	579,787	34.6
부동산업	16	140,102	6.8	15	121,254	7.2
기타	1	1,000	0.0	1	982	0.1
전체	1,282	2,055,643	100.0	1,207	1,673,485	100.0

주: 1) 2007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누계 실적이다.

2) 비중은 금액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다.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골프인구가 증가경향에 있지만 골프장 수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투자가 증대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관련 투자로는 공연기획, 온라인게임회사의 증가나 영화, 드라마 배급 등 관련부문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또한 2006년부터 일본 내에서 한국 휴대폰의 공급이 개시됨에 따라 일본시장진출의 상징적 사례로 주목되고 있다. 일본 통신회사들은 국내의 다양한 품질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삼성, LG, 팬택&큐리텔의 휴대폰을 공급받아 판매를 개시하였다.<sup>15)</sup>

15) JETRO(2006).

## 2. 양국간 통상현안

### 가. 교착상황의 FTA 협상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특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자간에서 양자간으로’는 현재 세계 통상환경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용어 중 하나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제개발전략 등 구조적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과 일본에게 양국간 경제협력 증대, 이른바 한·일 FTA 체결의 필요성을 재인식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해 무역자유화 및 다자간 협상 무대에서 영향력 제고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은 1998년 이후 공동연구 등을 통해 2005년 말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FTA 체결 논의를 전개해 왔으나, 2004년 11월에 6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벌써 3년 가까이 결렬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한·일 FTA 체결협상 지연의 직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주요 통상현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한·일 FTA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일본의 FTA 추진 로드맵의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한국의 대일 FTA 체결에 대한 목표의식이 약화된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양국간 상품 양허안 교환 관련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요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일본의 입장과 전략이 초기단계인 1998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통상정책은 1998년 중반 이후 다자간과 양자간 협상을 중시하는 중층적 통상정책을 전개하였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한·일 FTA 구상이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중국의 존재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본으로서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위상 제고를 위해서는 한국의 존재가 무엇보다도 중요했다고 판단되는바, FTA 구상은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 비중을 둔 경제협력 구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FTA 추진 로드맵은 2003년 들어서면서 변화를 모색하기 시작하여, 과거와 달리 일·ASEAN 협상을 중심으로 일·칠레,

일·인도 FTA 공동연구를 전개하는 등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초점을 둔 통상 정책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양국간 FTA 협상 논의가 교착상태에 있는 데는 한국의 대일 FTA 체결에 대한 목표의식이 약화된 점도 그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다. 한국 또한 양국간 FTA 구상 초기단계에는 일본의 경제규모와 기술경쟁력, 국제적 위상 등을 고려하여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일본을 선택했으며, 이를 토대로 아시아지역은 물론 세계를 아우르는 선진형 통상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익을 도모한다는 목표의식이 분명하였다. 그러나 일본을 대체할 수 있는 중국 및 ASEAN, 미국 등과의 FTA 체결카드가 대두되면서 한국 역시 한·일 FTA 구상 당시와 비교하여 일본의 존재감과 협상 체결의 시급성이 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 및 산업계가 총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각론적으로는 여전히 양국간 FTA 체결의 부작용을 제기하면서 반대 입장을 강화하고 있는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양국간 특허분쟁과 김 수입쿼터제 해소 등 통상마찰이 본격화된 데다, 설상가상으로 대립과 갈등의 상징인 독도 및 역사교과서 왜곡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양국 정부간 협상에 역사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상술한 두 가지의 요인은 양국 정부간 FTA 협상에서 핵심 쟁점사항인 상품 시장 개방을 둘러싼 협의에 그대로 반영됨에 따라, 6차 협상에 이르기까지 양국간 상품 양허안 교환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일 양국의 FTA 체결에 대한 시급성이 초기단계에 비해 약화된 점도 지적할 수 있지만, 일본의 자국 기업 및 산업계의 입장 옹호와 상호 양허 이익의 균형을 위한 노력 부족에 기인하는 측면 또한 크게 작용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 나.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

한·일간 무역 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국 교역규모의 확대가 한국의

대일무역적자 확대에 연계되는 만성적인 대일무역적자 구조가 정착되었고, 그 결과 1960~2006년 기간까지의 대일 누적적자 규모는 총 2,896억 달러 수준까지 도달하였다.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한·일 FTA가 체결될 경우 일본에는 대한 수출시장의 확대를 기대하게 하는 반면, 한국에는 무역수지 적자의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처럼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양국간 최대 통상현안이자, 한·일 FTA 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최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일무역적자는 부품·소재의 대일의존도가 높게 나타나는 산업 및 무역 구조에 기인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일본의 지나친 기술보호주의, 기술 장벽, 검역 등의 복잡한 통관절차 등이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대일무역적자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일본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인 정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 왔다. 1970~80년대 기간 동안 대일 수입비중 감소 및 수입대체를 위해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통한 대일수입 제한조치를 실시해 왔고, 1980년대 중반 이후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5개년 계획 등을 통한 자본재 수입대체전략을 추진해 왔다. 1990년대 들어서는 기존 수입대체 위주의 정책 이외에도 대일수출 진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1999년 이후부터 최근까지는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상기의 한국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결과물인 대일무역역조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한국기업의 입장에서 각각 대일시장진출을 제고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된다. 정부 차원에서는 무역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대일무역적자를 양국간 무역 불균형의 차원에서 논의하기보다는 다자간 무역 균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대일적자를 대세계 무역흑자로 보전한다는 사고의 전환이 요구되며, 양국간 무역원활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경제의 경기회복을 배경으로 일본시장 진출의 기회가 증가되고 있으나, 그러한 기회의 대부분을 중국에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기

업 차원에서는 대일 역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제품의 시장경쟁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일본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는 한편 대일수출 유망품목의 발굴이 시급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 다. 낮은 수준의 투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미국이나 EU에서 시장지향형 투자, 아시아지역에서는 비용절감형 투자가 기본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대아시아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대한투자 규모는 1962~2006년까지의 누계기준으로 195억 달러로 교역규모가 비슷한 미국, EU에 비해 저조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대한투자 수준이 낮은 이유는 시장규모가 작고 생산비용 면에서 아시아 개도국에 비하여 비교우위가 낮으며, 지리적 근접성으로 투자보다는 무역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일본 측은 불안정한 노사관계, 제도의 불투명성과 자의적 운용, 그리고 행정절차의 복잡성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의 대한투자는 일본기업의 투자전략 변화와 투자환경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투자비중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직접투자를 통한 기술이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일본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본기업이 느끼고 있는 투자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최근에는 일본의 대한투자가 액정,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의 주력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대기업간 기술 제휴, 합작회사 설립, 부품의 상호 조달 등을 통하여 변모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러한 투자유치 전략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관련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특화된 투자환경 개선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라. 산업 · 기술 협력 부문

일본은 지난 10여 년 동안의 장기불황을 경험하면서 과거와 달리 자국 산업의 기술 및 제품의 경쟁력 우위 유지의 중요성을 터득하여 총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강해졌다. 이러한 경향은 2004년 발간된 ‘통상백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일본정부는 통상백서를 통해 자국 기업 및 산업의 기술 보호와 이를 통한 국익 확보를 위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변화가 비단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으나, 이를 반영하듯 2004년 한 · 일 양국간에는 기업간 특허분쟁이라는 통상 마찰이 발생하면서 양국 통상관계에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또한 일본은 한 · 일 FTA 협상에서도 우리의 기술이전 촉진 요구에 난색을 표명함으로써 한국의 기술력 향상에 대비한 일본의 초조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변화에 조용하듯이, 양국간 산업 · 기술협력은 새로운 틀 안에서 재정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직접 투자보다는 전략적 제휴 방식으로, 직접적인 기술이전보다는 지재권 협력의 강화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양국간 기업 차원의 공동기술개발, 산업협력 등을 통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기업이 우려하는 기술보호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지재권 강화 노력이 요구된다.

## 3. 소결

한 · 일간 무역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협력을 살펴본 결과, 양국간 경제협력의 패턴은 보완적 관계와 경쟁적 관계가 강화되는 가운데, 일본이 한국에 있어 수출시장과 투자유치라는 측면에서의 중요성은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부상으로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 · 일 양국간 경제협력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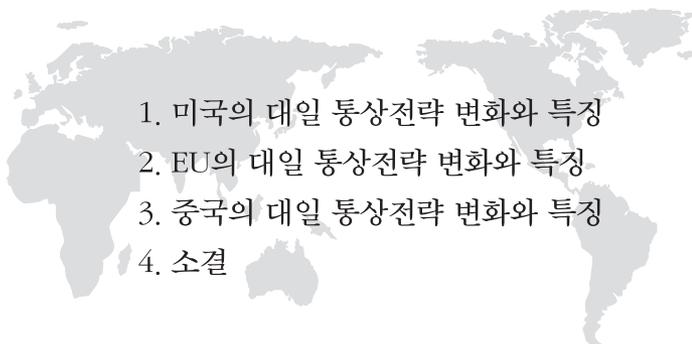
화의 필요성이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한·일간 주요 통상현안으로는 교착상황의 FTA 협상,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 낮은 수준의 투자, 산업 및 기술이전의 부족 문제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한·일 FTA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로는 양국간 FTA 전략의 변화와 농산물을 중심으로 상품 양허안 교환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 기인한다. 하지만 한·일 FTA는 양국간 경제협력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동북아 분업구조 및 동아시아경제는 물론 세계경제의 변화에 부합하는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일 양국은 전략적 차원에서도 상호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양국간 협상에 있어 세부현안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협조와 이해를 도출하는 자세로 변화되는 것이 급선무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수출촉진, 투자유치 및 산업 및 기술이전 촉진 등 통상현안과 관련하여 한·일 경제 어젠다 21, 한·일 IT 협력 이니셔티브, 한·일 투자협정, 한·일 관세상호지원협정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경제협력이 제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협력방식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요구된다. 대일무역적자 문제는 대세계 수출증대로 해결하고자 하는 전략의 전환이 요구되며, 양국 기업간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하여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에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투자와 기술이전 문제는 직접적인 투자·기술의 유치를 요구하는 자세에서 탈피하여 양국간의 친밀한 인력교류를 발판으로 하는 새로운 단계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제4장

# 주요국의 대일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1.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2. EU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3.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4. 소결

## 주요국의 대일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 1.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 가. 개관

미국의 대외통상정책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1970년대 이후 경제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제무역체제가 보호무역주의 성향으로 변화되었다. 특히 미국은 1970년대 국제정치, 교역 등에서 상대적으로 지위가 하락하면서 국익을 우선하고 보호주의를 강화하는 강력한 통상정책을 구사하였다. 이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1974년 포드 정권 하에서 불공정무역에 대한 보복 가능, 반덤핑 상계관세제도의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통상법(Trade Act of 1974)이 제정되었다. 1980년대에는 미국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보호주의 요구가 더욱 강화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차별적인 통상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즉 미국의 대외노선과 마찰을 빚는 국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통상압력을 가하고, 협조적이거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국가에게는 유화적인 통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sup>16)</sup>

한편 1940년대 후반 다자간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면서 GATT 체제를 주도했

16) 오승구(2002), pp. 5~10.

던 미국은 1980년대 이후에는 UR협상의 진척이 순조롭지 못하자 양국간 협상 및 지역주의의 공세를 강화하였다. 현재 미국은 무역자유화의 수단으로서 기본적으로 WTO 다자기구(multilateral)를 통해 통상현안에 접근하면서 동시에 지역(regional), 양자간(bilateral)이라는 세 가지의 접근방식을 보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미국은 일본과 극심한 통상마찰을 겪었다. 미국의 대응방향은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대미수출이 급증하는 일본의 개별 품목에 대한 수입 규제가 중심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일본의 수입확대(시장개방) 및 구조개혁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양국간 무역 마찰에서 협조의 관계로 다시 한번 전환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미·일간 무역 및 투자 현황, 그리고 양자간 통상마찰의 주요 내용을 시기별로 검토한 다음 미·일 FTA 논의의 경과와 전망을 고찰하고, 마지막으로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을 도출하기로 한다.

#### 나. 최근 양국간 무역 및 투자 현황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인 미국에서 일본은 캐나다, 중국,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NAFTA 회원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를 제외하면 일본은 2001년까지 최대 대미 수출국이었으나 2002년부터는 중국이 일본을 앞지르게 되며, 전체 교역액 측면에서도 2003년부터는 같은 양상을 보이게 된다. 2006년 미국의 교역총액에서 대일은 2,119억 달러, 대중은 3,610억 달러였다. 미국의 대일 무역적자는 926억 달러인 데 반해, 대중 무역적자는 2,506억 달러로 미국 무역적자의 1/4 이상(28.4%)을 차지하였다(7년 연속 최대 적자). 이처럼 중국의 대두로 인해 미국의 대세계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에 있다.

[표 4-2]는 HS 코드 4단위를 기준으로 한 미국의 대일 품목별 수출 현황을

표 4-1. 미국의 연도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1991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전 세계	수출	4,216	5,830	7,803	7,310	6,932	7,236	8,179	9,043	10,370
	수입	5,089	7,708	12,581	11,801	12,023	13,051	15,253	17,323	19,190
	무역수지	-874	-1,879	-4,777	-4,491	-5,091	-5,815	-7,074	-8,280	-8,820
	수출입	9,305	13,538	20,384	19,111	18,955	20,287	23,432	26,367	29,560
일본	수출	481	643	653	576	514	521	544	554	596
	(%)	(11.4)	(11.0)	(8.4)	(7.9)	(7.4)	(7.2)	(6.7)	(6.1)	(5.8)
	수입	957	1,272	1,506	1,297	1,246	1,212	1,333	1,420	1,522
	(%)	(18.8)	(16.5)	(12.0)	(11.0)	(10.4)	(9.3)	(8.7)	(8.2)	(7.9)
	무역수지	-476	-629	-854	-721	-732	-692	-789	-865	-926
	수출입	1,438	1,915	2,159	1,873	1,761	1,733	1,877	1,974	2,119
중국	수출	63	117	163	192	221	284	347	418	552
	(%)	(1.5)	(2.0)	(2.1)	(2.6)	(3.2)	(3.9)	(4.2)	(4.6)	(5.3)
	수입	203	485	1,076	1,094	1,335	1,633	2,105	2,598	3,058
	(%)	(4.0)	(6.3)	(8.6)	(9.3)	(11.1)	(12.5)	(13.8)	(15.0)	(15.9)
	무역수지	-140	-368	-914	-901	-1,114	-1,348	-1,758	-2,180	-2,506
	수출입	266	603	1,239	1,286	1,555	1,917	2,452	3,017	3,610
캐나다	수출	851	1,260	1,764	1,637	1,608	1,695	1,891	2,114	2,302
	(%)	(20.2)	(21.6)	(22.6)	(22.4)	(23.2)	(23.4)	(23.1)	(23.4)	(22.2)
	수입	936	1,483	2,327	2,201	2,139	2,276	2,597	2,919	3,077
	(%)	(18.4)	(19.2)	(18.5)	(18.7)	(17.8)	(17.4)	(17.0)	(16.8)	(16.0)
	무역수지	-85	-223	-563	-564	-531	-581	-706	-804	-775
	수출입	1,787	2,743	4,091	3,838	3,747	3,971	4,488	5,033	5,380
멕시코	수출	332	463	1,117	1,015	975	975	1,108	1,200	1,341
	(%)	(7.9)	(7.9)	(14.3)	(13.9)	(14.1)	(13.5)	(13.5)	(13.3)	(12.9)
	수입	318	627	1,374	1,328	1,361	1,397	1,578	1,725	2,005
	(%)	(6.2)	(8.1)	(10.9)	(11.3)	(11.3)	(10.7)	(10.3)	(10.0)	(10.4)
	무역수지	15	-164	-257	-313	-386	-422	-470	-524	-664
	수출입	650	1,091	2,492	2,343	2,337	2,372	2,686	2,925	3,346

주: ( )는 미국의 수출 및 수입 총액에서 차지하는 각국의 비중임.

자료: UN Comtrade.

보여준다. 2006년 현재 미국의 대일수출 상위 10대 품목은 기타 항공기, 항공기부품, 옥수수, 의료용기기, 반도체, 기타 제품, 컴퓨터, 터보제트 · 터보프로펠

표 4-2. 미국의 대일수출 상위 10대 품목 추이(2002~06년) ▮

(단위: 억 달러, %)

순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품목	금액	비중												
1	반도체 (전자집적회로)	25.2	6.6	기타 항공기	27.0	11.1	기타 항공기	31.5	12.1	기타 항공기	32.7	10.3	기타 항공기	36.9	8.1
2	항공기부품	20.8	14.2	반도체 (전자집적회로)	21.6	5.2	반도체 (전자집적회로)	19.9	4.6	항공기부품	19.2	10.9	항공기부품	21.5	10.4
3	컴퓨터 (자동자료처리장비)	17.8	8.2	항공기부품	21.3	14.3	옥수수	18.9	30.8	기타 제품	18.8	6.3	옥수수	19.8	27.2
4	기타 항공기	17.1	5.9	컴퓨터 (자동자료처리장비)	16.5	7.6	항공기부품	18.5	11.8	의료용기기	18.8	13.3	의료용기기	19.0	12.0
5	옥수수	15.6	30.4	의료용기기	16.0	14.6	의료용기기	17.3	14.1	옥수수	15.9	31.6	반도체 (전자집적회로)	17.5	3.8
6	의료용기기	15.3	15.3	옥수수	16.0	32.2	컴퓨터 (자동자료처리장비)	15.7	6.5	컴퓨터 (자동자료처리장비)	15.1	6.0	기타 제품	16.3	5.0
7	기타 제품	13.8	6.1	기타 제품	13.7	6.0	기타 제품	15.4	6.3	반도체 (전자집적회로)	14.9	3.5	컴퓨터 (자동자료처리장비)	15.2	5.7
8	터보제트, 터보 프로펠러	12.3	7.5	차량부품	10.6	3.8	터보제트, 터보 프로펠러	12.6	6.7	터보제트, 터보 프로펠러	12.6	5.8	터보제트, 터보 프로펠러	14.8	6.5
9	차량부품	12.1	4.2	터보제트, 터보 프로펠러	10.5	6.8	대두	10.1	15.1	돼지고기	10.6	51.3	돼지고기	10.1	45.3
10	사무용기기 부품	10.9	6.5	사무용기기 부품	10.0	5.4	사무용기기 부품	9.5	5.1	시가 (담배)	8.8	69.8	기계제품	9.5	10.3
합계		160.9	2.3		163.2	2.3		169.4	2.1		167.4	1.9		180.6	1.7

주: 1) 순위 1~10의 각 연도 비중은 해당 품목의 대일수출액이 그 품목의 전 세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2) 합계의 비중은 상위 10대 품목의 대일수출액이 각 연도 미국의 전 세계 총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UN Comtrade(HS code 4단위 기준).

러, 돼지고기, 기계제품의 순으로, 총액은 180.6억 달러이다. 이들 품목의 수출액이 미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2002년의 2.3%에서 최근 5년간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미국 교역에서의 일본의 비중 감소와 맥을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대일수출 상위 10대 품목에서는 1~8위 품목의 순위 변화만 있는 가운데, 2002년의 차량부품, 사무용기기 부품이 제외되고 2006년에는 돼지고기, 기계제품이 추가되었다. 2006년 기준 옥수수와 돼지고기의 경우 미국의 전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일수출의 비중은 각각 27.2%, 45.3%로, 이들 품목의 대일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미국의 대일 품목별 수입 현황은 [표 4-3]과 같다. 최근 5개년간 미국의 최대 대일 수입품목은 승용차와 자동차부품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6년 현재 미국의 대일수입 상위 10대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부품, 사무용기기 부품, 기타 제품, 송수신기 등, 중장비(불도저 등), 컴퓨터, 모터사이클(오토바이), 엔진제품, 반도체의 순으로, 총액은 808.8억 달러이다. 이들 품목이 미국의 전 세계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로, 2002년의 5.8%에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대일수입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이 감소하는 현상은 수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04년부터 불도저, 앵글도저 등 중장비의 대일수입이 크게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입의존도(2006년 52.6%)도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컴퓨터와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대일 수출 및 수입 모두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 내 무역의 긴밀도(HS 4단위 기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미·일 양국간 투자동향(잔액 기준)을 살펴보면 [표 4-4] 및 [표 4-5]와 같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내외 직접투자에서 일본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6년 현재 미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직접투자(ODI)에서 일본의 비중은 각각 11.8%(2,110억 달러), 3.8%(918억 달러)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의 입장에서 미국은 최대 외국인직접투자국인 동시에 해외직접투자국이다. 일본의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미국의 투자잔액은 2006년 현재 약 420억 달러로 전체 대내투자(inward)의 39.0%를

표 4-3. 미국의 대일수입 상위 10대 품목 추이(2002~06년) ■

(단위: 억 달러, %)

순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품목	금액	비중												
1	승용차와 기타 차량	358.5	30.9	승용차와 기타 차량	329.2	28.3	승용차와 기타 차량	329.6	26.5	승용차와 기타 차량	359.0	28.6	승용차와 기타 차량	445.1	32.4
2	자동차 부품	70.9	23.5	자동차 부품	75.3	22.7	자동차 부품	92.5	24.1	자동차 부품	96.0	22.5	자동차 부품	90.6	20.4
3	컴퓨터 (자동차료 처리장비)	46.6	9.1	사무용기기 부품	45.2	18.1	사무용기기 부품	49.5	16.5	사무용기기 부품	52.0	16.8	사무용기기 부품	51.1	14.6
4	송수신기/TV·디지털·비디오카메라	44.1	19.4	송수신기/TV·디지털·비디오카메라	43.4	17.2	송수신기/TV·디지털·비디오카메라	44.5	14.1	송수신기/TV·디지털·비디오카메라	46.7	13.1	기타 제품	45.6	7.7
5	사무용기기 부품	43.2	17.5	기타 제품	35.7	7.4	기타 제품	37.2	7.4	기타 제품	39.9	7.2	송수신기/TV·디지털·비디오카메라	42.2	11.0
6	기타 제품	36.5	7.4	컴퓨터 (자동차료 처리장비)	34.6	6.5	컴퓨터 (자동차료 처리장비)	32.4	5.3	엔진제품	28.3	29.0	반도체 등 중장비	30.6	52.6
7	엔진제품	30.4	36.3	엔진제품	28.2	32.6	엔진제품	26.5	28.6	컴퓨터 (자동차료 처리장비)	28.2	4.4	컴퓨터 (자동차료 처리장비)	28.8	4.2
8	반도체 (전자집적 회로)	21.8	9.5	의약품	20.0	8.7	TV수신기기	23.5	14.4	반도체 등 중장비	26.8	49.6	모터사이클	27.9	73.4
9	게임제품	21.1	35.1	TV수신기기	19.9	16.3	반도체 (전자집적 회로)	22.0	9.6	모터사이클	26.4	72.9	엔진제품	23.7	28.9
10	모터사이클	18.9	77.6	반도체 (전자집적 회로)	19.0	8.9	반도체 등 중장비	21.4	48.8	반도체 (전자집적 회로)	19.9	9.1	반도체 (전자집적 회로)	23.2	10.1
합계		692.0	5.8		650.4	5.0		679.2	4.5		723.3	4.2		808.8	4.2

주: 1) 순위 1~10의 각 연도 비중은 해당 품목의 대일수입액이 그 품목의 전 세계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2) 합계의 비중은 상위 10대 품목의 대일수입액이 각 연도 미국의 전 세계 총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임.

자료: UN Comtrade(HS code 4단위 기준).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해외직접투자(ODI) 잔액은 2006년 1,564억 달러

로 전체 해외투자(outward)의 34.8%를 차지하여 미국에 가장 많이 투자되고 있다. 한편 연도별로 일본의 대내외 직접투자의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2년 일본의 FDI와 ODI에서 미국의 비중이 각각 45.5%, 44.6%였으나, 2006년 현재 각각 39.0%, 34.8%로 하락하였다.

■ 표 4-4. 연도별 미·일 간 직접투자 현황 ■

(단위: 억 달러,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미국 (\$)	외국인직접투자 (inward)	일본	1,474 (11.1)	1,572 (11.3)	1,745 (11.5)	1,887 (11.8)	2,110 (11.8)
		전체	13,272 (100.0)	13,952 (100.0)	15,203 (100.0)	15,945 (100.0)	17,891 (100.0)
	해외직접투자 (outward)	일본	665 (4.1)	578 (3.3)	691 (3.3)	793 (3.7)	918 (3.8)
		전체	16,165 (100.0)	17,696 (100.0)	21,248 (100.0)	21,355 (100.0)	23,840 (100.0)
일본 (¥)	외국인직접투자 (inward)	미국	357.4 (45.5)	366.1 (40.8)	408.7 (42.0)	438.9 (43.3)	419.9 (39.0)
		전체	784.9 (100.0)	898.4 (100.0)	973.0 (100.0)	1,013.2 (100.0)	1,076.6 (100.0)
	해외직접투자 (outward)	미국	1,361.9 (44.6)	1,391.9 (41.4)	1,423.0 (38.3)	1,501.5 (38.7)	1,564.1 (34.8)
		전체	3,055.8 (100.0)	3,359.1 (100.0)	3,717.6 (100.0)	3,882.0 (100.0)	4,496.8 (100.0)

주: 각 투자금액은 잔액 기준이며, ( )는 전체에 대한 비중임.

자료: 미 상무성(www.bea.gov); JETRO(www.jetro.or.jp).

또한 업종별 미·일 양국간 투자동향을 살펴보면, 미국의 대일 직접투자(2006년 잔액 기준 918억 달러)에서 금융보험업 부문이 448억 달러(48.8%)로 가장 많으며, 이어서 도매업(83억 달러, 9.0%),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74.5억 달러, 8.1%)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 전체로는 173억 달러가 투자되어 미국의 대일투자에서 18.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전 세계 업종별 직접투자에서 일본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부문으로는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13.0%), 금융보험업(9.2%) 등이다.

반면 일본의 입장에서 대미투자(2006년 잔액 기준 18.6조 엔)는 제조업의 비중이 63.8%(11.9조 엔), 비제조업이 36.2%(6.7조 엔)로, 제조업에 대한 대미투자가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운송기계(4.8조 엔, 25.6%), 전기기계(2.6조 엔, 13.8%), 도소매(2.5조 엔, 13.3%), 화학·의약(2.3조 엔, 12.2%), 금융

표 4-5. 미·일 간 업종별 직접투자 현황(2006년)

(단위: 백만 달러, %, 억 엔)

미국 ↓ 일본	미국 ↓ 일본	금융보험	제조업	화학	도매업	전문·기술 서비스업	기타	합계
		44,799 (48.8) (9.2)	17,267 (18.8) (3.4)	4,667 (5.1) (3.6)	8,298 (9.0) (5.1)	7,448 (8.1) (13.0)	13,957 (15.2) (1.2)	91,769 (100.0) (3.8)
일본 ↓ 미국	일본 ↓ 미국	도소매업	제조업	운송장비	컴퓨터, 전자제품	금융보험	기타	합계
		92,683 (43.9) (32.5)	65,866 (31.2) (11.1)	26,452 (12.5) (38.2)	13,007 (6.2) (23.8)	16,799 (8.0) (6.5)	35,648 (16.9) (5.5)	210,996 (100.0) (11.8)

일본 ↓ 미국	일본 ↓ 미국	제조업				비제조업			합계
		화학 의약	전기 기계	운송 기계	도소매업	금융보험 업			
118,679 (63.8) (38.0)	22,714 (12.2) (45.7)	25,608 (13.8) (37.4)	47,547 (25.6) (49.8)	67,325 (36.2) (30.3)	24,661 (13.3) (41.2)	22,243 (12.0) (23.1)	186,004 (100.0) (34.8)		
미국 ↓ 일본	미국 ↓ 일본	제조업			비제조업			합계	
		화학의약	전기기계	금융 보험업	통신업	도소매업			
24,501 (49.1) (43.5)	2,900 (5.8) (19.6)	18,498 (37.0) (91.2)	25,432 (50.9) (35.5)	16,995 (34.0) (39.3)	3,227 (6.5) (39.0)	2,964 (5.9) (31.1)	49,933 (100.0) (39.0)		

주: 1) 각 투자액은 잔액 기준.

2) ( )에서 위쪽은 합계에서 차지하는 각 업종의 비중이며, 아래는 업종별로 미국(일본) 전체 직접투자에서 일본(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미 상무성(www.bea.gov); 일본은행 국제수지통계(www.boj.or.jp).

보험업(2.2조 엔, 12.0%) 등의 순으로 대미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운송 기계부문의 경우 일본의 해외투자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49.8%)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일본에 유입되는 미국투자 가운데 제조업이 49.1%(2.4조 엔), 비제조업이 50.9%(2.5조 엔)로, 양자간에 비슷한 규모로 투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대일투자 가운데 업종별로는 전기기계(1.8조 엔, 37.0%), 금융보험업(1.7조 엔, 34.0%)이 현저하게 많은 편이다. 특히 일본의 전기기계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미국이 대부분(91.2%)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다. 양자간 통상 현안

현재 미·일 무역관계는 미국산 쇠고기의 대일 수출문제를 제외하고는 긴박한 현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물론 WTO에서의 분쟁처리절차나 미국의 「대외무역장벽보고서」 및 일본의 「불공정무역보고서」 등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반덤핑 관련 및 기타 무역 이슈가 거론되고는 있다.<sup>17)</sup>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약 반세기 동안 미·일 경제관계는 초기 일본경제의 부흥을 위해 미국이 지원한 시기를 제외하면 가히 통상마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후 미·일 통상마찰은 문제발생이나 그 대응 면에서 몇 번의 전환점을 경험하였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미·일 통상마찰의 변천과정을 고찰한다.<sup>18)</sup>

##### 1) 1950~60년대

이 시기 미·일 통상마찰은 주로 일본의 집중호우형 수출과 이에 대한 미국의 수입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일본의 집중호우형 대미수출은 예컨대

17) 2007년 3월 발표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07년 통상정책 어젠다와 2006년 연차보고서」(2007 Trade Policy Agenda and 2006 Annual Report)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의 대일수출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그리고 통신, 금융 등의 여타 부문에서 일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18) 靑木・馬田 編(2006), pp. 130~137.

1950~52년의 2년간 면직물에서 40배, 블라우스에서 250배 증가하는 등 여러 부문에서 급증하였다. 1950년대는 일본 중소기업에서 생산된 경공업제품의 대미수출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 즉 국내의 과당경쟁이 해외시장으로 파급되는 패턴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 시기의 주된 마찰품목은 냉동참치, 참치통조림, 손수건, 면제품, 금속양식기, 도자기, 비치샌들, 재봉틀, 합판, 가발, 완구 등 주로 경공업분야였다. 한편 1960년대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집중호우형 수출이 발생하였다. 즉,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라 제조업 및 무역업의 기업 집약화와 과점화가 진행되면서 규모경제의 추구하고 점유율 확보를 노리고 미국 시장에 수출이 집중되는 이른바 밴드왜건 효과(bandwagon effect)가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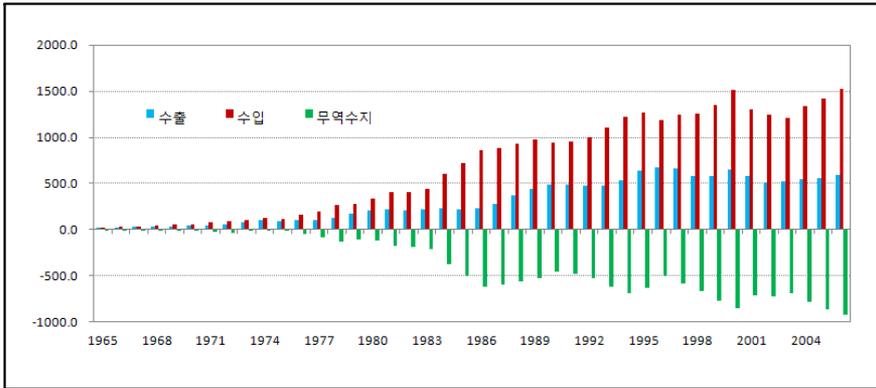
이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 대응으로서 수출자율규제(Voluntary Export Restraints: VER)가 채택되었다. 일본의 집중호우형 수출이 발생하면 미국에서는 덤핑제소, 수입제한법안의 의회 상정 등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국제적 수단인 GATT 제19조(발동국에 대한 면책조항으로서 safeguard 발동이나 반덤핑, 상계관세 부과)는 피해입증, 보상의무 및 보복가능성의 측면에서 미국의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 적용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선별적인 수입규제 조치로서 수출자율규제(VER)가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도 수출자율규제가 선호되었다. 왜냐하면 GATT를 통해서는 교섭의 장기화나 강제력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이 희박하고, 수입규제에 비해 수출자율규제의 경우 수출확대를 위한 교섭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출자율규제는 산업부문별로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다.

## 2) 1970~80년대 전반

1970년대 일본경제는 고도 성장기의 양적 확대로부터 질적 심화의 단계에 들어서게 된다. 일본의 산업구조는 1960년대까지의 합섬, 석유화학, 철강 등 자본집약형 소재산업에서 컬러TV, 공작기계, 자동차 등 기술집약형 가공조립산업으로 그 중심이 이행하였다. 이후 이들 부문을 중심으로 미국에 대한 일본의

그림 4-1. 미국의 대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단위: 억 달러)



자료: UN Comtrade.

표 4-6. 미·일 간 통상마찰의 변천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섬유	VER (57) STA (61) LTA (62)		마일 섬유협정 (71)			MFA (74-----91)			
철강	VER (66-----69-----74)				특수강 VER (76-----80,		83-----92) (85-----89--92)		
TV	AD관세 (68)			VER (77--80)					
공작기계	최저가격규제 (78-----87) VER (87-----93)								
농산물	최고기감관류: 제1차 협정 (78-----83) 제2차 (84--88) 제3차 (88-91) 자유화 (91)								
자동차 자동차부품	VER (81-----85-----94)						MOSS: 부품 (86) 자동차 (91) 포괄협정의 (93-95)		
정부 조달				NIT (80)			슈퍼컴퓨터 (87) 인공지능(90)		
서비스	금융: 엔달러위원회 (83-84) 건설: 간사이공항입찰문제 (86) 협정 (88 91 94) 기타: 외국인번호사 (87) 자동차전화 (89 94)								
VER: 수출자유규제 STA: 단기협정 LTA: 장기협정 MFA: 국제섬유협정 AD: 반덤핑관세 MOSS(Market-Oriented Sector-Specific): 패키지 협상 *: 대미수출 마찰 ** : 대일시장개방 마찰 *** : 양자 모두의 마찰	반도체		AD (85) 제1차협정 (86) 보부관세 (87) 제2차협정 (91) 제3차협정 (96)						
	MOSS 협의		개시 (85)						
	구조협의를								
	포괄협의를		보험: 포괄협정의 합의 (94) 최종합의 (95) 규제완화: NTT상호접속료 인하 (2000)						

자료: 池間 誠 · 大山道廣(2002).

무역흑자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 시기 미·일 통상마찰의 전형적인 해결패턴은 앞서 언급한 수출자율규제(VER) 이외에 현지생산화가 주를 이루었다. 특히 현지생산화의 촉진에는 엔고가 작용하였다. 1970년대 초반 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 일본경제는 세 차례의 엔고를 경험하였는데, 첫째는 1970년대 초 변동환율제로의 이행기, 둘째는 1970년대 말, 그리고 셋째는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이다. 모두 직접투자가 확대한 시기로, 이는 엔고로 인하여 수출가격이 상승하는 한편, 임금이나 공장용지 등 해외에서의 생산가격이 일본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졌기 때문이다. 첫째 엔고시기에 컬러TV의 대미진출이 준비되고(1974년부터 현지생산), 둘째 시기에는 자동차의 대미진출이 준비되었다.(82년부터 현지생산) 더욱이 현지로부터의 요청도 있었다. 미국 내에서의 소형차 부족, 임금비용 측면에서의 컬러TV 생산축소 등 국내공급이 항상 부족하였고, 고용확대를 위한 요청에 따라 현지생산화는 수출마찰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

### 3) 198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 중반의 엔고로 인하여 일본의 잠재적 시장규모는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수입은 그 정도로 확대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시장개방에 대한 요구가 커지게 되었다. 일본의 GNP가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5년 9.7%에서 1990년에는 13.2%까지 확대된 반면, 오히려 수입은 7.5%에서 6.9%로 축소되었다. 이와 같은 일본의 수입 부진과 함께 거액의 경상수지흑자도 문제가 되었다. 즉, 과거 개별산업에서의 무역마찰에서 총체적 무역(경제)마찰 문제가 추가되면서 거시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강해졌다. 일본의 경상수지흑자는 1981년에 48억 달러였으나, 1985년에는 492억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후 1987년에는 870억 달러까지 확대되었다. 그때까지 역사상 최대 경상수지흑자는 1980년 사우디아라비아의 414억 달러로, 당시 거대한 오일머니를 어떻게 세계에 환원해 나갈 것인가가 문제시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대규모 경상수지흑자 이슈도 세계적인 논

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이 시기에 일본과의 통상마찰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이전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즉, 일본의 시장개방에 중점을 두으로써 단순한 수입확대가 아닌 수입구조 개선을 통해 수입이 실질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일본에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특히 농산물, 건설, 반도체, 자동차부품 등의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은 규제완화, 유통개선 등 일본시장의 경제후생 향상과 함께 수입의 수치 목표화 등 결과주의적인 것을 병행하여 요구했으며, 절충적 타협이 아닌 경제논리에 입각한 교섭이 과거보다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과의 통상마찰에서 미국의 대응형태는 총체적 무역 마찰을 배경으로 한 포괄 협의라고 말할 수 있다. 과거와 달리 포괄 협의에서는 일본의 무역뿐만 아니라 그 무역의 배경에 있는 생산·소비, 법률·제도, 정책, 상관습 등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말하자면 무역의 존립기반을 일괄적으로 문제시 하였다. 또한 사후점검(follow-up)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약속뿐만 아니라 실행도 감시해 나갔다.

#### 4) 1990년대 중반 이후

21세기를 맞이하면서 미·일간 무역관계는 마찰에서 협조의 시대로 변화되고 있다. 미·일간 무역마찰이 감소한 원인은 기본적으로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에 있다. 첫째, 1995년 WTO의 성립에 따라 GATT 시대와 비교해 국제무역의 법지배가 크게 강화되었다. 수출자율규제나 다자간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등 이른바 회색조치가 해소되고, 서비스 및 농업 무역 등 과거 GATT에서는 대응되지 않았던 분야가 WTO로 포함됐으며, 또한 분쟁처리절차 제도의 강화로 인하여 통상문제는 WTO에서 일원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가속화되었다.

둘째, WTO에 의한 전 세계 차원에서의 자유화를 보완·가속화하는 FTA의 역할이 높아지고, FTA를 체결하는 움직임이 최근 세계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FTA는 무역·투자의 자유화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그 세계적인 진전은 무역

표 4-7. WTO를 통한 미·일 간 분쟁조정 사례

■ 미국의 대일 제소 사례

- 사과화상병 (과수 및 화목류에 침투한 병해로 인해 감염된 식물은 꽃이 싹고 고사함.)
  - 1994년 8월 미국산 사과수입 해금 시 화상병의 침입방지를 위해 검역조치를 부과했는데, 미국은 일본의 조치가 과잉이라고 하여 2002년 6월 패널 설치. 2003년 12월 WTO 위반 확인, 2005년 8월 개정조치 시행

■ 일본 대미 제소 사례

- 철강세이프가드
  - 2002년 3월 미국은 철강제품 관련 14개 품목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 2003년 11월 상급위원회는 해당 조치의 WTO 협정 위반을 인정하는 패널판단을 지지, 동년 12월 미국은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의 완전 그리고 즉시 철폐를 발표
  - 1916년 덤핑방지법 (덤핑의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는 법률)
  - 2000년 9월 WTO 협정 위반 확정. 2004년 12월 미국에서 동법의 폐지법 성립. 그러나 폐지법에는 소급적용이 없었음. 2006년 6월 일본기업에 대해 동법을 적용하여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됨.
- 버드수정조항(Byrd Amendment) (덤핑방지세 등에 의해 미국정부가 획득한 세수를 미국 내 기업에 분배하는 것을 정한 미 국내법)
  - 2003년 1월 WTO 협정 위반 확정. 2005년 9월 미국에 동 조항의 폐지를 촉구하기 위해 대항조치를 발동. 2006년 2월 미국에서 동 조항의 폐지법이 성립됐지만, 2007년 10월 1일 전까지 미국에 수입된 물품에 대한 덤핑방지세 등은 계속해서 동 조항에 근거하여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WTO 협정 위반 상태가 지속. 2006년 9월 WTO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대항조치를 1년간 연장
- 열연강판덤핑방지조치
  - 일본제 열연강판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세 부과와 관련하여, 2001년 8월 동 조치 및 그 근거로 된 미 국내법의 WTO 협정 위반 확정. 위반 시정조치로서 미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하나, 여전히 미 실시
- 덤핑마진 계산방법 (제로잉: 반덤핑 조치를 위해 덤핑마진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등장하는 개념)
  - 제로잉은 WTO 협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일본은 WTO에 제소. 양국간 협의를 거쳐 2005년 2월 WTO 패널이 설치되었고, 일본의 주장 가운데 일부가 인정됨. 일본은 동년 10월에 상급위원회에 상소, 2007년 1월 위반 확정의 보고 공표

자료: 日本 外務省 주관 「北米地域との經濟關係強化の方途に関する研究会」의 내부자료 (2007. 3).

마찰의 온상인 보호주의를 억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셋째, 미·일 양국간 무역에 있어 중국의 대두를 들 수 있다. 특히 미국시장의 경우, 일본은 1991년까지 국별 수입액으로 1위였으나, 그 후 캐나다, 멕시코

코, 중국에 뒤처져 2006년 현재 4위로 하락했다. 또한 앞서 미국의 무역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미국의 최대 무역적자국은 일본이 아닌 중국이다. 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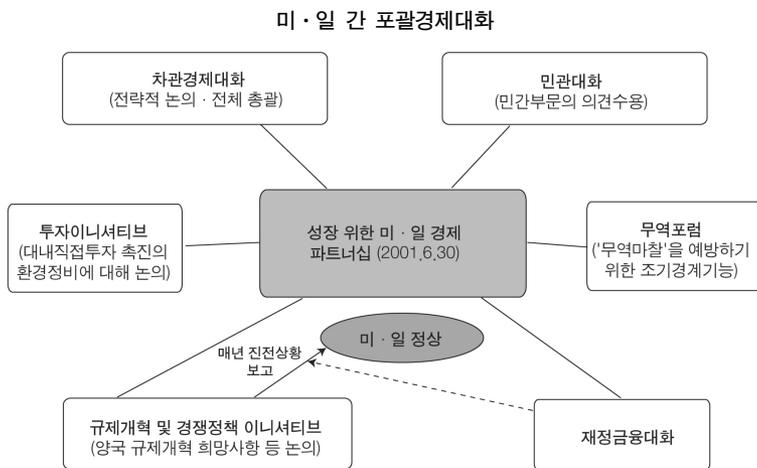
▮ 표 4-8. 미·일 간 제도적 경제협력 현황 ▮

■ 경제관계에 관한 미·일 간 주요 조약(괄호 안은 발효일)

- 민간항공운송협정(1953. 9. 15)
- 우호통상항해조약(1953. 10. 30)
- 투자보장협정(1954. 5. 1)
- 조세조약(1955. 4. 1 / 1972. 7. 9 / 2004. 3. 30)
- 사증면제체결(1988. 12. 15)
- 세관당국간상호지원협정(1997. 6. 17)
- 독금협력협정(1999. 10. 7)
- 사회보장협정(2005. 10. 1)
- 미·일상호승인협정(교섭 중)

■ 미·일 간 포괄경제대화의 틀

2001년 6월 미·일 간 정상회담에서 제안된 「성장을 위한 미·일 경제 파트너십」에 따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대화의 틀은 ① 차관경제대화, ② 민관회의, ③ 규제개혁 및 경쟁정책 이니셔티브, ④ 투자이니셔티브, ⑤ 재정금융대화, ⑥ 무역포럼의 여섯 가지로, 양국간 투자, 정부조달, 경쟁, 비즈니스 환경의 정비 등에 대해 긴밀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료: [표 4-7]과 동일.

위안화의 절상문제나 대중국 섬유세이프가드 등 중국 관련 통상마찰이 중심이 되면서 대일 적자문제는 그다지 주목을 끌지 않게 되었다.

넷째, 일본시장의 개방 정도이다. 2000년 이후에도 무역흑자는 1,000억 달러에 육박하고 있으나, 일본의 생산구조는 플라자 합의로 인한 엔고 이후 수입의존이 진행되고 있고, 제품수입과 해외생산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상을 정리하자면, 과거 미·일간 무역마찰은 ‘우연’이 아닌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였다. 특히 양국간의 빈번한 통상마찰은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표 4-8]에서 보듯이 그동안 미·일 양국은 통상마찰을 포함한 경제관계에서의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협력의 틀을 구축해왔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미·일 무역관계는 과거 마찰과 상호의존 심화의 반복에서 글로벌 경쟁 속에서 협조를 중시하는 경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 라. 미·일 FTA 논의

향후 미·일간 FTA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전망이다. 최근 일본정부 및 미국정부 관련 연구소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일 FTA에 대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미·일 FTA 논의의 경과, 전망 등에 대해 검토한다.

미·일 FTA에 대한 논의는 1988년 1월 체결된 미국·캐나다 FTA를 계기로 대두되었다. 같은 해 9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미·일 FTA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여기에서 미국의 이익으로 ① 분쟁처리 메커니즘의 설치에 따라 미·일간 정치적 분위기 개선 기대, ② 일본의 규제개혁 등 미국 무역정책에서의 목표달성 용이, ③ 무역장벽 철폐에 따른 무역창출 효과 기대, ④ GATT 교섭 실패 시 차선택으로서의 유효성 보유 등이 지적되었다. 반면 미국의 불이익으로는 ① 협정체결 후 그 기능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미·일 관계악화 우려, ② 협정체결 후 일본의 농업, 유통 등 시장접근 곤란

지속 가능성, ③ 무역전환효과로 인한 비용증가, ④ EU, 아시아 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여타 국가와의 관계악화 우려 등을 들고 있다. 또한 2000년에는 우선 2010년을 목표로 관세 철폐 및 규제장벽의 최소화(이른바 미·일 오픈마켓 플레이스)를 골자로 하는 오픈마켓 구상이 발표되었다(Bruce Stokes 2000). 이것은 광범위한 경제연대협정이면서 시장통합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 경제단체연합회(經団連)를 중심으로 양국간 FTA에 대해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이들이 기대하는 미·일 FTA 효과는 ① 포괄적인 FTA 발효에 따라 양국간 경제관계 긴밀화에 기여, ② 전 세계 무역 자유화 촉진에 공헌, ③ 일본의 구조개혁 추진 및 불필요한 경제마찰 회피, ④ 일본의 아시아 역내 경제블록화에 대한 우려 불식, ⑤ 정치적·안보적 효과 도모 등이다.<sup>19)</sup> 한편 2004년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보고서(Bradford and Lawrence 2004)에 따르면, 양국간 FTA는 일본 GDP를 3% 정도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되어 미·일 FTA의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 정부계 기관과 일본정부에서 미·일 FTA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먼저 2007년 2월 미국의 국제전략연구소(CSIS)는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미·일 FTA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전 국무부 부장관이었던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와 전 국방부 차관보였던 나이(Joseph S. Nye)에 의해 주도됨에 따라 흔히 ‘2007 아미티지 보고서’라고 한다. 이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아미티지와 나이를 중심으로 지난 2000년에도 「2000 아미티지 보고서」가 발표된 바 있는 데, 2001년 출범한 부시행정부는 대일본 정책 청사진으로서 이 보고서를 적극 활용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2007 아미티지 보고서」도 현재의 부시행정부 이후 2009년 새로이 발족하게 될 행정부가 시행할 아시아 전략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일본정부는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7」(2007년 6월 19일)이라는

19) 이홍배 외(2003), pp. 49~52.

보고서에서 ‘장래 과제’로서 미·일 FTA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였다.<sup>20)</sup> 일본정부는 그동안 경단련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어온 미·일 FTA 체결 주장, 최근의 한·미 FTA 체결에 따른 대일 영향에 대한 우려, 앞서 살펴본 2007년 초 미국에서의 미·일 FTA 제기에 대한 화답의 필요성 등에 따라 공식적인 형태

▮ 표 4-9. 미·일 양국 보고서에서의 미·일 FTA 관련 주요 내용 ▮

■ 미국: 「2007 아미티지 보고서」

- 민주, 공화 양당의 온건파 외교안보 브레인들을 포함한 미국 내 동아시아 및 일본 전문가들이 참가해서 작성한 「2007 아미티지 보고서」는 2020년을 대상 연도로 미국의 대아시아 중장기 전략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제시
  - 미국과 일본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협상 개시 의향을 선언해야 함. 무역증진권한(TPA) 만기 문제로 인해 조만간 FTA가 실현되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의 지도자들은 이 목표를 계속 시야에 넣고 있어야 함. 도하 라운드에 부합하는 협정은 미국과 일본에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될 것이며, 아시아·태평양 공동체의 모든 나라들에게 보다 큰 정치적·전략적 이익이 될 것임.
  - 일본 규제제도의 국제표준화, 시장접근성 향상 등의 과제 잔존
  - 농업에서 인구학적 위기에 직면한 일본은 농업을 자유화해야 할 강력한 유인이 있으며, 미·일 FTA 협상 시 일본의 농민과 ‘쌀문화’의 민감성 및 농업인구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관세율을 향후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할 필요
  - 미·일 FTA는 양국의 관세율과 통관절차 조화, 생산성 증대, 규제와 투자환경의 수렴 지향뿐만 아니라 일본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 경쟁조건 및 투명성 개선, 미국투자 문화 확대, 일본 구조조정 극복 진작 등의 효과 기대
  - 향후 20년간 미·일 FTA는 일본 대내(inward) 직접투자 수준을 현재의 GDP 대비 2.1%에서 미국 수준인 14%까지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일본: 「경제재정개혁의 기본방침 2007」

- 일본정부는 일본의 성장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화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수단의 하나로서 경제연대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EPA)의 교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 그 결과 2009년 초까지 EPA 체결국이 12개국 이상 될 것으로 기대
  - 특히 미국과 EU를 포함한 대시장국, 투자국 등에 대해서는 각국의 동향, 지금까지 일본과의 경제관계 등을 감안하면서 장래의 과제로 검토하며, 가능한 국가·지역부터 준비를 진행. 또한 ASEAN+6(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의 경제연대구상을 포함해 광역경제연대의 연구를 추진
  - EPA의 내용 측면에서는 무역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투자·지식재산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질적으로 수준 높은 EPA의 체결을 목표로 함.

자료: Armitage and Nye(2007); 日本 經濟財政諮問會議(2007).

20) 日本 經濟財政諮問會議(2007).

로는 최초로 이번에 미·일 FTA를 언급하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양 보고서에서 언급된 미·일 FTA에 대한 주요 내용은 [표 4-9]와 같다.

한편 미·일 FTA의 최대 동기는 정치적, 지정학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양국 입장에서 아시아·태평양을 둘러싼 FTA 체결의 진전 및 중국의 대두를 감안하면 미·일 FTA의 중요성은 명확하다. 그러나 미·일 FTA에 있어서 난관은 상호간에 경제적 이득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미·일 모두 농산품 등 일부 상품을 제외하면 고관세가 거의 잔존하지 않아 FTA 체결에 의한 관세철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sup>21)</sup> 특히 일본의 입장에서 협상 시 미국으로부터의 엄청난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와 투자 등을 포함해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공세수단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게 경제적 메리트가 있고, 미국이 체결의 인센티브를 충분히 갖기 위해서는 「2007 아미티지 보고서」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자유화의 정도가 높고 범위가 넓은 FTA가 필요하다. 결국 미·일 FTA 교섭은 양국의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하에 기본적으로는 쌍방이 상호 양보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일 FTA와 관련하여 양국간의 공식적인 협상은 미 행정부의 무역증진권한(TPA)이 2007년 6월 말로 끝났기 때문에 2009년 초 부시 대통령의 후임자가 들어설 때까지 실질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2007 아미티지 보고서」에서도 강조되었듯이 미국의 입장에서 아시아의 질서를 바로잡기(Getting Asia Right) 위해서는 일본과의 굳건한 동맹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일본과의 포괄적인 FTA가 긴요하다. 따라서 향후 미·일간 FTA에 대한 논의가 점진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 마.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앞서 살펴보았듯이 미국의 입장에서 교역 및 투자 상대국으로서 일본의 위

21) 일본 외무성 주관의 「北米地域との経済関係強化の方途に関する研究会」의 내부자료(2007. 3.).

상은 2000년대 들어 점차 감소하고 있다. 이는 특히 중국의 대두에 기인하는 바가 큰 데, 이 요인을 포함해 WTO 성립 등 국제교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미·일 간 통상관계는 과거 극심했던 마찰에서 이제 협조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거 미·일 간 통상마찰은 일본경제의 성장과정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먼저 일본경제가 1950~60년대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국내 중소기업간 과당경쟁의 결과가 해외시장, 특히 미국에 집중호우형으로 수출된다. 또한 1970년대 일본 경제는 고도성장기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심화 단계로 진입한다. 이에 따라 일본의 산업구조는 자본집약형 소재산업에서 기술집약형 가공조립산업으로 전환된다. 일본은 이러한 성장과정을 거치면서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를 거두게 되며, 이에 따라 미·일 간 통상마찰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1950~60년대에는 수입제한 조치로서 수출자율규제(VER)가, 1970~80년대 전반에는 이전의 수출자율규제 유지와 미국에서의 현지생산화가 모색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일 구조협약, 패키지협상(MOSS) 등을 통해 일본의 시장개방과 구조개혁을 요구함으로써 대일 수출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 표 4-10. 미국의 대일 통상마찰의 특징 ■

시기	발생 원인	대응
1950~1960년대	일본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집중호우형 대미 수출	수출자율규제(VER)
1970~1980년대 전반	일본경제의 질적 심화단계로의 전환(자본집약형→기술집약형)과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	VER, 현지생산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중반	미국의 일본 시장개방 및 구조개혁 요구	구조협약, 패키지 협상(MOSS)
1990년대 중반 이후	WTO 성립, 중국 대두 등으로 마찰 완화	포괄경제대화 WTO 통한 해결

자료: 필자 작성.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가 여전히 대규모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서 미국의 대일 통상전략이 크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대응이 1980년대 전반까지의 수입규제조치(즉 수출자율규제)에서 그 이후 일본에 대한 시장개방 및 구조개혁 요구로 전환된 것은 적절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일본(중국 포함)에 대한 미국의 대규모 무역적자는 이들 국가의 제품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서 살펴보았지만 2000년대 들어 미국의 전체 수출 및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이 감소하거나 매우 낮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미국의 대일 시장개방 및 구조개혁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 2. EU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 가. 개관

1950년대 후반 선진공업국으로 성장한 서유럽 국가들은 과거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완화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대외무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이었다. 또한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설립을 위해 체결된 로마조약(1957년)에 따라 유럽국가들은 EU<sup>22)</sup>의 역외 제국과의 모든 경제관계를 규정하는 공동무역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을 추진한다. 이후 1968년 관세동맹의 완성에 따라 역외 교역에 대한 공동관세가 설정되면서 마침내 유럽 차원에서 공동의 통상정책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회원국을 대신해서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 단일한 무역정책의 수립과 회원국의 무역관련 법안 전반에서 통일성의 유지가 가능하게 되었고, 또한 대외적으로는 유럽의 협상력을 강화하고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70년대 중반 이후 EU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

22) EU는 유럽경제공동체(EEC, 1957.3), 유럽공동체(EC, 1967.7), 유럽연합(EU, 1993.11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EU 25개국 확대(2004.5), EU 27개국 확대(2007.1)의 변화를 거친다.

이 지속되면서 보호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났고, 구체적인 대응으로서 수입량 제한을 비롯한 비관세조치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EC-1992년 계획(유럽의 시장통합계획)의 추진과 그 후 우루과이라운드의 종료에 따라 신보호주의에 따른 보호정책은 점차 철폐되었다.<sup>23)</sup> 한편 EU는 2006년 10월 「글로벌한 유럽」이라는 신통상정책을 발표하고, 아시아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일본과의 통상관계에서 EU는 1950년대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수입수량제한조치, 반덤핑제도와 같은 비관세조치를 실시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에 대해 시장개방과 구조개혁을 요구하였다. 일본과의 통상마찰에서 이러한 EU의 대응은 앞서 살펴본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 시기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한편 1990년대 일본의 경기침체에 따라 EU의 대일 무역적자가 감소되면서 양자간 경제관계는 호전되었다. 특히 양자간 관계는 1991년 「헤이그 공동선언」과 2001년 「행동계획」과 같은 협력체제의 틀하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EU의 대일 통상전략의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도록 한다. 이를 위해 먼저 EU · 일본간 무역 및 투자 현황, 그리고 양자간 통상마찰의 주요 내용과 협력관계의 틀을 검토한 다음 마지막으로 EU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을 도출하기로 한다.

## 나. 최근 양자간 무역 및 투자 현황

최근 5년간(2002~06) EU의 대세계 연평균 무역증가율은 8.1%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6년 EU의 대세계 무역 현황은 수출 1조 1,661억 유로, 수입 1조 3,504.9억 유로로, 1,843.9억 유로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EU의 상위 5대 무역 국가는 미국(17.7%), 중국(10.1%), 러시아(8.3%), 스위스(6.3%), 일본

23) 김세원(2004), pp. 534~535.

(4.8%)이다.<sup>24)</sup> 한편 같은 기간 EU의 대일 연평균 무역증가율은 0.9%에 머무르고 있으며, EU의 대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의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 또한 2002년 72.1%에서 2006년 17.3%로 크게 감소하였다.<sup>25)</sup> 또한 2006년 현재 EU의 대일 무역은 수출 446.6억 유로 및 수입 764.8억 유로로, 318.2억 유로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또한 EU의 대일본 품목별 수출에서는 2006년 현재 화학제품, 기계, 운송장비가 상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91억 유로, 85억 유로, 69억 유로를 기록했다. 수입에서는 기계, 운송장비, 화학제품이 각각 342억 유로, 226억 유로,

▮ 표 4-11. EU 25의 대세계 무역 현황 ▮

(단위: 억 유로, %)

연도	수출	증감률(%)	수입	증감률(%)	무역수지	수출+수입
2002	9,004.2		9,418.9		-414.6	18,423.1
2003	8,784.8	(-2.4)	9,403.5	(-0.2)	-618.6	18,188.3
2004	9,646.5	(9.8)	10,322.1	(9.8)	-675.6	19,968.6
2005	10,626.4	(10.2)	11,824.8	(14.6)	-1,198.4	22,451.1
2006	11,661.1	(9.7)	13,504.9	(14.2)	-1,843.9	25,166.0
연평균증가율		(6.7)		(9.4)		(8.1)

자료: Eurostat.

▮ 표 4-12. EU 25의 대일본 무역 현황 ▮

(단위: 억 유로, %)

연도	수출	증감률(%)	일본 비중(%)	수입	증감률(%)	일본 비중(%)	무역수지	수입+수출
2002	434.3		(4.8)	733.3		(7.8)	-299.0	1,167.6
2003	409.5	(-5.7)	(4.7)	720.1	(-1.8)	(7.7)	-310.6	1,129.5
2004	433.4	(5.8)	(4.5)	743.0	(3.1)	(7.2)	-308.6	1,175.5
2005	436.3	(0.7)	(4.1)	734.2	(-1.1)	(6.2)	-297.9	1,170.5
2006	446.6	(2.4)	(3.8)	764.8	(4.2)	(5.7)	-318.2	1,211.4
연평균증가율		(0.7)			(1.1)			(0.9)

자료: Eurostat.

24) 일본기업들의 중국생산을 통한 수출을 고려하면 EU 교역국에서 일본이 제2위를 차지한다는 견해도 있다.

25) EU는 이전의 15개국에 동구 10개국이 추가된 25개국을, 무역은 상품교역만을 의미한다(서비스교역 제외).

62억 유로로서 상위를 차지하였다.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는 EU에 대한 수출입이 금액에서는 2003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나, 반면 일본의 전체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EU의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6년 현재 EU에 대한 수출은 938.7억 달러, 수입은

표 4-13. 일본의 대EU25 무역 현황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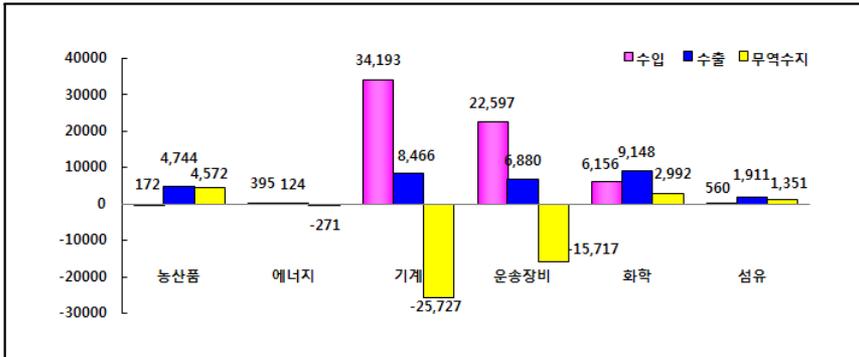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수출	일반기계	192.9 (25.3)	203.2 (25.2)	172.5 (25.8)	160.0 (25.1)	171.3 (22.8)	208.2 (23.4)	219.8 (25.0)	232.7 (24.8)
	전기기계	151.8 (19.9)	201.8 (25.0)	147.3 (22.0)	135.0 (21.2)	166.3 (22.2)	203.9 (22.9)	192.6 (21.9)	193.9 (20.7)
	승용차	113.8 (14.9)	92.5 (11.5)	73.4 (11.0)	88.3 (13.9)	131.1 (17.5)	155.1 (17.4)	141.9 (16.1)	152.0 (16.2)
	화학제품	50.2 (6.6)	51.4 (6.4)	49.1 (7.3)	48.1 (7.6)	55.3 (7.4)	62.9 (7.1)	64.3 (7.3)	67.9 (7.2)
	기타	252.8 (33.2)	256.9 (31.9)	226.5 (33.9)	204.7 (32.2)	226.7 (30.2)	258.9 (29.1)	261.7 (29.7)	292.3 (31.1)
	합계	761.5 (100.0)	805.8 (100.0)	668.8 (100.0)	636.1 (100.0)	750.6 (100.0)	889.0 (100.0)	880.4 (100.0)	938.7 (100.0)
	EU 비중	(18.2)	(16.8)	(16.5)	(15.3)	(16.0)	(15.7)	(14.7)	(14.5)
수입	화학제품	88.1 (20.4)	95.7 (20.0)	94.3 (20.6)	94.8 (21.2)	107.6 (21.6)	125.2 (21.7)	133.9 (22.7)	134.7 (22.5)
	일반기계	50.5 (11.7)	61.7 (12.9)	61.5 (13.4)	51.7 (11.6)	57.1 (11.5)	68.2 (11.8)	73.0 (12.4)	73.6 (12.3)
	전기기계	40.0 (9.3)	48.0 (10.0)	43.6 (9.5)	40.5 (9.1)	44.6 (9.0)	51.6 (8.9)	53.3 (9.0)	59.4 (9.9)
	승용차	50.1 (11.6)	55.2 (11.5)	49.2 (10.7)	48.4 (10.8)	51.4 (10.3)	64.8 (11.2)	62.1 (10.5)	57.9 (9.7)
	기타	203.3 (47.1)	217.3 (45.5)	208.9 (45.7)	211.3 (47.3)	237.2 (47.6)	268.1 (46.4)	268.4 (45.4)	272.7 (45.6)
	합계	431.9 (100.0)	477.9 (100.0)	457.4 (100.0)	446.8 (100.0)	497.8 (100.0)	578.0 (100.0)	590.7 (100.0)	598.3 (100.0)
	EU 비중	(13.9)	(12.5)	(13.0)	(13.3)	(13.0)	(12.7)	(11.4)	(10.3)

주: EU 25개국에 대한 통계임.

자료: JETRO.

그림 4-2. EU 25의 대일본 품목별 무역 현황(2006년)

(단위: 백만 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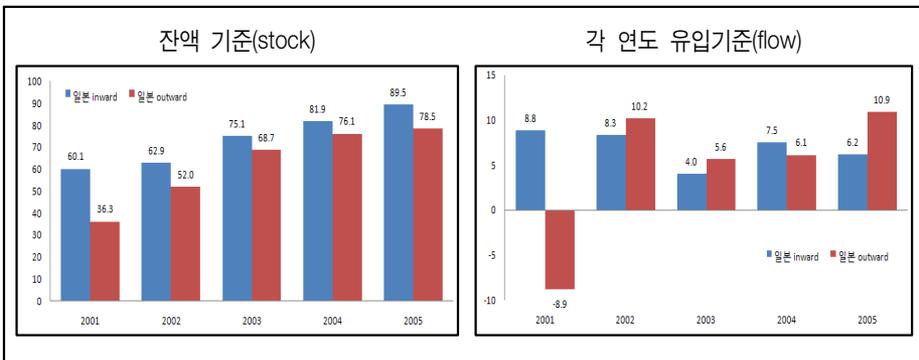
자료: Eurostat.

598.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수출 14.5%, 수입 10.3%이다. 한편 품목별 수출입에서는 일반기계, 전기기계, 승용차의 순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화학제품, 일반기계, 전기기계 등의 순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EU와 일본 간 직접투자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EU의 입장에서 볼 때 2004년까지 EU 25개국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잔액(inward stocks)이 EU 25개국의 대일 직접투자잔액(outward stocks)보다 58억 유로가 많았다. 그러나 2005년 EU 25개국의 대일 투자가 전년 대비 약 2배 정도 증가(109억

그림 4-3. EU 25의 대일 내외직접투자 현황

(단위: 십억 유로)



자료: [그림 4-2]와 동일.

표 4-14. EU의 대내외 직접투자 현황

(단위: 십억 유로)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유입	잔액								
전세계	대내	549.1	3,862.4	486.6	4,000.9	355.4	4,454.9	225.3	4,801.9	500.3	5,486.9
	해외	634	4,763.2	496.1	4,755.0	406.4	5,150.3	354.1	5,428.1	599	6,259.0
미국	대내	79.6	704.8	57.6	659.9	51.9	687.1	9.3	694.3	17.1	769.2
	해외	158.7	915.3	2.7	760.2	51.4	747.5	8.4	739.7	29.5	855.6
일본	대내	8.8	60.1	8.3	62.9	4.0	75.1	7.5	81.9	6.2	89.5
	해외	-8.9	36.3	10.2	52.0	5.6	68.7	6.1	76.1	10.9	78.5

자료: [그림 4-3]과 동일.

유로)하면서 양자간의 직접투자가 잔액 규모 측면에서 비슷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와 부동산가격 하락 등에 의한 비즈니스환경 개선으로 인해 2000년대 초반에는 전기통신, 자동차제조, 소매, 보험 등의 분야에서 유럽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면서 대일직접투자에서 EU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EU의 대일본 투자는 주로 소수의 대형프로젝트로서 구제형 M&A라는 특징을 갖는다. 한편 2005년 현재 EU의 대내외직접투자(잔액 기준)에서 일본은 대내직접투자(inward)와 해외직접투자(outward)가 각각 1.6%와 1.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표 4-15. 일본·EU 간 연도별 직접투자 현황

(단위: 억 달러,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EU→일본	72.2 (24.1)	74.4 (27.5)	59.9 (22.9)	193.8 (42.0)	237.1 (47.1)	226.9 (45.0)	305.1 (38.9)	365.5 (40.7)	385.0 (39.6)	357.6 (35.3)	396.2 (36.8)
전세계→일본 (inward)	299.4 (100.0)	270.8 (100.0)	261.6 (100.0)	461.7 (100.0)	503.2 (100.0)	504.5 (100.0)	784.9 (100.0)	898.4 (100.0)	973.0 (100.0)	1,013.2 (100.0)	1,076.6 (100.0)
일본→EU	435.7 (16.8)	526.4 (19.4)	491.3 (18.1)	481.0 (19.3)	548.0 (19.7)	687.2 (22.8)	705.3 (23.1)	857.9 (25.5)	1,014.2 (27.3)	921.4 (23.7)	1,188.5 (26.4)
일본→전세계 (outward)	2,586.5 (100.0)	2,719.7 (100.0)	2,709.8 (100.0)	2,490.7 (100.0)	2,784.4 (100.0)	3,008.7 (100.0)	3,055.8 (100.0)	3,359.1 (100.0)	3,717.6 (100.0)	3,882.0 (100.0)	4,496.8 (100.0)

주: 각 연도 말 잔액 기준이며, EU는 2003년까지 15개국, 2004년부터 25개국임.

자료: JETRO.

한편 일본의 입장에서 EU와의 직접투자 현황은 [표 4-13]과 같다. 먼저 EU의 대일 투자(inward)는 앞서 미국의 대일 직접투자([표 4-4])와 비교해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2006년 현재 잔액기준으로 396.2억 달러로 36.8%를 차지하고 있다(미국의 대일투자는 419.9억 달러로 39.0%를 차지). 2006년 EU의 대일 직접투자는 1996년 대비 5.5배 정도 증가했다. 또한 2006년 일본의 대EU 직접투자(outward)는 잔액기준으로 1996년 대비 2.7배, 2000년 대비 2.2배 증가한 1,188.5억 달러로서, 일본이 전 세계에 투자한 금액의 26.4%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연도별로 일본의 대내외 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EU의 비중을 살펴보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96년 일본의 FDI와 ODI에서 EU의 비중은 각각 24.1% 및 16.8%에서, 2006년 현재 각각 36.8% 및 26.4%로 증가하였다.

#### 다. 양자간 통상 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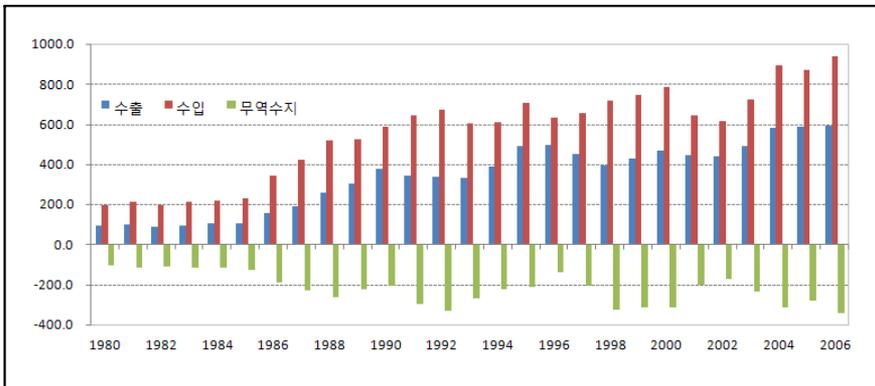
1940년대 이전까지 유럽국가들은 보호무역주의적인 무역정책을 채택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선진공업국으로 성장한 1950년대 후반 이후 일방적인 보호정책을 점차 완화하기 시작했다. 이들이 국제무역의 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대외무역에 대한 높은 의존도 때문이었다. 예컨대 1950년대 말 유럽경제공동체(EEC)가 출범할 당시 6개 회원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평균 대외무역의존도는 50% 내외에 위치함으로써 미국과 일본의 10~20%와 대조를 이루었다. 한편 1970년대 중반 이후 EU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면서 보호주의적인 경향이 나타났고, 구체적인 대응으로서 수입량 제한을 비롯한 비관세 조치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서 1992년까지 유럽시장통합을 목표로 하는 EC-1992년 계획의 추진과 그 후 우루과이라운드의 종료에 따라 신보호주의에 따른 보호정책은 점차 철폐되었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EU와 일본의 통상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유럽의 일본에 대한 차별적 수입제한조치이다. 1955년 일본의 GATT 가입 시 유럽의 주요국은 GATT 회원국에 부여하는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를 일본에 적용하는 것을 거부하고 차별적 수입제한을 설정했을 뿐만 아니라 191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량규제를 실시하였다. 1970년대 일본은 이러한 유럽의 차별적 조치의 철폐를 요구하면서 교섭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대일 공동 세이프가드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하였고 이에 따라 교섭은 타결되지 못하였다. 한편 1992년 말 완성을 목표로 한 EC 역내 시장통합 계획은 일본에 대한 차별적 수입규제조치를 철폐하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EU 각국의 일본에 대한 차별적 수입수량제한은 1994년 3월에 완전 철폐되었다.<sup>26)</sup>

■ 그림 4-4. EU의 대일본 수출입 및 무역수지 현황 ■

(단위: 억 달러)



자료: IMF DOTS.

EU와 일본의 무역관계는 과거 EU의 일방적인 무역적자로 특징지을 수 있다. EU의 대일 무역적자는 1990년대 초반까지 대체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미·일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통상마찰이 확대되었다. 1980년대 EU(당시 EC)는 대일 무역적자가 누적되면서 자동차, 공작기계, 전기기계

26) 이흥배 외(2003), pp. 57~58.

등에 대한 수출자율규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특정 10개 품목에 대한 수출자율규제를 3년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EU는 관세장벽보다는 반덤핑제도,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의 적용, 수입수량조치 등 다양한 비관세장벽을 활용하는 통상정책을 수립하였다. 특히 EU의 대일 통상정책 수단으로서 가장 빈번히 사용된 것은 반덤핑제도였다.<sup>27)</sup> 이에 대해 일본은 수출자율규제 등의 조치로써 무역마찰을 회피하고자 했으며, 대EU 무역의 확대균형을 위해 시장개방 대책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1985년 7월 일본정부는 시장접근환경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액션 프로그램’을 발표하였다.

한편 1991년 1월 들로르 EC 집행위원장은 당시 미국과 일본 간에 전개되던 ‘미·일 구조협약’의 성과를 EC 등에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1991년 7월 EC·일본간에 이루어진 「EC 및 그 회원국과 일본과의 관계에 관한 헤이그 공동선언」을 통해 가시화되었다. 이 선언은 시장원리, 자유무역의 촉진 등을 강조하고 정치·경제·과학·문화 등의 다방면에서 대화, 협의 및 협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선언은 양자간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1994년에 유럽 중소기업의 일본시장 진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일종의 무역촉진프로그램인 「Gateway to Japan」 캠페인을 출범시키고, 주요 산업의 전시상담회, 이벤트,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이후 2005년까지 3년을 주기로 세 차례에 걸쳐 이 프로그램은 지속되었다.

다른 한편 1990년대 일본경제의 침체로 인해 일본 내에서 구조조정이 진전되면서 대EU 무역흑자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양자간의 경제관계는 호전되었다. 1990년대 초 이래 특히 ‘버블경제’가 붕괴되면서 일본은 국제경쟁에서 경제를 개방하는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국과 국제사회 쌍방의 이익을 위해 구조개혁에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1995년 일본·EU간 규제완화를 위한 대화의 개시로 나타났다. 이것은 무역과 외국투자

27) 위의 책, p. 59.

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후 양측은 규제 개혁에 관한 상호 리스트를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200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다.

## 라. 양자간 협력체제의 틀

EU와 일본은 양자간의 관계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각료회의와 연례 정상회의, 비공식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협력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양자간 협력체제의 구축에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틀은 앞서 언급한 1991년의 ‘헤이그 공동선언’과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체결된 2001년의 「EU·일본간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행동계획은 2001년 12월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10차 EU·일본 정상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것은 향후 10년에 걸쳐 평화와 안전 촉진, 경제·무역관계 강화, 지구 규모의 문제와 사회적 문제에의 도전, 인적·문화적 교류의 촉진이라는 4대 목표를 위해 양측간에 보다 긴밀히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행동계획의 채택 이후 EU와 일본 간의 대화와 의견교환의 기회가 크게 증진되었다.

한편 2004년 동경에서 개최된 EU·일본 정례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규제에 관한 대화, 규제의 투명성, 표준인증제도에 관한 협력 및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생활환경 개선 등의 분야에서 양자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협력의 틀을 승인했다. 또한 EU와 일본은 지리적 표시 분야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대화의 지속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아시아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장려하기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조달과 민간자금 등의 활용사업(PFI) 및 정부·자치체와 민간 연계(PPP)에 관한 협력 대화의 지속에 대해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또한 2005년 5월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EU·일본 정상회의에서는 경제교류의 순조로운 진전을 환영하였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는 대일투자 촉진에 관한 일본의 결의를 재차 강조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과 정부조달에 관한

양자간 협력도 계속하기로 하고, 최종선언에는 WTO 도하개발어젠다(DDA)에 대한 협력도 포함하였다. 2006년 4월 동경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는 바로소 EU 집행위원장과 고이즈미 총리가 대일투자의 촉진, 지식재산권 등의 분야에서 협력강화에 대해 또다시 인식을 같이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양측은 정상회의라는 틀 내에서 대일투자 촉진,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조달 등을 주요한 이슈로서 논의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양측의 정부간 및 민간차원의 협력을 위한 중요한 대화의 장으로서는 「EU·일본 산업정책·산업협력대화」와 「EU·일본 비즈니스 대화 라운드테이블」(EUJBDRT)을 예로 들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일본 경제산업성은 1993년 이후 전자의 정부간 채널을 통해 양측의 산업정책 및 산업협력에 대해 협의의 해오고 있다. 그리고 후자는 1999년에 기존의 민간업계간 대화를 통합하여 창설되었다. 이를 통해 EU와 일본의 산업계는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뿐만 아니라 상호 이익이 되는 이니셔티브를 명확히 하는 것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EU와 일본은 세계적 규모의 무역과 투자 담당자로서 세

#### ▮ 표 4-16. EU·일본 간 2대 협정 ▮

##### ■ EU·일본 상호인증협정(MRA)

- 2002년 1월 1일 발효
- 무역원활화협정이라고도 불리는 이것은 4대 제품(통신기기, 전기제품, 화학품, 의약품) 분야에서 수입 측의 기준에 따라 수출 측에서 실시된 적합성평가를 수용하는 것으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절감을 목표로 함.
-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무역총액은 213억 5,800만 유로로 추정되어, 연간 4억 유로의 비용절감 효과 예상
- 이 MRA는 시장접근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 EU·일본 협력협정(독점금지협력협정)

- 2003년 6월 13일 유럽연합이사회에서 채택
- 경쟁정책분야에서의 이 협정은 내외 사업자간의 공평한 경쟁을 확보함으로써 무역과 투자를 함께 촉진

자료: EU 홈페이지.

계무역시스템의 건전성에 대해 공동의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양자는 WTO 교섭에 관련된 문제에서 공동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1998년에 양자간 협의체를 발족시켰다. 2001년 11월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도하라운드 성공을 위해 양측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과거 EU·일본 정례 정상회의에서도 양측은 다양한 국가간의 통상관계를 관리·확대하는 방법으로서 WTO의 규범에 기초한 현행의 다각적 무역제도가 가장 유효하며 동시에 합법적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DDA 진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 마. EU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EU와 일본의 통상관계는 본 장의 1절에서 살펴본 미·일간 사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즉 EU의 대일 무역적자는 여전히 대규모로 지속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 대한 직접투자(잔액 기준)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비중 역시 매우 낮다. 따라서 EU·일본간 통상관계가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연례 정상회의, 정부간·민간대화와 같은 시스템하에서 다양한 이슈를 다루면서 양자간 협력관계를 다져오고 있다.

EU는 일본과의 통상마찰에서 시기별로 상이한 대응전략을 도입하였다. 즉 1950년대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EU의 대일 무역적자가 누적되면서 수입수량 제한, 반덤핑 관세부과 등 비관세조치가 실시되었다. 1980년대 이후 1990년대 초반까지는 당시 미국의 대일 요구를 뒤쫓아 일본에 대해 시장개방 및 규

표 4-17. EU의 대일 통상마찰 대응

시 기	대 응
1950~1980년대 중반	- 차별적 수입수량제한, 반덤핑 관세부과, 수출자율규제 등 비관세조치
1980년대 중반~1990년대 초반	- '미·일 구조협약' 결과를 EU에도 적용 요구 - 일본 시장개방 및 규제완화 요구
1990년대 중반 이후	- EU 역내시장통합에 따라 수입규제조치 철폐 및 긴장 완화

자료: 필자 작성.

제완화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는 EU의 역내시장통합에 따라 대일 수입규제조치가 철폐되면서 양자간 긴장이 완화되었다. 또한 2000년대 들어 양측은 정례 정상회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 정부조달과 같은 무역에서의 새로운 분야에 대해 긴밀한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향후에도 양자간 통상문제는 이러한 대화와 협력의 틀을 통해 해결돼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EU는 2006년 말에 신통상전략(*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EU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체결하기로 하고 특히 ASEAN, 한국, 인도와 같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추진을 분명히 하였다. 과거 EU의 FTA 대상국은 주로 EU 가입 후보국과 구식민지 국가였으며, 주요 목적은 상대국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EU와의 협력강화에 있었다. 그러나 신통상전략에서는 FTA 체결 상대국을 선정할 때 경제적 이익을 중시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FTA 전략의 질적인 전환을 시사했다. 한편 EU의 신통상전략에서 일본과의 FTA는 언급이 없어 당분간 양자간 FTA를 기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EU가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아시아 각국은 일본에게도 중요한 FTA 상대국이다. 따라서 EU가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경우 일본 역시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 3.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 변화와 특징

#### 가. 개관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한 지 2007년 12월로 6주년을 맞이한다. 중국의 WTO 가입은 무역, 외국인투자, 해외투자, FTA 등 통상분야에서 커다란 정책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중·일 경제협력 및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에서도 최근에 많은 변화가 관측되고 있다.

특히 중·일 경제협력관계는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전후부터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이전까지의 냉각기(1945~72년)로 간헐적인 무역 거래가 이루어졌을 뿐 본격적인 정치·경제적 교류는 없었다. 둘째는 국교정상화 이후부터 냉전구도가 와해된 1990년대 초반까지의 시기(1972~91년)로, 이 시기에는 국교정상화 및 양국간 평화우호를 다지는 시기였으며 무역 및 투자 등 경제교류는 본격화되지 못하였다. 셋째는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된 199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기(1992~현재)에 해당되며, 이 시기에는 중·일간의 경제관계가 급속히 긴밀해지면서 양국간 정치·외교관계까지도 경제관계에 의해 지배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중·일관계는 큰 흐름에서 보면 냉각기를 거쳐 화해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고이즈미 총리시절의 야스쿠니 신사참배나 역사교과서 문제 등으로 인하여 중·일관계가 악화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중·일 경제관계의 긴밀화는 양국간 정치·외교관계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고 양국 정치인들도 이를 무시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나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둘러싼 중·일간의 경쟁과 견제, 역사문제, 영토문제, 자원개발문제 등 전통적인 갈등요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이 아니어서 중·일 관계는 화해와 냉각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선진적인 관계를 형성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중·일관계의 긴밀도는 우리나라의 국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므로 중·일관계의 향후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일관계가 지나치게 냉각되면 동아시아에서의 한·중·일 3국의 협력과 주도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는 반면에 중·일관계가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일 양국의 관계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하에서는 중·일 양국간 경제협력의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중·일 FTA 가능성을 포함한 통상 현안이슈를 점검하면서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을 도출하고자 한다.

## 나. 최근 양자간 무역·투자 현황 및 특징

### 1) 무역 현황 및 특징

중·일 양국이 상호간에 중요한 무역파트너로 성장해온 결과, 중국은 일본에 있어 제2의 수출상대국이자 제1의 수입상대국으로 부상하였다. 2006년 기준으로 중·일 무역 규모는 전년대비 11.5% 증가하여 2,112억 달러를 기록, 1999년 이래 9년 연속 과거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일본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255억 달러로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되었다.

2006년 기준으로 중·일 양국간 무역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의 대중수출 규모는 928억 달러(전년대비 15.6% 증가)로 1999년 이래 8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일본의 대중수입 규모는 1,184억 달러(전년대비 8.5%)로 수출과 마찬가지로 8년 연속 증가세를 시현하였다. 양국간 수출입 규모가 증가한 결과, 일본의 대세계 무역총액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17.2%로, 제1위인 미국의 비중 17.4%에 거의 근접하였다. 또한 일본의 대세계 수출입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대중수출의 비중이 14.3%로 증가하여 제1위인 대미수출 비중(22.5%)과의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대중수입의 비중은 20.5%로

표 4-18. 일본의 대중무역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9	23,336	16.6	42,880	16.2	-19,545
2000	30,428	30.4	55,303	29.0	-24,876
2001	31,091	2.2	58,105	5.1	-27,014
2002	39,866	28.2	61,692	6.2	-21,826
2003	57,219	43.5	75,193	21.9	-17,974
2004	73,818	29.0	94,227	25.3	-20,409
2005	80,340	8.8	109,105	15.8	-28,765
2006	92,876	15.6	118,419	8.5	-25,543

자료: JETRO.

표 4-19. 일본의 수출입에서 차지하는 중국과 미국의 비중 추이

(단위: %)

연도	대중국			대미국		
	수출 비중	수입 비중	수출입 비중	수출 비중	수입 비중	수출입 비중
1999	5.6	13.8	9.1	30.7	21.6	26.8
2000	6.3	14.5	9.9	29.7	19.0	25.0
2001	7.7	16.5	11.8	30.0	18.1	24.5
2002	9.6	18.3	13.5	28.5	17.1	23.4
2003	12.2	19.7	15.6	24.6	15.4	20.4
2004	13.1	20.7	16.5	22.4	13.7	18.6
2005	13.4	21.0	17.0	22.5	12.4	17.9
2006	14.3	20.5	17.2	22.5	11.8	17.4

자료: J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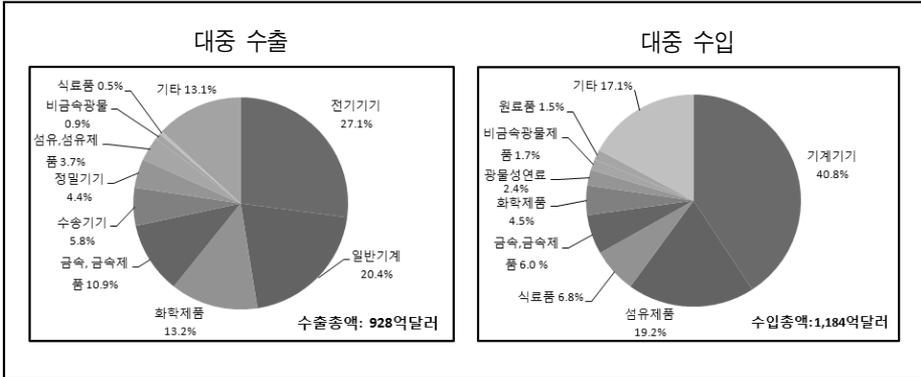
제2위인 대미수입 비중(11.8%)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일본에 있어 중국은 4년 연속 제1의 수입상대국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제2위의 무역적자상대국이다.

현재의 중국은 대외무역구조의 고도화와 산업발전을 토대로 과거 소비재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세계의 상품생산과 수출거점의 중심축으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산업 및 무역 구조의 변화에 상응하듯이 일본의 대중 무역 패턴도 ‘부품, 중간재의 대중 수출’ 및 ‘완제품의 대중 수입’의 형태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6년 일본의 대중수출은 전기기기(27.1%), 일반기계(20.4%), 화학제품(13.2%) 등이 주력품목을 이루고 있다. 이는 중국의 생산품목 다양화, 고부가치화, 범용품의 첨단화 추진에 힘입어 전기·기계관련 부품과 중간재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한다. 최근에는 중국의 부유층을 중심으로 현지 생산차보다 고급수입차를 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일본의 승용차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산업발전을 배경으로 양국간 분업구조가 점차 긴밀해지고 있는 결과, 기계를 중심으로 하는 대중 수입도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2006년 대중수입은 기계기기(40.8%), 섬유제품(19.2%), 식

그림 4-5. 일본의 대중 품목별 수출입 비중(2006년 기준)



자료: J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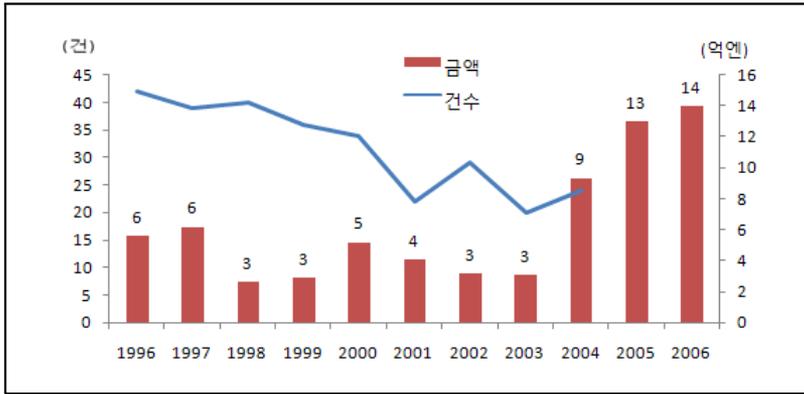
료품(6.8%), 화학제품(4.5%) 등으로 기계기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2) 투자 현황 및 특징

### 가) 중국기업의 대일투자

중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썬우추취(走出去, 해외투자)’라는 용어가 등장했으며, 이는 ‘인진라이(引進來, 외자유치)’와 함께 현재 중국의 대외경제 정책을 구성하는 중요한 전략이다. 중국의 ‘썬우추취’ 전략은 기업의 해외진출, 즉 해외투자와 다국적 경영(외국기업에 대한 M&A 포함)을 장려함으로써, 이를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촉진, 선진기술 도입, 부족한 재화 특히 전략적인 자원·에너지의 공급 확보 등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2003년도까지 미미한 수준이었던 중국의 대일투자는 2004년 이후 금액 기준으로 증가세를 시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건수 기준으로 연평균 40건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금액 기준으로도 소규모 투자가 많은 편이다.

그림 4-6. 중국기업의 대일투자 추이



주: 1996~2004년까지는 「대외·대내직접투자 실적, 회계연도」 기준이며, 2005년과 2006년은 「국제수지상황 歷年」 기준으로 작성.

자료: 日本 財務省 홈페이지.

중국의 대일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1989년부터 2004년도까지의 누계 기준으로 제조업보다는 비제조업에서의 투자가 많은 점이 특징이다. 비제조업 중에서도 상사·무역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초기 투자비용이 적은 음식업, 관광, 컨설팅 부문에서의 투자가 많다. 또한 제조업에서는 섬유, 금속, 기계 부문에서의 투자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가 2004년에 발표한 대일투

표 4-20. 중국기업의 업종별 대일투자

제조업	금액	건수	비제조업	금액	건수
	10	35		86	566
식품	0	1	통신	0	3
섬유	2	11	건설	6	31
고무·피혁	0	0	상사·무역	44	348
화학	0	1	금융·보험	0	1
금속	0	6	서비스업	33	158
기계	7	9	운수업	3	11
석유	1	5	부동산업	0	7
기타	0	2	기타	0	7

주: 1989~2004년까지의 누계기준으로 작성.

자료: 日本 財務省 홈페이지.

표 4-21. 중국기업의 일본기업 M&A 사례

중국기업	일본기업	업종	형태	일시
威陽偏轉집단	竹下금속기계공장	비철금속	합병	1997년 12월
嘉樂그룹	Challenge Japan	섬유	매수	2001년 8월
廣東美的집단	三洋(산요)전기	전기	영업양도	2001년 10월
上海電氣集團總公司	아키야마인쇄기계조	기계	영업양도	2001년 12월
上海電氣集團總公司	池貝	공작기계	매수	2004년 8월
上海創新澩熱交換機	鈴木接点공업	정밀기계	영업양도	2002년 12월
三九기업집단	洞亞제약	제약	매수	2003년
尙德太陽腦전력	MSK	태양전지	매수	2006년 8월

자료: 岩見元子(2007).

자 장려업종으로서 제조업부문은 전기기계, 인쇄기계, 측측기, 사무용기기가, 비제조업 부문은 무역, 소매, R&D, 소프트 개발, 교통 운송 산업부문이 선정되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업종에 대한 중국기업의 대일투자는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sup>2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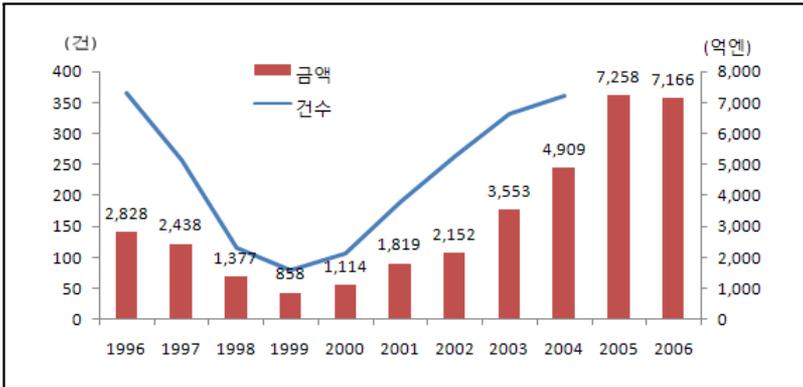
최근 들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중국기업의 일본기업 매수 사례가 주목되고 있다. 중국기업의 M&A 대상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으로 이들 기업을 인수하여 단기간 내에 첨단 기술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공작기계 부문에서 중국기업의 일본기업 M&A는 일본기업이 가지고 있는 높은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과 브랜드를 목적으로 하는 중국기업의 일본기업 M&A 건수는 향후 경영부진에 빠져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경영상황에 문제가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나) 일본기업의 대중투자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는 1996년 이래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1999년 858억

28) 岩見元子(2007).

|| 그림 4-7. 일본기업의 대중투자 추이 ||



주: 1996~2004년까지는 「대의·대내직접투자 실적, 회계연도」 기준이며, 2005년과 2006년은 「국제수지상황, 歴年」 기준으로 작성하였다.

자료: 日本 財務省 홈페이지.

엔을 기록한 이래 증가세로 전환되어 2005년에 7,258억 엔의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1996년 이후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가 감소한 데는 중국의 외국자본 우대세제의 철폐와 더불어 아시아 통화위기에 따른 아시아경제의 부진에 기인하고 있으며, 2000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데는 중국의 우대세제정책 부활과 WTO 가입으로 중국시장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하였다. 2006년 일본의 대중 투자는 전년대비 1.2% 감소한 7,166억 엔을 기록한 반면에 인도나 베트남의 투자가 전년대비 기준으로 각각 100.3%, 223.2% 증가한 597억 엔, 543억 엔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결과 일본의 대아시아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은 2005년 40.3%에서 2006년 35.8%로 축소되었다.

일본기업의 업종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제조업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인다. 전기기계기기가 20.7%(1,487억 엔)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수송기계기기가 18.5%(1,330억 엔)를 기록하여 모두 2005년에 이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중국에서 중간소비자층이 확대되면서 대형액정TV, 자동차 등의 중국 내 소비호조를 배경으로 관련 사업에서의 왕성한 투자가 증대되고 있

표 4-22. 일본기업의 업종별 대중투자

(단위: 억 엔, %)

업종	2005년		2006년		업종	2005년		2006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제조업	5,634	77.6	5,670	79.1	비제조업	1,628	22.4	1,502	20.9
식료품	249	3.4	216	3.0	농·임업	5	0.1	15	0.2
섬유	325	4.5	110	1.5	어·수산업	6	0.1	5	0.1
목재·펄프	38	0.5	41	0.6	광업	5	0.1	-	-
화학·의료	688	9.5	551	7.7	건설업	5	0.1	28	0.4
석유	37	0.5	-	-	운수업	46	0.6	110	1.5
고무·피혁	209	2.9	266	3.7	통신업	27	0.4	27	0.4
유리·세라믹	102	1.4	136	1.9	도매·소매업	534	7.4	734	10.2
철, 비철, 금속	417	5.7	309	4.3	금융·보험업	597	8.2	275	3.8
일반기계기기	507	7.0	594	8.3	부동산업	141	1.9	38	0.5
전기기계기기	950	13.1	1,487	20.7	서비스업	109	1.5	115	1.6
수송기계기기	1,137	15.7	1,330	18.5					
정밀기계기기	395	5.4	219	3.1					

자료: 日本銀行. 「國際收支統計」 홈페이지.

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비제조업 부문에서는 중국 국내시장개척을 겨냥하여 판매망 확대를 위한 도매·소매업의 투자와 금융·보험업의 투자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측 통계에서 2006년 중국의 총외국인투자 규모가 4.5% 증가한 630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일본으로부터의 외국인투자는 전년대비 29.6% 감소한 45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 측 통계가 1.2% 소폭 감소한 데 비하여 현저한 차이가 나타난 배경에는 중국 측 통계가 기업의 재투자수익 등을 계상하고 있지 않은 점과 2006년 일본 엔화약세의 진행으로 달러 기준의 중국통계 금액이 축소된 점을 들고 있다.<sup>29)</sup> 이외에도 최근 대중국 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배경에는 임금과 토지비용의 상승, 수출세금의 환급률 인하, 인민폐 절상 등에 의한 투자비용 상승 등으로 중국의 투자환경이 악화된 점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29) 高橋直樹(2007).

## 다. 중·일 통상 현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일 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 눈부신 확대기조가 견지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경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리스크 요인과 심각한 지재권 침해, 법제도의 미정비 및 불투명한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은 양국간 경제 협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일본은 중국과 전면적인 협력보다는 전략적으로 협력할 부문은 협력하고, 일본의 이익에 상충되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마찰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일본과 중국 간에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는 농산물 관련 통상 마찰, 일본의 중국에 대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지재권 강화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농산물과 관련된 통상 마찰은 일본이 2006년 5월 ‘식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를 도입하면서 제기되고 있다. 동 제도는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 동물용 의약품, 사료첨가물에 대하여 잠정 기준치를 설정하여, 기준치를 상회하는 식품 및 가공식품에 대하여 유통을 금지시킨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중국정부는 중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인 조치는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 그 기준이 강화되었고 검사 설비와 인원부족으로 인해 검사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중국산 농산물의 대일 수출을 방해하는 무역장벽 역할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가 일본산 제품에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일본의 농산물 수입 제한 조치에 따른 보복 성격이 강한 마찰이 빚어지고도 있다.

일본에서는 중국 위협론과 중국 기회론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데, 최근에는 일본기업의 대중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의 중국집중현상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문제의식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기업이 우려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요인으로는 중국의 고성장과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확실성 요인들이 포함되어 있다. 고도성장에 기인하는 위협요인으로는 자원·에너지 부족, 환경문제, 노동력 부족, 인프라 부족,

소득격차 확대, 성장산업 과잉공급, 인플레이션 문제 등을 들 수 있으며, 체제 이행에 기인하는 위협요인으로는 국유기업·국유은행 개혁 지연, 금융시장 정비의 지연, 금리·환율 등의 변동성 증가, 국가채무 증가, 자본규제 잔존 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중국 국내의 건전한 시장 메커니즘의 구축과 중국 경제의 시장시스템으로의 편입이 안정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서 양국 정부는 ‘중·일 경제 파트너십 협의’를 통하여 경제부문에서의 주요 현안 이슈들에 대하여 포괄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동 협의에서 일본 측은 WTO에서의 양국간 협력, 투자환경 개선, 동아시아 지역협력, 중·일 투자협정과 비즈니스 환경 정비, 정부 조달협정의 조기 가입 등에 대하여 중국 측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중국 측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의 인정, 중국기업의 대일투자환경 정비, 기술협력의 증대, 에너지·환경 협력 등에 대한 요구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관계의 긴밀화는 양국간의 민감한 대립 부분을 자극하기보다는 협조 가능한 사안에 치중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른 한편으로 동중국해 유전 개발 및 영유권을 둘러싼 움직임, 과거사 문제로 인하여 대립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중·일 관계에서는 협력보다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이 전개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2006년 10월 8일 개최된 중·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전 총리는 중·일간 ‘전략적 호혜관계 구축’을 제안하였고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이를 수용하면서 중·일 관계는 고이즈미 총리시절의 대립관계를 해소하면서 급속히 개선된 바 있다. 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간 정치·외교관계는 최근 급속히 회복되고 있으며, 이를 방증하듯이 최근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들이 등장하고 있다. 중·일간에는 환경·에너지 협력, 역사공동연구 개시, 천연가스 공동개발, 중국군 고위급의 일본방문, 일본의 대규모 방중(訪中)단 계획 등 화해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렇듯 중·일간의 갈등을 제어하는 요인으로서 경제협력이 아직까지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제2의 경제도약을 위한 일본과의

경제협력은 여전히 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과 일본은 기본적으로 협력과 대립이라는 이중 구조를 유지하면서 경제협력이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 라.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의 특징

중국은 WTO 가입 이래 무역액,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시현하고 있으며, ‘찌우추취(走出去)’를 통해 중국기업의 해외전개 기반을 마련하여 국제사회로의 진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통상전략은 초기에 FTA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여 왔으나, 최근에 고용과 성장 유지에 필요한 자원과 수출시장의 확보를 위해 ASEAN과의 FTA뿐만 아니라 산유국,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과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통상정책기조의 변화에 따라 대일통상전략도 대일 수출과 투자확대 일변도에서 기술협력 및 에너지·환경 협력의 증대, 중국기업의 대일투자환경 정비 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무역 측면에서 중국은 전반적인 무역관련 제도 및 정책을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도록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아지고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커지면서 선진국이 중국에 가하는 통상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내외 통상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중국의 무역정책은 기존의 가공무역정책에서 탈피하여 수출을 통한 중국 내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둔 산업정책과 연계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출 주력 품목도 소비재에서 자본재와 부품 중심으로, 저위기술산업 제품에서 고위기술산업 제품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sup>30)</sup> 이러한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원재료, 부품·소재, 기계설비 등의 부문에서 대일 의존도가 높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세계적인 기술경쟁력을 보유한 일본

30) 양평성·구은아(2007).

기업의 기술이전에 주안점을 두는 대일 통상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측면에서 살펴보면, 중국은 WTO 가입을 계기로 시장개방이라는 내적 개방과 동시에 대외진출에도 힘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은 과도한 외국인투자 의존적 경제구조와 불균형적인 외국인투자 유입에 따른 구조적인 모순을 해소하고, 나아가 외국인투자를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변화와 임금·토지 가격 상승 등의 배경으로, 일본기업의 대중투자전략은 이전의 중국내 생산기지 설립을 위한 투자를 억제해 나가면서 중국 국내시장개척을 위한 투자를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자원 확보, 첨단기술 획득, 중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중국의 대외 영향력 확대 및 위안화 절상압력 완화 등을 목적으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최근에는 외국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시 첨단기술 이전을 회피하는 경향이 확산됨에 따라 선진기술 획득을 위한 대선진국 투자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상해전기집단총공사의 아키야마인쇄기제조와 池具에 대한 M&A 등 중국기업의 일본기업 매수 사례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닌 것이 되었다. 이처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선진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중국기업의 대일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일본 투자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FTA 추진전략을 살펴보면, 중국은 지역 리더십 강화, 대미 견제와 차별화, 해외 에너지·원자재 확보, 무역마찰 회피, 산업경쟁력 제고, 미국의 통상압력에의 대응, 서부·동북 개발진흥의 촉진 등 다양한 목적하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sup>31)</sup> 중국에 있어 FTA 추진 우선순위는 인접지역과 개도국 우선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에너지·자원의 확보,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과 같은 전략적 동기가 강하며, 이외에 해외시장 진출, 산업

31) 이장규·이인규·여지나·조현준(2006).

경쟁력 제고 등과 같은 경제적 동기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게 있어 일본은 해외시장 확대, 산업경쟁력 제고와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리더십 강화, 대미 견제와 차별화 등 자국 중심의 지역주의 형성을 촉진하는 목표를 전개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FTA 대상국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아시아에서의 패권을 둘러싸고 중·일 양국은 치열하게 물밑경쟁을 보이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양국간 FTA 논의는 지나치게 경쟁 양상에 밀려서 전혀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경단련을 비롯한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중·일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는 과도기에 있어 아직도 시장경제원리와 공정경쟁, 자유무역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대중 농수산물 시장개방은 당분간 시기상조이며, 중국으로의 생산기지 이전에 따른 급격한 산업공동화 방지도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는 무시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중국의 급부상으로 인해 아시아의 맹주자리를 내주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일본의 우려감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외교·안보 차원에서 사실상 미·일 안보 동맹하에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할 때 일본의 중국과 FTA 체결은 기존 안보체제의 일대 궤도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중·일 FTA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 4. 소결

이상에서 미국, EU, 중국과 일본과의 통상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미국 및 EU와 일본 간의 무역관계와 중국과 일본 간의 그것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전자의 미국과 EU는 일본에 대해 대규모 무역적자를 기록하면서 이에 따른 통상마찰이 야기된 반면, 후자의 중국은 오히려 일본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 EU는

일본에 대해 유사한 대응조치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통적으로 일본에 대해 초기에는 수입제한(수출자율규제), 반덤핑 제재와 같은 비관세조치를 도입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시장개방 및 규제개혁을 요구하였다. 반면 중국과 일본 간의 통상마찰은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된 1992년 이후 중국의 대일 수출이 급증하면서 빈번해졌다. 예를 들어 중국 수출농산품에 대한 일본의 세이프가드 발동에 대해, 중국이 보복조치로서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고관세 부과와 같은 수입제한조치를 실시하였다.

▮ 표 4-23. 미국·EU·중국의 대일 통상마찰의 특징 ▮

국 가	대 응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대 중반 이전 수출자율규제 실시, 현지생산화 요구</li> <li>-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시장개방, 구조개혁 요구</li> <li>- 1990년대 중반 이후 WTO 성립, 중국부상 등으로 양자간 긴장완화</li> </ul>
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80년대 중반 이전 수입수량제한, 반덤핑제재 등 비관세조치 도입</li> <li>-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의 시장개방, 구조개혁 요구</li> <li>- 1990년대 중반 이후 EU 역내시장통합에 따라 수입규제조치 철폐 및 긴장 완화</li> </ul>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산 농산품에 대한 무역장벽 해소 요구</li> <li>- 시안별로 보복관세 부과 등 수입제한조치 실시</li> <li>- 중국기업의 대일투자 환경 정비 요구</li> </ul>

자료: 필자 작성.

다음으로 미국과 EU의 경우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와 관련하여 수입제한과 같은 보복성 조치의 제도적 한계로 인해 일본의 시장개방과 구조개혁 요구로 대응전략을 전환하였다. 그리고 정례 정상회의, 정부-민간대화와 같은 양자간 대화의 틀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관찰시키고자 했다. 일본 역시 1990년대 불황과정을 겪으면서 그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점진적인 국내개혁을 시도하였다. 중국의 경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선진기술 획득을 겨냥한 해외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일본에 대해 투자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향후에도 이들 국가간에는 이러한 양자간 대화의 틀을 통해 통상현안들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양자간 대화는 기본적으로 이슈의 범위가 협소하거나 제도화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FTA와 같은 보다 수준 높은 틀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양자간 FTA와 관련해서는 마일간 FTA가 양국의 정부계 기관과 정부 보고서에서 언급되는 등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조심스런 정책추진 경향과 미국 내 무역증진권한(TPA) 시한 종료 등의 여건을 감안하면, 마일 FTA에 대한 논의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EU 및 중국과 일본 간의 FTA는 좀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2006년 말 발표한 신통상전략에서 일본이 아닌 ASEAN, 한국, 인도 등과의 FTA 추진을 분명히 했으며, 중일간 FTA도 농업문제, 정치·역사적 요인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 EU 및 중국의 대일통상정책의 경험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은 일본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미국이나 EU의 시도가 결코 쉽게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일본시장이 가지는 제도적·관행적 특수성이 매우 강력하였기 때문이다. 일본기업들에게는 이러한 일본의 제도적 관행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정상적인지 모른다. 미국이나 EU가 이러한 제도의 수정을 강요할 때 일본은 일부는 받아들이면서도 본질적인 요소는 유지하는 방식의 타협적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외압을 통한 구조개혁의 전형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EU에 비해 행사할 수 있는 힘이 그리 크지 못하다. 일본의 제도나 관행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공허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EU의 대일통상정책의 경험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일본과의 협력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협력분야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일본의 국내법 수정이 필요하거나 거시경제적 개혁이 필요한 거창한 요구는 공허한 요구와 다름없기 때문이다.

# 제5장

## 우리나라의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



## 우리나라의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

### 1. 기본방향

#### 가. 일본의 전략적 가치

이상에서 우리는 일본을 둘러싼 통상이슈들을 다각적으로 고찰하였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통상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보여 왔는지 그리고 한·일 양국간에는 어떠한 통상이슈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중장기적으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 어떠한 통상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이라는 국가가 경제적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전략적 의미에 대해 음미해 보자. 단, 한 국가가 가지는 전략적 가치는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정치·군사적 관점에서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분석은 제외하며, 대외경제관계 측면에서의 전략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어느 한 국가가 우리 경제에 주는 전략적 가치는 우리나라가 어떠한 경제시스템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도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경제시스템의 특징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 우리 경제는 10년 전의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제동을

거는 여러 가지 위협요인들이 등장하고 있다. 고령화와 출산을 저하, 중국기업의 추격과 이에 따른 국제경쟁력 저하, 에너지·소재 등 1차 상품의 가격상승,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환경규제 강화, 자유무역의 확산과 이에 따른 시장개방 압력의 증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위협요인들을 제거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우리 경제는 어떠한 경제시스템을 지향해야 할 것인가? 본 보고서가 이 질문에 해답을 줄 수는 없다. 그러나 향후 우리 경제가 지향해야 할 몇 가지 방향은 분명한 것 같다. 첫째는 노동이나 자본의 양적 투입을 중심으로 하는 요소투입형 성장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성장전략으로는 더 이상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의 개발도상국과 경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는 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경시하는 경제 시스템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이다. 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무시한 제품은 더 이상 선진국 시장에서 통용될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이 분명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나아가 인도 등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국제적인 생산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국내만을 대상으로 한 생산네트워크로는 글로벌 시대의 국제경쟁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는 ‘기술’, ‘환경’, ‘경제통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도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노하우, 환경 친화적인 제품·제도·기술능력,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이를 활용한 국제적인 생산네트워크 구축능력 등이 향후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가장 핵심적인 경제적 자원이다.

그렇다면 일본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경제적 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일본의 이러한 능력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달려 있다. 필자는 이 세 가지 측면 모두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매우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

먼저 ‘기술’의 측면을 생각해 보자. 여기서 말하는 ‘기술’은 공학적 의미에서의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동일한 노동과 자본을 가지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제도, 기술, 지식, 조직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의 기술이다. 경제학적인 용어로 ‘총요소 생산성’이 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러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 지식, 기술을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단가인하를 요구할 때 중소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일본의 중소기업들은 다년간의 경험과 노력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

‘환경’의 측면은 어떠한가? 필자의 판단으로 일본은 환경과 에너지 효율을 중시하는 환경선진국의 하나이다. 최근 일본정부는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은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의 에너지 절약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기술 등 자동차 관련 첨단기술 또한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기술들이다.

‘경제통합’, 특히 동아시아 경제통합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일본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이다. 또한 일본기업들은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최적의 생산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해 있다. 이처럼 일본기업들이 형성한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는 우리 기업이 형성하고자 하는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경쟁자이면서 또한 협력자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제3국에서의 한·일 기업간의 협력은 아직 미미한 수준에 있으나 향후 이러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양국 기업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

한편 그동안 일본의 전략적 가치로서 중시되어 온 수출과 투자는 어떠한가? 본고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시장과 투자유치라는 측면에서 일본이 가지는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해 왔다. 아시아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이 빠른 속도로 확대됨에 따라 일본시장으로의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9%에서 2006년 8%로 하락하였다. 투자유치

라는 측면에서도 미국이나 EU 등 서구 선진국에 비해 일본의 투자비중은 하락해 왔다. 이는 1990년대 장기불황의 영향과 아세안 및 중국을 중시하는 일본기업의 투자전략의 결과이기도 하다. 결국 일본이라는 국가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수출시장과 투자라는 전략적 가치는 글로벌화의 진전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규모면에서 아직도 일본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크다.

#### 나. 대일 협력관계의 재구축

그렇다면 이상과 같은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본과 어떠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좋을까? 본 절에서는 이 점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한·일 경제협력과 관련된 정부정책에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몇 가지 잘못된 관념에 대해 먼저 논의해 보자. 첫째는 역사적 피해의식이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본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파생되는 역사적 피해의식의 왜곡된 작용이다. 우리가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의식이 너무 강하게 남아 있는 나머지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일본의 양보를 먼저 요구하고 무언가 보상을 요구한다.

이러한 역사적 피해의식과 보상심리는 과거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하던 단계에서는 유용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일본의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싶은 심리가 우리 사회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먼저 이러한 역사적 피해의식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모한 보상심리를 제거해야만 한다. 지나친 피해의식은 민족주의를 강화시키고 민족주의는 대립과 반목을 자극한다. 그 자리에 협력과 공존공영은 존재할 수 없다.

둘째는 경제적 피해의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만성적인 대일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우리 경제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식이다. 우리나라 국민들 중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세계시장에 수출하여 획득한 외화가 일본기업을 살찌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피해의식은 대일무역수지 적자해소를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게 만들었다. 대일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현재까지 많은 정책을 내놓았다. 비관세 장벽을 제거해 달라고 일본정부에 요구하거나 일본제품의 수입을 다른 나라 제품으로 전환하는 수입선 다변화 정책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별로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수입선 다변화 정책은 이미 폐지된 지 오래다.

대일무역수지 적자는 우리나라 소비자와 기업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결과 나타난 거시경제적 현상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소비자와 기업들이 국내제품을 쓸 것인지 아니면 외국제품을 쓸 것인지, 외국제품 중 어느 나라 제품을 쓸 것인지에 대해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이러한 선택의 집합으로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상대국의 문제로 돌릴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이제 우리는 일본에 대해 느끼는 경제적 피해의식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성숙된 경제의식이야말로 한·일 양국간의 합리적인 경제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한·일경 제협력의 구체적인 방식에서도 변화와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는 한·일 경제협력을 단순히 한·일 양국 내에서의 경제협력으로 국한하는 좁은 시야를 탈피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기업의 경제활동범위가 글로벌하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 이외의 지역에서 양국 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양국 기업의 원만한 협력에는 상이한 경영풍토, 기술능력의 차이, 거래경험 부재, 각종 정보부족 등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소신도 보편화되는 것이 현실인 만큼 양국 기업이 상호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이러한 영역에서의 협력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둘째는 한·일 양국 내에서의 협력에서도 양국이 보유한 경쟁우위의 요소들

을 상호간에 활용하여 자신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협력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일본기업의 투자나 기술이전 등에 너무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해온 감이 있다. 그러나 일본기업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를 하는 방식 이외에도 양국 기업간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수 있다. 즉 일본기업과 우리 기업의 결합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는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굳이 일본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전략적 제휴를 맺은 기업의 결합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수 있다. 양국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일 것이다.

일본의 투자와 기술이전을 강조하는 종래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버려야 할 묘한 보상심리에 근거해 있다. 우리는 투자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바라는 심리인 것이다. 최근 일본기업의 대한투자에 대해 조사해 보면 우리나라는 과거와 같이 생산거점으로서의 매력을 거의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는 대부분 우리나라 국내시장판매를 목적으로 한 시장지향형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국내시장에서의 수요창출이 전제되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가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기술이전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일방적인 기술이전을 기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며 또한 실현가능하지도 않다.

마지막으로 양국간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기업 차원에서의 인적 네트워크와 더불어 특히 정부 차원에서의 친밀한 교류가 필요하다. 현재 양국 정부간의 인적 교류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아세안+3 정상회담이나 여타 한·중·일 장관회의 등이 있으나 이러한 공식적인 네트워크 이외에 정부당국자간의 긴밀한 정책협조를 가능하게 하는 실무자급에서의 인적 교류도 요구되고 있다.

결국 향후 한·일간 경제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을 전환해야 하고 협력방식에 대해서도 많은 아이디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양국 정부 및 기업들 간의 인적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

저야 하며 일본관련 인재의 육성도 요구되고 있다. 특히 향후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협력해야 할 분야로서는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노하우의 습득, 환경보호와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 및 제도능력의 습득,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통합에서 수준 높은 제도적 조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일 정부간의 협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 2. 분야별 통상전략

### 가. 시장 확대

본고의 제3장에서는 한·일 경제관계의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다. 교역부문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한·일간의 교역규모가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는 데 그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양국간 교역규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하락하고 있다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중국이나 기타 아시아 국가와의 교역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무역 파트너로서의 양국의 상대적 중요성은 점차 저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로서는 매우 중요한 조달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전자 대기업들의 일본설립 법인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판매가 아니라 조달이라는 점이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 준다. 한편 일본기업들로서도 우리나라는 역시 중요한 조달기지의 하나이다. 경쟁격화로 인하여 일본기업들도 기존의 계열관계를 넘어 조달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기업의 조달전략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가 일본기업의 조달기지로 성장할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한·일간 무역에서 반도체, 철강, 화학제품 등 부품소재가 양국 모두에서 상위의 수출품목이다.

따라서 한·일 양국 기업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공급체인상의 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다. 양국 기업은 이미 국내에서의 생산 네트워크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한·일 양국 기업은 이미 서로에게 중요한 네트워크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따라서 국제 네트워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양국간에 존재하는 교역상의 장벽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한·일 양국을 넘어 동아시아 전체에 걸친 경제통합을 추진하여 자유로운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한·일 양국의 산업구조 및 수출구조는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 수출상위 20대 품목(HS 2단위) 중 양국의 중복품목이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2006년)은 한국 89.4%, 일본 86.1%로 매우 높다. 양국 모두 비슷한 제품이 주력 수출 품목임을 알 수 있다. 1990년 우리나라의 상위 20대 품목 중 대일 경합품목의 수출비중이 59.7%였던 점을 볼 때 한·일간의 경합관계는 과거에 비해 더욱 강화되었음도 확인할 수 있다.<sup>32)</sup> 이처럼 양국의 수출구조가 경합적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협력구조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 수 있다. 그러나 한·일 간의 경합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한·일 경합관계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영향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세계경제의 호황, 우리나라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한·일 양국의 제품이 점차 차별화되고 있어서 각자 독자적인 시장을 개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또한 한·일 양국간에도 중간재의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경제통합의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32) 강두용(2007).

표 5-1. 한·일 산업별 세계시장점유율 변화

(단위: %)

산업	한국			일본		
	1996년	2002년	2005년	1996년	2002년	2005년
섬유류	6.4	4.5	2.7	3.0	2.0	1.6
철강	4.1	3.8	3.8	11.0	9.2	7.0
화학제품	2.4	2.7	3.0	8.4	6.9	5.6
비철금속	1.3	1.8	1.9	4.8	4.0	3.4
일반기계	1.4	1.6	1.7	15.5	10.9	8.9
정밀기기	1.1	0.8	2.4	14.4	10.9	9.3
가전	6.6	5.5	4.1	14.3	10.6	7.5
전자부품	9.6	5.3	6.5	23.3	14.0	11.5
컴퓨터	2.9	5.2	3.6	15.9	7.8	5.0
통신기기	3.3	8.0	8.8	8.7	4.8	4.3
중전기	2.0	1.9	1.7	13.7	8.6	6.9
자동차	2.6	2.8	3.6	16.6	15.5	12.1
조선	18.1	20.4	17.9	27.2	19.7	14.2
전산업	3.0	2.7	2.6	9.5	6.8	5.4

자료: 강두용(2007).

결국 이론적으로 볼 때 양국간의 경제통합은 양국간의 산업 내 무역을 활성화하면서 양국 기업의 비용절감을 촉진하고 이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출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양국 기업의 경합관계에도 불구하고 수출제품의 적절한 차별화를 잘 도모한다면 독자적인 시장개척을 통해 경쟁보다는 공생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 결국 양국 정부가 교역부문에서도 도모해야 할 협력의 핵심은 앞에서 제시한 이론적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 나. 투자 확대

한국에 있어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신고 기준)는 특히 2004년에 들어 급증하여 2000년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은 2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2004년도

의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의 중요한 특징으로서는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 분야의 신규투자형(greenfield형) 투자가 잇달아 이루어진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서는 액정·디지털제품에서 세계적인 생산거점으로서의 지위를 제고시킨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고객의 근처에 생산거점을 설치하는 것은 고객확보라는 목적달성 이외에도 공급사슬관리의 시행 및 물류비용의 삭감을 가능케 하기 때문에 이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에 들어서는 한국 전체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 대비 9.6% 감소한 추세에 발맞추어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도 전년 대비 16.8% 감소한 19억 달러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한편 최근 들어 한국정부는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각종 외자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2005년의 주된 외자유치정책으로서는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시행(1월), 외국인투자자의 영주권·체류기간 요건의 완화 등이 행해졌다.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 내용으로서는 ① 외국인기업 전용단지의 외국인투자지역으로의 일원화, ② 투자유치정책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운용권한 확대, ③ 2003년에 종료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어서의 국가유공자(상이군인·경찰관 및 그 유족 등)의 고용의무 면제 기간 연장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영주권·체류기간의 규정은 법무부의 내부지침 변경에 의해 영주권의 대상자는 투자금액이 200만 달러 이상(변경 전 50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되었고,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의 체류기간은 5년(변경 전 3년)으로 연장되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산업자원부는 2006년 외자유치의 중점과제로서 ‘양질의 성장형 외자 유치’를 제기하였다. 즉 부품·소재, 연구개발센터, 물류센터, 아시아지역 총괄본부 등 국내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외자기업을 중심으로 유치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러한 산업자원부의 방침은 현재 부품·소재 등의 대일의존도 심화로 대일 무역적자가 2007년도에 300억 달러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지극히 시의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1990년대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들어서도 극심한 부침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일본의 유망한 부품·소재기업의 국내유치 및 국내제품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확대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

|| 표 5-2. 최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추이(신고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국가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아시아	4,721	2,343	2,269	1,486	4,925	3,509
<b>일본</b>	<b>2,448</b>	<b>772</b>	<b>1,403</b>	<b>541</b>	<b>2,258</b>	<b>1,879</b>
싱가포르	304	190	146	236	376	389
홍콩	123	167	234	55	90	820
EU	4,392	3,062	1,663	3,602	3,009	4,781
네덜란드	1,768	1,245	451	161	1,309	1,150
영국	84	432	115	871	642	2,308
독일	1,599	459	284	370	487	705
북미	6,519	5,584	4,859	1,842	5,199	3,107
미국	2,922	3,889	4,500	1,240	4,718	2,690
캐나다	520	1,506	261	73	224	193
합계	15,697	11,292	9,101	6,468	12,788	11,564

자료: 한국 산업자원부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함.

한편 그동안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부진한 것은<sup>33)</sup> 근본적으로는 일본 경제의 장기침체에 가장 큰 원인이 있지만, 일본기업이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우리 나름의 노력이 미비했던 데도 그 원인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일본으로부터의 직접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우리나라는 제도 및 투자환경 등의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하다.

첫째,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중국이나 아세안에 비해 뚜렷한 투자 유인이 없다고 여겨지는 사실을 중시하여, 이들 지역 등과 맞서 일본의 투자를

33)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를 국제수지 기준(net 개념)으로 볼 때, 2000~05년에 2000년(10억 8,200만 달러)과 2005년(17억 3,600만 달러)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8억 달러 미만의 수준에 머무른 데다, 그 추세도 감소 경향을 보인 경우가 많았다.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욱 체계적인 투자유치대책을 수립·운용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본기업들이 비교적 크게 문제 삼고 있는 노동 및 노사 부문, 세금 부문, 부동산의 구입 및 임차 부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일본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행정규제·비즈니스 관행·통관 및 관세·금융·물류 등 사업환경 면에서 개선할 점이 많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영국, 아일랜드 등 외국기업들의 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의 예를 참고하여 우리의 사업환경을 적극 개선함과 아울러, 일본기업들의 사업환경 개선요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또한 이들의 개선요구가 정책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일본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외국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여건’이나 ‘의료 및 병원시설’ 등 생활여건 면에서 자기들을 만족시킬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편한 생활여건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일본기업들은 향후 동북아에서 한국이 정보통신·영상산업이나 첨단 기술산업 및 물류 부문 등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기고 있는 사실을 감안하여, 이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더 나아가 이미 설정된 경제자유구역이나 지역특구를 일본기업의 투자유치 및 이들과의 전략적 제휴 활성화를 위한 발판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등 중간재 및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일본으로부터 부품산업에 관련된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품산업 중에서도 향후 독자적인 기술발전이 가능하고 첨단기술을 소유한 산업들만 선별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

## 다. 기업간 전략적 제휴 확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시작하던 단계에서는 일본기업의 직접투자 및 기술 이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적 기반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경제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고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한·일 양국 기업이 직면한 경제적 여건은 크게 바뀌었다. 이러한 경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한·일 양국 기업의 협력방식도 전환되어야 하는데 최근의 양국 기업의 협력은 직접투자보다는 전략적 제휴로, 직접적인 기술이전보다는 지식재산협력으로 협력의 중심이 이전되고 있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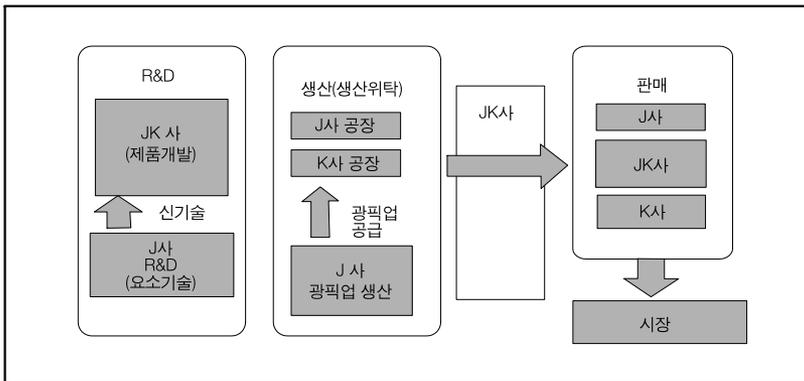
본고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 한국의 외국인투자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한국은 일본기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장임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일본기업의 한국투자는 양국의 산업협력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투자대상 지역으로서의 중국의 부상, 일본 국내로의 투자회귀 현상, 한국의 생산거점으로서의 흡인력 저하 등을 고려해 보면 한국의 투자대상 지역으로서의 매력도는 상대적으로 저하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일본기업들이 한국에 직접 공장을 설립하는 형태의 투자보다는 양국 기업이 각자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상호의 경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방식이 더욱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한·일 산업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세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제품분야에서 양국의 대기업이 협력하는 것이다. 물론 중소기업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대기업의 협력은 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핵심적 제품의 세계시장을 확대하고 지나친 시장경쟁을 완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계시장으로의 공급체인상에서 한·일 기업의 분업구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핵심 제품에서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를 극대화한다면 한·일 기업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그림 5-1]은 한·일 기업의 전략적 제휴의 하나의 사례이다. 일본의 J사와

한국의 K사는 DVD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양사는 합작회사인 JK사를 설립하여 공동 제품개발, 생산 및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K사는 완성품의 제품개발력 및 양산기술에 뛰어난 반면 일본의 J사는 핵심부품인 광픽업을 공급하고 제품개발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제공한다. 이렇게 K사와 J사는 각자의 강점을 제공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고 이를 세계시장에 공급한다. 이러한 전략적 제휴로 K사와 J사는 공동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K사와 J사가 공급체인상의 모든 과정을 자사 내에서 처리하려 한다면 그만큼 비용과 기술면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다. 양국의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많은 제품들에 대해 이와 같은 협력 가능성을 모색한다면 의미 있는 한·일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림 5-1. 한·일 기업 전략적 제휴 사례 ▮



자료: 이형오(2007).

위의 사례는 한·일 기업의 기술협력에도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 어느 기업이건 자사가 공동에 개발한 기술을 타사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예는 없다. 어떤 형태이건 자사에게 이익이 되는 경영자원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제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중국 등을 중심으로 기술모방과 지식재산권 침해사태가 빈발하고 있어 한·일 양국 기업은 모두 자사의 기술을 보

호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장여건을 고려해 볼 때 양국 기업의 기술협력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앞의 사례에서는 일본의 J사가 제품개발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제공해 주는 반면 K사는 제품개발력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능력을 제공해 준다. J사는 요소기술을 제공해 주는 대가로 DVD 제품의 대량생산과 이 제품의 생산에 핵심적인 부품인 광픽업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한·일 기업 간 기술협력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기술 지도를 하거나 기술을 이전하는 형태가 아니라 각자의 강점기술을 결합하여 세계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 기여하는 형태의 기술협력이 주류를 이루어야 한다. 시장의 경쟁은 당연히 이러한 방향으로 기술협력을 유도할 것이다.

이러한 경제여건을 고려해 볼 때 한·일 양국의 산업 및 기술협력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는 양국 대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촉진하는 시장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양국 시장의 통합, 즉 한·일 공통시장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지식재산을 상호 존중하는 시장 환경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략적 제휴의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는 것은 공동 기술개발 혹은 각자의 강점 기술의 상호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이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협력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지식재산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양국의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양국의 지식 재산 관련 제도의 조화와 시장에서의 기술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 라. 환경·에너지 협력 확대

환경·에너지 부문에서의 한·일 협력은 본 장의 제1절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협력분야이다. 그 이유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규제를 돌파하기 위한 기술력과

제품기획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환경규제로 인해 해외수출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환경과 에너지를 중시해야 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이다. 또한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간 환경협상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우리나라가 준수해야 하는 국제적인 환경관련 룰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대표적으로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의거한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의무가 있다.

이처럼 환경·에너지 부문이 생산, 무역 등 경제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면서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이 향후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보급이 이루어지면서 종래의 자동차 시장이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자동차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과 에너지를 축으로 한 엄청난 기술혁신의 파도가 조만간 우리 경제에도 크게 밀어닥칠 것이 명확하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나라는 환경·에너지 분야 선진국인 일본과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일본과의 협력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자간 협상과정에서의 협력이다.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와 관련해서 일본은 EU와 더불어 매우 적극적인 국가이다. 일본은 또한 한국을 비롯한 대량 배출국가에 대해 2013년

▮ 표 5-3. 일본의 저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노력 ▮

분 야	현 황
철, 시멘트	- 세계최고수준의 에너지 효율(철 1톤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EU, 중국, 미국, 러시아 등은 일본의 1~1.25배, 2003년)
원자력	- 총 발전 전력량의 3분의 1
교통	- 공공교통 분담률: 일본 46.7%, 영국 13.1%, 독일 20.7%, 프랑스 16.1%, 미국 22.4%
자동차	-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국내외 판매대수는 2007년 4월까지 약 100만대
태양전지	- 1999년 이후 태양전지 생산량 세계 1위

자료: 日本 外務省.

이후에는 배출삭감에 참여해야 함을 주장하는 국가이다. 이는 미국이나 중국 등과는 매우 대조적인 입장이다.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애매한 입장에 있는 데 필자는 오히려 EU나 일본과 같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교토의정서 이후의 국제기후변화체제 형성과정에서 일본과 공동보조를 맞추는 편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일본은 앞에서 언급한 기후변화에 대해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한 나라이다. 신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개발, 제품의 에너지 효율증대, 국민의 라이프스타일 개혁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 표 5-4. 중·일간 환경협력의 주요내용(2007년 4월의 양국 공동성명) ▮

분 야	주요 협력내용
수질	음용수 수원보호 長江유역 수질오염방지 황해·발해 수질오염방지 기타 하천 수질오염방지에 협력
폐기물	폐기물 재생이용 강화 폐기물 회수 및 기업환경보호감독원제도 도입에 협력
대기	이산화황 배출삭감 산성비·황사 모니터링 네트워크 정비 석탄화력발전소에서 탈질소 기술 이전
기후변화	교토의정서체제에 대한 상호준중과 협조 2013년 이후 제2약속기간에의 적극 참여 CDM 협력을 강화
폐기물 이동	폐기물의 불법적인 국경이동이나 해양표류 폐기물의 국경간 이동에 공동대응
조립	'일중민간녹화협력위원회'의 역할을 적극 평가
지역협력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 지역 협력메커니즘에 적극 협력
정부차원 협력	일중 환경보호 합동위원회에서의 협력 및 정책대화 강화 기술교류 촉진을 위해 지식재산 보호강화
협력거점	일중우호환경보전센터의 역할을 강화하여 환경보호기술 이전의 거점으로 활용

자료: 『일본경제신문』(2007. 4. 12).

기본적으로는 기술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저탄소 사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일본은 자동차, 가전, 철강, 신에너지 등 여러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과 노하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환경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면서 이를 경제적 이익과 연계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일본은 환경세나 배출권제도 등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제도의 도입에는 매우 소극적이다. 다만 우수한 환경기술의 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비즈니스 기회로 활용하려는 전략이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일본의 기본전략을 수용하면서 일본기업이 전개하는 비즈니스 활동으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환경·에너지 관련 기술이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셋째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지역환경협력이다. 특히 중국과의 환경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 이유는 중국의 환경오염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일본과 중국의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일·중 양국간에 환경·에너지 협력도 매우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러한 협력형태는 우리나라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중간 환경·에너지

▣ 표 5-5. 중·일간 에너지 협력의 주요내용(2007년 4월의 양국 공동성명) ▣

분야	주요 협력내용
모델 프로젝트	'일중 에너지절약·환경비즈니스추진 모델 프로젝트'의 구체화
연수	일본 경제산업성은 향후 3년에 걸쳐 중국정부 등에 300명 규모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연수 실시
연구	양국 연구기관의 에너지 정책 공동연구
석탄	석탄의 효율생산, 탄광의 안전, 석탄의 클린 이용 등 분야에서 협력
원자력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안전운전에 관한 협력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이용분야에서 협력
시장환경정비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비즈니스 협력의 잠재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장의 투명성, 지식재산의 보호 강화 등 시장환경 정비

자료: 『일본경제신문』(2007. 4. 12).

협력의 핵심은 중국이 안고 있는 다양한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술적으로 협력하는 한편 이러한 협력을 사업화함으로써 일본기업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다. 협력과정에서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도입하여 추진하려는 것이 이러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sup>34)</sup> 한편 한·일 간에도 특히 에너지 및 기후변화 분야에서의 협력이 매우 필요하다.

#### 마. 인적교류 확대

현재 한·일 양국은 저출산과 고령화에 직면해 있다. 일본은 2006년에 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에 진입했다. 일본의 민간연구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노동력 인구가 5.8%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일본은 2005년 1억 2,777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감소세로 전환되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출산 문제가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으며, 2020년대 중반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일 양국 모두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 후퇴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일 양국간에 이러한 노동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협력방안은 무엇보다도 양국 시장을 통합하여 서로간에 요구되는 우수 인력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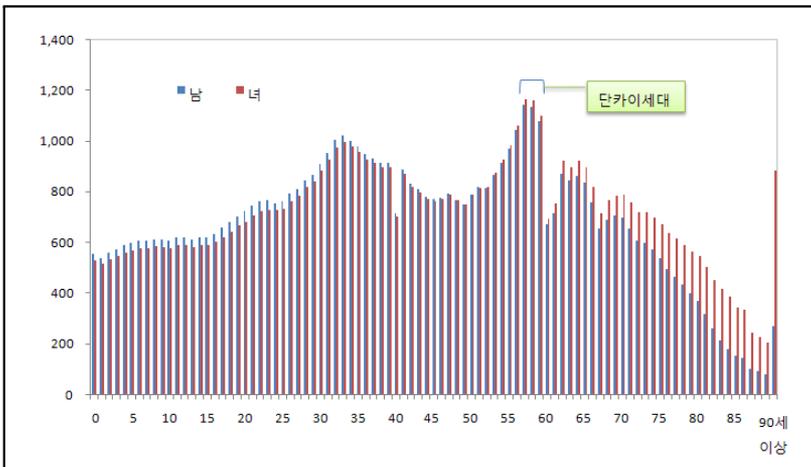
우리나라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히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 및 애로기술의 해결을 위해 일본의 숙련기술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이 2006년 11월 전국 27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일반적으로 해외기술자를 고용한 경우 자문형태와 기술개

34)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더욱 낮은 국가이다. 또한 중국에서의 에너지 효율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석유수요의 안정을 통해 유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고, 대기오염 개선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으로의 오염의 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다. 일본은 에너지 협력을 통해 이와 같은 간접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이용, CDM 사업의 발굴 등은 일본경제에 직접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사업들이다.

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기술적으로 애로요인이 있을 경우 일본 기술자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본 기술자 고용에 있어서 전문가의 소재파악과 초청비용에 대한 부담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었다. 일본 기술자의 초청에 소요되는 연간 예상경비는 2,000만~3,000만 원 수준이 가장 많았다.<sup>35)</sup>

그런데 일본에서는 2007년부터 무려 680만여 명에 달하는 전후 베이붐 세대, 즉 단카이(団塊) 세대<sup>36)</sup>라고 불리는 숙련인력들이 60세 정년을 맞이한다. 일본에서는 단카이 세대의 대량 퇴직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문제점(노동력 부족, 기술승계 차질, 연금재정의 악화 등 이른바 「2007년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후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의 대량 퇴직에 따른 문제점들이 당장 가시화되

▮ 그림 5-2. 일본의 인구구성(2006년 10월 현재) ▮



자료: 日本 總務省 홈페이지.

35)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2006).

36) 단카이 세대란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47~49년의 3년간에 걸쳐 태어난 '1차 베이비붐' 세대를 의미한다. 이들은 다른 해에 태어난 사람들에 비해 20~50% 정도 많으며, 서로 잘 뭉치는 특성이 있어 '덩어리'를 뜻하는 단카이(団塊) 세대로 불리게 되었다.

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들 재고용자들의 임금수준은 퇴직 전의 절반 수준으로 신입사원의 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임금수준으로만 본다면 현재의 환율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에서 이들의 활용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한·일 양국간 FTA 체결로 인력이동이 자유로워진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필요한 일본 숙련인력의 소재파악이다. 따라서 정부 산하의 공익적 기관에서 향후 보다 체계적으로 일본의 숙련기술자 DB를 구축하고 중소기업과의 매칭사업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대만의 경우 이미 2005년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본의 은퇴기술자를 영입·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설명회 등을 개최해오고 있다. 또한 양국의 면허·자격제도에 대한 상호인정을 통해 인력이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면허·자격제도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 제6장

## 요약 및 결론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전개해야 할 대일 통상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삼고 이를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일본이라는 국가를 고찰해 왔다. 첫째는 일본의 통상전략 그 자체의 변천과정과 최근의 동향 및 특징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는 한·일 양국간의 대외경제관계 현황과 과제에 대해 고찰하였다. 셋째는 미국, EU, 중국의 대일 통상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의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의 기본방향과 주요 분야별 통상전략을 제시하였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을 중시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으나 1990년대 말 이후 FTA를 중심으로 한 양자간 협상도 함께 추진하는 중층적 통상전략으로 전환하였다. 현재 일본은 특히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역외 국가들과는 자원 확보 차원에서 FTA 교섭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ASEAN+한·중·일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는 보다 광역적인 지역의 경제통합체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구상은 2008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10년에는 협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동아시아를 중시하는 일본의 통상전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통상전략은 어떠한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우선협상 대상국이었으나 한·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일본 또한 같은 시

기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상대상국이었으나 현재는 미국, EU, 중국 등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취급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은 한·일 FTA 협상이 한창 논의되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시기와 명분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일 경제관계를 통사적으로 고찰하면 양국의 서로에 대한 경제적 중요성은 점차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의 제3장에서 상세히 고찰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투자에서 일본의 비중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신흥국가의 등장으로 수출시장과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한·일 양국은 대외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관계가 소원해졌을 뿐만 아니라 무역·투자 등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일본시장개척과 일본기업의 대한투자유치를 대일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은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대표적 수출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일본시장 진출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일투자 또한 그 규모가 작고 비제조업 분야가 더 많다. 최근에는 골프장 매입 등 비생산적 분야에서의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대세계수출이 증가하면 대일수입이 증가하는 한·일 무역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만성적인 대일적자는 대일관계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가 되어 왔다. 결국 우리나라의 대일 통상전략과 이를 구체화하는 각종 정책은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대일 통상정책에서 실패한 나라는 우리나라만이 아니었다. 미국이나 EU 등 거대경제권의 사례가 이를 잘 말해준다. 미국, EU 및 중국의 대일통상전략을 고찰하여 내린 결론은 이렇다. 즉 이들 경제대국조차 일본과의 무역역조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무역역조라는 매우 거시적인 문제보다

는 협력분야를 미시적으로 설정하고 이들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들을 추진한다는 전략으로 전환하였다는 점이다.

미국은 일본시장을 더 활짝 열기 위해 일본의 구조개혁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고 일본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국내적으로 상당히 많은 개혁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일적자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일적자가 지속되는 근본적 이유는 일본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기업의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EU는 미국과 유사한 대일통상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중국의 대일통상전략은 개별 협력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전개하는 방식이며 무역역조라든지 투자확대와 같은 거시적인 접근 방법은 취하지 않고 있다.

이상의 고찰로부터 우리가 얻은 결론은 명확하다. 즉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대일통상전략은 최근의 경제 환경 변화나 선진국들의 대일통상전략의 동향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일 중장기 통상전략은 어떻게 재구축되어야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제5장의 제1절에서 그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전략에 비추어 일본의 풍부한 경제적 자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대일협력분야를 설정해야 하며 이 분야에서의 협력강화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향후 기술, 환경·에너지, 경제통합이라는 세 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대일통상정책에서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왜 이 세 가지 분야가 대일통상정책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5장의 제1절에서 논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들 세 가지 분야는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따라서 상호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기업의 기술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기술협력이 매우 필요한 데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조성은 양국간의 제도적 조화와 시장통합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 입장에서 기술능력 향상이 매우 필요한 분야는 환경·에너지 분야이다. 현재 포스트 교토의정서 체제를 둘러싼 협상이 진행되고 있

는 데 협상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사용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것이 틀림없다. 이제까지 없던 새로운 성장의 제약조건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돌파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가능 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결국 우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에너지 제약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이 보유한 제도와 기술을 어떻게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일 양국의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며, 나아가 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 국문 자료

- 강두용. 2007. 「일본경제 재부상의 산업적 특징과 한일 산업관계」. 『일본경제 재부상과 한국의 산업』. 산업연구원 국제세미나 자료.
- 강문성·나수엽. 2002.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세원. 2004. 『EU경제학』. 박영사.
- 김양희. 2006. 「일본 FTA 정책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2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종걸. 2005. 「한국의 공업화구도와 한일경제관계」. 『한일경상논집』 제32권. 산업연구원. 2005. 『한일 FTA가 주요 부품소재산업에 미치는 영향』.
- 신현수·사공목. 2007. 「최근 대일 역조 확대의 원인과 전망」. 『e-KIET 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 양평섭·구은아. 2007.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연구자료 07-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오승구. 2002. 「美 통상정책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 이장규·이인구·여지나·조현준. 2006.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연구보고서 06-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홍배·김양희·김은지·정훈. 2003.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FTA 정책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형오. 2007. 『글로벌 가치활동 네트워크와 한국의 입지우위』. KIEP 한일공동세미나 자료. (6월)
- 임혜란. 2002. 「미국의 신통상정책과 이념의 역할: 미·EU 통상마찰의 재조명」. 한국EU학회.
-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서울마케팅리서치. 2006. 「일본기술자 고문 매칭 사업 실효성 진단 조사 결과보고서」.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 • 외국문 자료

### 〈일문자료〉

- 高橋直樹, 2007, 「2006年わが国の対外直接投資動向」, 開發金融研究所, 第35号, 10月.
- みずほ総合研究所, 2006, 「EUの新通商戦略 - アジア諸国とのFTAを積極的に推進」.
- 富士通総研, 2007, 「アジア企業の対日投資戦略と日本の誘致策」.
- 岩見元子, 2007, 『製造業を中心とした中国企業の海外直接投資動向』, 海外投融资情報財団, pp. 11~16.
- 日本 經濟産業省, 2001, 『通商白書 平成13年度版』.
- \_\_\_\_\_. 2006, 『グローバル經濟戦略-東アジア經濟統合と日本の選択』.
- \_\_\_\_\_. 2007, 「日米投資報告書-成長のための日米經濟パートナーシップ」.
- 日本 經濟財政諮問會議, 2007, 「經濟財政改革の基本方針2007」, 6月.
- 財團法人 建設經濟研究所(RICE), 2004, 「RICE monthly」 No. 180, 2月.
- JETRO, 2006, 『貿易投資白書』.
- \_\_\_\_\_. 2007a, 「第12回 対日直接投資に関する外資系企業の意識調査」.
- \_\_\_\_\_. 2007b, 『FTA ガイドブック』.
- 池間 誠・大山大道廣, 2002, 『國際日本經濟論』, 文眞堂.
- 青木 健・馬田啓一 編, 2006, 『日美經濟關係論 : 米國の通商戦略と日本』, 勁草書房.
- 『日本經濟新聞』.
- 日本銀行 [www.boj.or.jp](http://www.boj.or.jp)
- 日本 外務省 [www.boj.or.jp](http://www.boj.or.jp)
- 日本 財務省 [www.boj.or.jp](http://www.boj.or.jp)
- 日本 總務省 [www.boj.or.jp](http://www.boj.or.jp)

### 〈영문자료〉

- Armitage, Richard L, and Joseph S. Nye, 2007,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CSIS, February.
- European Commission, The EU's relations with Japan.
- IMF DOTs.
- UN Comtrade.
- USTR, *2007 Trade Policy Agenda and 2006 Annual Report*.

European Commission, The EU's relations with Japan, [ec.europa.eu/external\\_relations/japan/intro/index.htm](http://ec.europa.eu/external_relations/japan/intro/index.htm)

BEA, [www.bea.gov/i](http://www.bea.gov/i)

JETRO, [www.jetro.go.jp/indexj.html](http://www.jetro.go.jp/indexj.html)

USTR, [www.ustr.gov/index.html](http://www.ustr.gov/index.html)



## Executive Summary

# **Korea's Mid- to Long-Term Economic Strategy for the Japan**

Sung Chun Jung, Hyong Kun Lee, and Eun Ji Kim

Korea was a priority foreign country of Japan till early 2000s, but its status was lost when FTA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reached a deadlock. Japan also was an important entity for Korea during the same period, but has recently been treated as less weighty than the US, the EU, China, or others. Therefore, Korea and Japan have been confronted with an entirely different situation from the primary FTA discussion between two countries of the early 2000s, and it seems that the two countries are searching for the proper moment and justification for a solution to that problem.

In line with this necessity, this report presents Korea's trade policy toward Japan in the mid and long terms. The existing research on Japan's bilateral and multilateral trade policy was roughly carried out, but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considers the main features and changes of Japan's trade policy, and focuses on analyzing trade policy toward Japan of countries like the US, the EU, and China. Furthermore, this research suggests a strategic direction for Korea's trade policy toward Japan and submits a scheme of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raditionally, Korea treats seeking the Japanese market and attracting Japan's investment as an important goal for economic policy with Japan; but these policies have failed to realize the anticipated results. For example, car products, our typical export item, are hard-up to penetrate the Japanese market, and also, our investment to Japan is small and the greater part of the investment is in non-manufacturing industries. Recently, investment into non-productive factors like the purchase of golf courses has increased. On the other hand, our chronic

trade deficit to Japan politically become a hot issu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ing our trade structure to Japan, our imports from Japan increase when our exports to the whole world increase, has become sticky. It does not seem that Korea's trade policy toward Japan is very successful.

The case of Korea, however, is not the only one among countries with failed trade policies toward Japan. For instance, even great powers like the US, the EU, and China have failed to find a solution to their trade deficits with Japan, and they change their strategies microscopically to fix cooperative sectors and drive forward a concrete cooperative project against very macroeconomic issues like trade deficits.

The results obtained from our study are distinct. That is, our traditional trade policy toward Japan is not adequate in light of recent changes in the economic environment between Korea and Japan, and as an advanced nation's trade policy tendency to Japan. How should our trade policy toward Japan in the mid and long terms be restructured? One solution is that we should set up a cooperative sector with Japan to make the best use of Japan's strength, and concentrate our policy on cooperative consolidation in this field. In particular, cooperation with Japan in three sectors such as technology, environment and energy, and economic integration is very important.

## ■ 연구보고서

- 07-01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권 율·박복영·정성춘·이성봉 외
- 07-02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최낙균·이홍식 외
- 07-03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계에 대한 시사점 / 서진교 외
- 07-04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혜정·김혁황·김민성·박철형
- 07-05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송원호 외
- 07-06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채 욱 외
- 07-07 동북아지역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안형도·박제훈
- 07-08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양평섭·이장규·박현정·여지나·배승빈·조현준
- 07-09 한·중 금융·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 신규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형곤·오용협·원동욱·나승권
- 07-10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 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정성춘·이형근
- 07-11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 이순철·최윤정·정재완·Prabir De
- 07-12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이재영·채 욱·한홍렬·신현준

- 07-13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對)개도국 적용 가능성 /  
박복영 · 채 욱 · 이제민 · 이 근 · 이상철
- 06-01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채 욱 · 김세원 · 유재원 외
- 06-02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 김홍종 · 신정완 · 이상호
- 06-03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  
권 율 · 김한성 · 박복영 · 황주성 · 홍수연
- 06-04 DDA 주요 의제별 평가와 대응전략 /  
서진교 · 송백훈 · 송영관 · 정지원 · 박지현 · 이창수
- 06-05 APEC 무역원활화의 정책과제 및 파급효과 /  
김상겸 · 박성훈 · 박인원 · 박순찬
- 06-06 서비스분야 외국인직접투자 특성별 성과 분석과 정책과제 /  
이성봉 · 윤미경 · 현혜정
- 06-07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  
이홍식 · 강성진
- 06-08 금융허브 기반구축을 위한 파생금융시장 활성화방안 /  
오용협 · 조종화 · 윤덕룡 · 송원호 · 이호진 · 이인형 · 진 익
- 06-09 헤지펀드에 대한 주요국 규제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  
이호진 · 송원호 · 장국현 · 정삼영
- 06-10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변화와 외자기업의 대응전략 /  
박윌라 · 박현정 · 이 근 · 은종학
- 06-11 중국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  
이장규 · 이인구 · 여지나 · 조현준
- 06-12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장성춘 · 김양희 · 이홍배 · 이형근 · 김은지
- 06-13 러시아의 동부지역 개발 전략과 한국의 참여 확대방안: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  
이재영 · 이철원 · 신현준 · Victor Kalashnikov
- 06-14 인도 진출 한국기업의 경영실태 및 현지화 전략 연구 /  
이순철 · 정재완 · 최윤정 · 오민아

■ 2007 중장기  
통상전략 연구

- 06-15 고유가시대의 중동경제와 대중동 경제협력 확대방안 /  
박복영 · 황주성 · 박철형
- 06-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 사례와 시사점 /  
김원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곽재성
- 06-17 지역무역협정에 따른 생산성 효과분석 /  
이홍식 · 신관호 · 이종화 · 김형주
- 07-0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중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 07-02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화권 /  
양평섭 · 여지나 · 박현정 · 배승빈
- 07-03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 07-04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ASEAN /  
권율 · 정재완 · 이재호
- 07-05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대양주 /  
김한성 · 배희연
- 07-06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인도 /  
이순철 · 최윤정
- 07-07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동 /  
박복영 · 박철형
- 07-08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아프리카 /  
박영호 · 허윤선
- 07-09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북미 /  
이준규 · 김종혁 · 교회채 · 오민아
- 07-10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  
권기수 · 김진오 · 박수완 · 김원호
- 07-11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EU /  
김박수 · 홍유수 · 이철원 · 김균태 · 오태현

■ 지역연구시리즈

- 07-12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러시아 / 이재영·한종만·성원용·이광우
- 07-13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 이재영·신현준 편저
- 07-01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박상남
- 07-02 한국의 중장기 통상전략의 정치경제와 소프트웨어 통상 전략 / 이 근
- 07-03 주요 선진국의 대중국 경제협력 현황과 통상전략 / 최의현·김완중
- 07-04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 정 훈
- 07-05 India's Economic Cooperation with Partner Countries: Current Status and Potentials / Anjan Roy
- 07-06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향 / 인남식
- 07-07 아프리카 빈곤대책으로서의 농촌개발: 한국 농촌개발 경험의 전수를 중심으로 / 전승훈·허길행·유철·최미애
- 07-08 EU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안덕근
- 07-09 중국의 대북미 외교안보정책과 통상전략 / 주재우·김민수
- 07-10 일본의 대북미 통상전략 분석 / 정 훈
- 07-11 차베스 에너지정책의 형성배경 및 전망 / 임배진
- 07-12 우리나라 기업의 브라질 진출 확대와 교민 활용방안 연구 / 김영철
- 07-13 페론이즘의 변천과 아르헨티나 경제모델의 평가와 전망 / 하상섭
- 07-14 볼리비아의 자원민족주의와 천연가스산업 재편 전개 / 이상현
- 07-15 주요국의 대러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한종만

07-16 주요국의 대중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  
박상남 · 강명구

■ 무역투자연구시리즈

07-01 한·중 FTA 반덤핑분야: 제도 및 예상 쟁점 /  
정지원 · 박혜리 · 여지나

07-02 한·중 FTA 보건의료 서비스 예상 쟁점 및 기대효과  
분석 / 성한경 · 강준구 · 배승빈

07-03 한·중 FTA 지식재산권 분야의 이슈 점검 /  
조미진 · 엄부영 · 박현정

■ 동북아연구시리즈 /  
CNAEC Research Series

06-01 한·중·일 FTA의 수산부문 효과와 대응방안 / 김남두

06-02 Regional Trade in Northeast Asia: Why do Trade  
Costs Matter? / Prabir De

06-03 Bankruptcy Procedures and the Efficiency of  
Corporate Debt Restructuring in Korea and Japan /  
Kenya Fujiwara

06-04 Analysis on the Issues of and Prospects for a  
China- Korea FTA / Zhang Jianping

■ KIEP-KOTRA  
유망국가산업연구

07-01 러시아의 주요 산업 / 신현준 · 이광우 · 김정훈

07-02 멕시코의 주요 산업 / 김진오 · 유성준

07-03 베트남의 주요 산업 / 정재완 · 김동현 · 박근형

07-04 브라질의 주요 산업 / 권기수 · 지윤정

07-05 알제리의 주요 산업 / 박영호 · 박범준

07-06 이집트의 주요 산업 / 박철형 · 권세영

07-07 인도의 주요 산업 / 최윤정 · 박민준 · 김정현

■ 세미나자료모음

- Africa in the World Economy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Global Imbalances and the US Debt Problem:  
Should Developing Countries Support the US Dollar?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n eds.
- Emerging Financial Risk in East Asia /  
Doo Yong Yang ed.

■ 연구자료

- 07-01 2007 세계경제 지역별 10대 이슈 /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 07-02 중앙아시아의 부상과 한국의 대응전략 / 이재영 · 박상남
- 07-03 동북아 대도시권 동태적 경쟁력의 비교연구 /  
김원배 · 안형도 · 박세훈 · 정옥주 · 이성수
- 07-04 중국의 WTO 가입 5주년 결산: 중국의 대외경제정책과  
한·중 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 양평섭 · 구은아
- 07-05 Global Imbalances and Developing Countries:  
Remedies for a Failing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  
Jan Joost Teunissen and Age Akkerman eds.
- 07-06 한·뉴질랜드 경험방향과 통상전략 / 김한성 · 배희연
- 07-07 원조모형의 국제비교와 시사점 / 박복영
- 07-08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체계로서 외국인지분제한 제  
도의 실효성 검토 / 송영관 · 안준성
- 07-09 한중일 3국의 하이테크제품 교역 특징 및 수출경쟁력  
패턴 분석 / 방호경
- 07-10 미국 민주당의 경제정책방향 및 시사점 / 이준규 · 고희재

- 07-11 EU의 세계통상전략 / 김세원
- 07-12 FTA 협상 관련 한국의 전자상거래 주요 쟁점 및 대응 / 윤창인
- 06-01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 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 김정곤
- 06-02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열린경제 / 강인수 · 한홍렬 · 김관호 외
- 06-03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협력경제 / 박성훈 · 박순찬 · 정재완 외
- 06-04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통상거버넌스 / 최병일 외
- 06-05 선진통상국가 실현을 위한 중장기 통상전략연구: 선진경제의 통상정책과 시사점 / 유진수 외
- 06-06 한·미 FTA 투자분야 주요 쟁점이슈와 평가 / 이성봉 · 김관호 · 이준규 · 현혜정

■ Working Papers

- 07-01 Determinants of Intra-FDI Inflows in East Asia: Does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ffect Intra-FDI? / Jung Sik Kim and Yonghyup Oh
- 07-02 Financial Liberalization, Crises, and Economic Growth / Inkoo Lee and Jonghyup Shin
- 07-03 The Determinants of Cross-Border M&As: the Role of Institutions and Financial Development in Gravity Model / Hea-Jung Hyun and Hyuk Hwang Kim
- 07-04 A Roadmap for East Asian Monetary Integration: The Necessary First Step / Kyung Tae Lee and Deok Ryong Yoon
- 07-05 An Empirical Assessment of a Trade-off Between FDI and Exports / Hongshik Lee and Joon Hyung Lee

- 07-06 Understanding Wage Inequality: Trade, Technology, and Location / Chul Chung and Bonggeun Kim
- 07-07 What Kinds of Countries Have More Free Trade Partner Countries?: Count Regression Analysis / Jung Hur and Backhoon Song
- 07-08 Experimental Economic Approaches on Trade Negotiations / Hankyoung Sung
- 06-01 Investment Stagnation in East Asia and Policy Implications / Hak K. Pyo
- 06-02 Does FDI Mode of Entry Matter for 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eong-Bong Lee and Mikyung Yun
- 06-03 Regional Currency Unit in Asia: Property and Perspective / Woosik Moon, Yeongseop Rhee, and Deokryong Yoon

■ 단행본

-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의 방향과 과제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싱가포르 FTA의 주요내용 / 외교통상부·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EFTA FTA의 주요 내용 / KIEP·외교통상부
- 비교방법론적 분석을 통해서 본 동북아 경제통합 / 김홍중·손병해 공편저
- 한·미 FTA 바로알기 2006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성춘(鄭成春)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 대학원 졸업

일본 히토쓰바시 대학(一橋大學) 경제학 연구과 졸업, 경제학 박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現, E-mail: jung@kiep.go.kr)

저서 및 논문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공저, 2006)

『일본정부 및 기업의 지식재산전략의 특징과 시사점』 (2005) 외

이형근(李炯根)

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과정 수료

일본 아시아경제연구소(AIDE) 방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現, E-mail: hklee@kiep.go.kr)

저서 및 논문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공저, 2006)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공저, 2005) 외

김은지(金恩志)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졸업

한양대학교 국제지역학 박사과정 재학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現, E-mail: eunji@kiep.go.kr)

저서 및 논문

『일본경제의 구조변화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공저, 2006)

『일본·ASEAN FTA 추진 현황과 전망』 (공저, 2004) 외

연구자료 07-14

한국의 주요국별 · 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일본

2007년 12월 25일 인쇄

2007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李景奭**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대표 이호열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ISBN 978-89-322-2125-0 94320  
978-89-322-2064-2(세트)

정가 7,000원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IEI) 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란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 관 회 원

개 인 회 원

연 구 자 회 원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